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의 변화와 대북 · 통일정책의 재정립-

- 일시 2012년 9월 26일 (수) 10:00~16: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 <일정 및 내용>

- 09:40~10:00      등록
- 10:00~10:10      개회사 박명규 (IPUS 원장)
- 10:00~12:10      **북한인식 · 통일인식 · 대외인식**  
사회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통일 및 북한인식의 변화 : 불안한 복귀, 천정을 치고 내려오다  
         김병로 (IPUS HK교수)  
         다문화의식과 통일의식의 변화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의 부상과 통일 · 대외의식의 변화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토론 박영호 (통일연구원)
- 12:10~13:40      점심
- 13:40~15:50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 · 통일정책의 재정립**  
사회 : 박명규 (IPUS 원장)  
발표 대북정책 : 핵문제와 남북협력 분리?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남남갈등 : 변화와 지속?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주철 (KBS남북교류협력단),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 13:50~16:00      폐회사



## <목 차>

### 1 제1장 조사 목적

#### 북한인식·통일인식·대외인식

- 11 통일 및 북한인식의 변화 : 불안한 복귀, 천정을 치고 내려오다  
김병로 (IPUS HK교수)
- 39 다문화의식과 통일의식의 변화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5 국의 부상과 통일·대외의식의 변화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통일정책의 재정립

- 97 대북정책 : 핵문제와 남북협력 분리?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 141 남남갈등 : 변화와 지속?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 163 부록  
2012년 한국인의 역사인식 - 5.16, 10월유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



# 제1장 조사 목적

## I.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의식변화를 추적하고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 비전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 II.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li> <li>○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li> <li>○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li> <li>○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li> <li>○ 대북 사안별 시급성</li> <li>○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li> </ul>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이익 정도 (남한/자기 자신)</li> <li>○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li> <li>○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li> <li>○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2009-2011)</li> <li>○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li> </ul>
북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li> <li>○ 남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08)</li> <li>○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2007-2008)</li> <li>○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2009-2012)</li> <li>○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li> <li>○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li> <li>○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li> <li>○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li> <li>○ 북한 사회 인지도</li> <li>○ 북한 관련 경험 유무</li> <li>○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li> <li>○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li> <li>○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li> </ul>

구 분	내 용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북 지원의 적절성 (줄여야 할 시 그 이유)</li> <li>○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li> <li>○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li> <li>○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2008-2012)</li> <li>○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li> <li>○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2008-2012)</li> <li>○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li> <li>○ 금강산 관광개 피살사건의 책임 (2008)</li> <li>○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li> </ul>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li> <li>○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li> <li>○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li> <li>○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li> </ul>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li> <li>○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li> <li>○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li> <li>○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li> <li>○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li> <li>○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li> <li>○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li> <li>○ 주변국 비협조 시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2007)</li> <li>○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li> <li>○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2011-2012)</li> </ul>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10)</li> <li>○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li> <li>○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li> <li>○ 19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견해 (2007-2008)</li> <li>○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li> <li>○ 반미정서 우려 수준 평가 (2007-2010)</li> </ul>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li> <li>○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li> <li>○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li> <li>○ 한반도 전쟁 가능성 (2011-2012)</li> <li>○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신뢰도 (2010-2012)</li> <li>○ 천안함 사건 해결 방안 적절성 평가 (2010)</li> <li>○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천안함 사건의 원인의 일부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2010)</li> <li>○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li> <li>○ 정치적 성향</li> <li>○ 지지정당 (2011-2012)</li> <li>○ 2007년 대선 시 투표한 후보 (2007-2010)</li> <li>○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 (2010-2012)</li> <li>○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2011-2012)</li> <li>○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2011-2012)</li> <li>○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012-2012)</li> <li>○ 다문화 관련 인식 (2012)</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응답자 특성 (Demographic Varia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지역크기, 성, 연령, 종교,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가구소득계층, 사회계층, 생활수준 개선도,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역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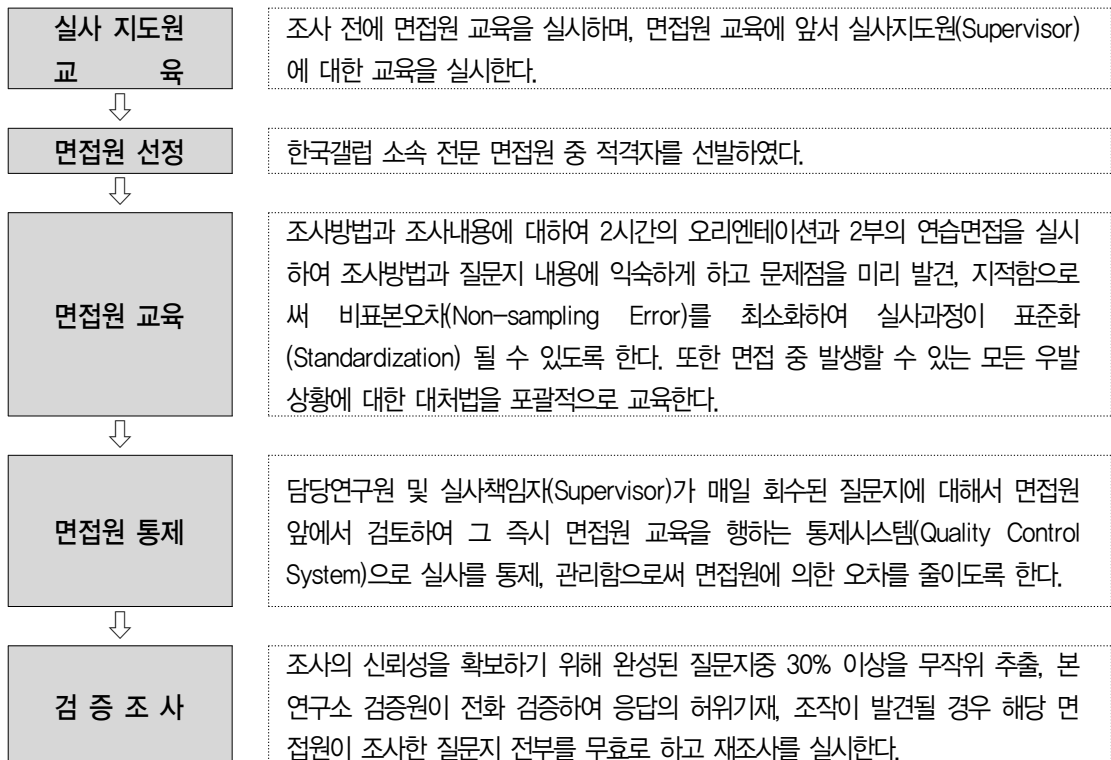
### III. 조사의 기본 설계

####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 집 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
2) 표 본 크 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주1>	다단계무작위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4) 표 본 오 차	± 2.8% (95% 신뢰수준)

(주1) 2012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16개시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하였으며, 표본추출은 해당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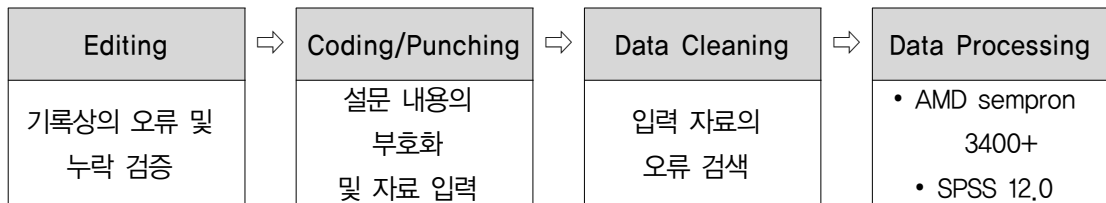
### 3.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 사 방 법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12년 7월 5일 ~ 7월 31일 (26일간)

## IV. 자료 처리

### 1.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AMD sempron 3400+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 V.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표본 : 사례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200 (100%)	1,213 (100%)	1,203 (100%)	1,200 (100%)	1,201 (100%)	1,200 (100%)	
지역별	수도권	591 (12.3%)	575 (47.4%)	593 (49.3%)	590 (49.2%)	606 (50.5%)	608 (50.7%)
	중부권	118 (2.5%)	128 (10.6%)	118 (9.8%)	118 (9.8%)	117 (9.7%)	116 (9.7%)
	호남권	119 (2.5%)	130 (10.7%)	119 (9.9%)	119 (9.9%)	116 (9.7%)	115 (9.6%)

성별	영남권	323 (6.7%)	330 (27.2%)	324 (26.9%)	324 (27%)	314 (26.1%)	312 (26.0%)
	강원	36 (0.7%)	36 (3%)	36 (3%)	36 (3%)	35 (2.9%)	36 (3.0%)
	제주	13 (0.3%)	14 (1.2%)	13 (1.1%)	13 (1.1%)	13 (1.1%)	13 (1.1%)
	남자	603 (50.3%)	605 (49.9%)	604 (50.2%)	603 (50.3%)	611 (50.9%)	610 (50.8%)
	여자	597 (49.8%)	608 (50.1%)	599 (49.8%)	597 (49.8%)	590 (49.1%)	590 (49.2%)
연령별	19~29세	302 (6.3%)	269 (22.2%)	303 (25.2%)	303 (25.3%)	259 (21.6%)	255 (21.3%)
	30대	314 (6.5%)	302 (24.9%)	313 (26%)	312 (26%)	290 (24.1%)	282 (23.5%)
	40대	305 (6.3%)	348 (28.7%)	305 (25.4%)	305 (25.4%)	306 (25.5%)	307 (25.6%)
	50세이상	279 (5.8%)	294 (24.2%)	282 (23.4%)	280 (23.3%)	346 (28.8%)	356 (29.7%)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1 (3.2%)	150 (12.4%)	132 (11%)	104 (8.7%)	112 (9.4%)	106 (8.8%)
	고졸	505 (10.5%)	567 (46.7%)	492 (40.9%)	462 (38.5%)	510 (42.5%)	554 (46.2%)
	대재이상	537 (11.2%)	496 (40.9%)	579 (48.1%)	634 (52.8%)	565 (47.0%)	538 (44.8%)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4%)	33 (2.7%)	26 (2.2%)	32 (2.7%)	16 (1.4%)	28 (2.3%)
	자영업	291 (24.3%)	220 (18.1%)	261 (21.7%)	260 (21.7%)	335 (27.9%)	341 (28.4%)
	블루칼라	235 (19.6%)	243 (20%)	250 (20.8%)	233 (19.4%)	247 (20.6%)	316 (26.3%)
	화이트칼라	217 (18.1%)	239 (19.7%)	228 (19%)	239 (19.9%)	252 (21.0%)	194 (162.2%)
	전업주부	237 (19.8%)	311 (25.6%)	248 (20.6%)	247 (20.6%)	211 (17.6%)	187 (15.6%)
	무직/기타	187 (15.6%)	167 (13.8%)	190 (15.8%)	189 (15.8%)	140 (11.6%)	134 (11.2%)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79 (5.8%)	235 (19.4%)	224 (18.6%)	202 (16.8%)	207 (17.2%)	150 (12.5%)
	200~299만원	370 (7.7%)	400 (33%)	354 (29.4%)	315 (26.3%)	287 (23.9%)	311 (25.9%)
	300~399만원	297 (6.2%)	336 (27.7%)	352 (29.3%)	332 (27.7%)	384 (31.9%)	373 (31.1%)
	400만원이상	246 (5.1%)	224 (18.5%)	268 (22.3%)	348 (29%)	311 (25.9%)	366 (30.5%)
	모름/무응답	8 (0.2%)	18 (1.5%)	5 (0.4%)	3 (0.3%)	13 (1.1%)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5.3%)	289 (23.8%)	299 (24.9%)	398 (33.2%)	335 (27.9%)	328 (27.3%)
	중도	568 (47.3%)	583 (48.1%)	581 (48.3%)	541 (45.1%)	578 (48.1%)	291 (49.3%)
	보수적	327 (27.3%)	341 (28.1%)	323 (26.8%)	261 (21.8%)	289 (24.0%)	281 (23.4%)

## 【 별첨1.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

▣ 가구소득수준 ▣	200만원 미만	150	12.5
	200~299만원	311	25.9
	300~399만원	373	31.1
	400만원 이상	366	30.5
▣ 지역 별 ▣	수 도 권	608	50.7
	총 청 권	116	9.7
	호 남 권	115	9.6
	영 남 권	312	26.0
	강 원	36	3.0
	제 주	13	1.1
▣ 지역 크기 ▣	대 도 시	565	47.1
	중· 소 도 시	533	44.4
	읍 / 면	102	8.5
▣ 정 치 적 성 향 ▣	진 보 적	328	27.3
	중 도	591	49.3
	보 수 적	281	23.4
▣ 종 교 별 ▣	불 교	219	18.3
	기 독 교	298	24.8
	천 주 교	87	7.3
	기 타	9	0.8
	종교 없음	571	47.6
	무름/무응답	16	1.3

### 1. 표본 오차(Sampling Error) 공식

- 표본추출 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SE = \pm 1.96 \sqrt{\frac{P(100 - 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 2.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00	1,200	2,000	3,000
	± %	± %	± %	± %	± %
50	4.4	3.1	2.8	2.2	1.8
40 or 60	4.3	3.0	2.8	2.1	1.8
30 or 70	4.0	2.8	2.6	2.0	1.6
20 or 80	3.5	2.5	2.3	1.8	1.4
10 or 90	2.6	1.9	1.7	1.3	1.1

\* 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200이므로 최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이내이다





# 북한인식 · 통일인식 · 대외인식

통일 및 북한인식의 변화 : 불안한 복귀, 천정을 치고 내려오다  
김병로 (IPUS HK교수)

다문화의식과 통일의식의 변화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의 부상과 통일 · 대외의식의 변화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토론〉  
박영호 (통일연구원)



# 통일 및 북한인식의 변화: 불안한 복귀, 천정을 치고 내려오다

김 병 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I. 문제제기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 안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이나 위협적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2011.12)과 김정은 정권의 등장, 태양절 100주년에 즈음한 장거리 로켓 발사(2012.4) 등의 사건들이 한국인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나 남북한이 참여하게 대립하던 심리전의 상황과는 달리 심각한 위협이나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정부가 평상체제를 유지하도록 상황을 관리한 결과 국민들도 북한발 긴장을 지난 몇 년에 비해 덜 느끼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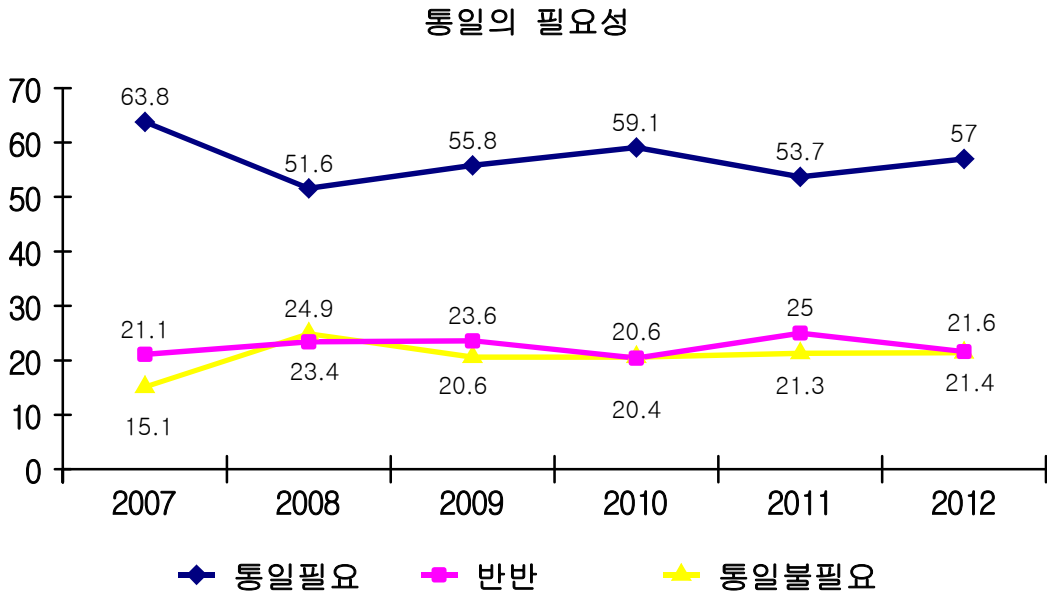
## Ⅱ. 통일외식

###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필요성 : 통일외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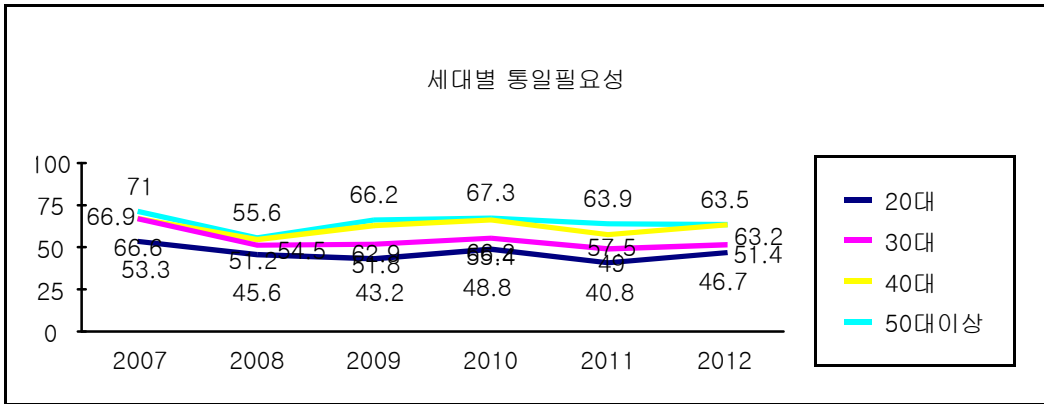
2012년 국민들의 통일외식은 작년에 비해 3.3% 포인트 높아진 57.0%를 기록하였다. 즉 57%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4%,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1.6%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에 5.4% 포인트 하락한 이후 올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담론으로 정부의 통일공론화 사업이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약간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통일·대북 외식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화되었다. 올해 3.3% 포인트 증가한 이유가 정부의 통일담론 강화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발 안보불안이 큰 폭으로 해소된데 따른 반사효과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민들의 통일·대북 인식은 정부주도의 담론 확산을 통한 방법 보다는 남북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통일공론화 사업도 대북정책의 집행과 병행하여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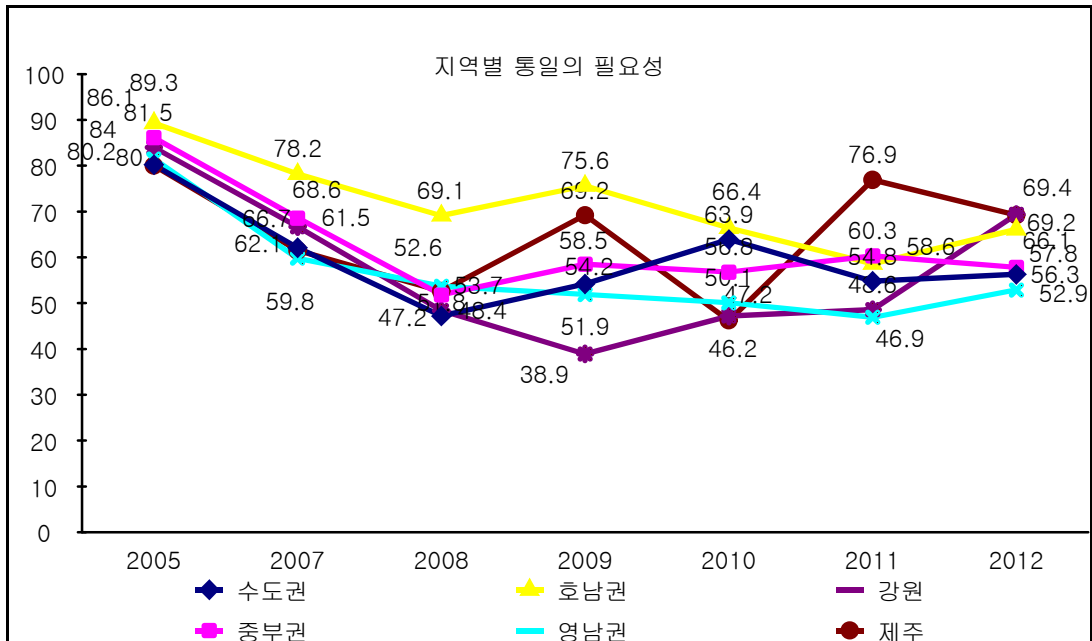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62.3%인 반면에 여자는 51.5%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통일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의 격차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세대별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더 높게 응답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대는 46.7%, 30대는 51.4%, 40대는 63.2%, 50대 이상은 63.5%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할 때 50대 이상 연령층의 통일의식은 0.4% 포인트 하락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와 40대는 각각 5.9%, 5.7%가 높아져 올해 통일의식 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림 2〉 세대별 통일필요성



지역별 차이를 보면, 호남권(66.1%)과 제주(69.2%), 강원(69.4%)의 통일 필요성 응답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반면, 충청권(57.8%), 수도권(56.3%), 영남권(52.9%)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교하면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일의식이 높아진 반면, 충청권은 60.3%→ 57.8%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림 3〉 지역별 통일필요성



지역별 차이를 보면, 호남권(66.1%)과 제주(69.2%), 강원(69.4%)의 통일 필요성 응답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반면, 충청권(57.8%), 수도권(56.3%), 영남권(52.9%)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교하면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일의식이 높아진 반면, 충청권은 60.3%→57.8%로 오히려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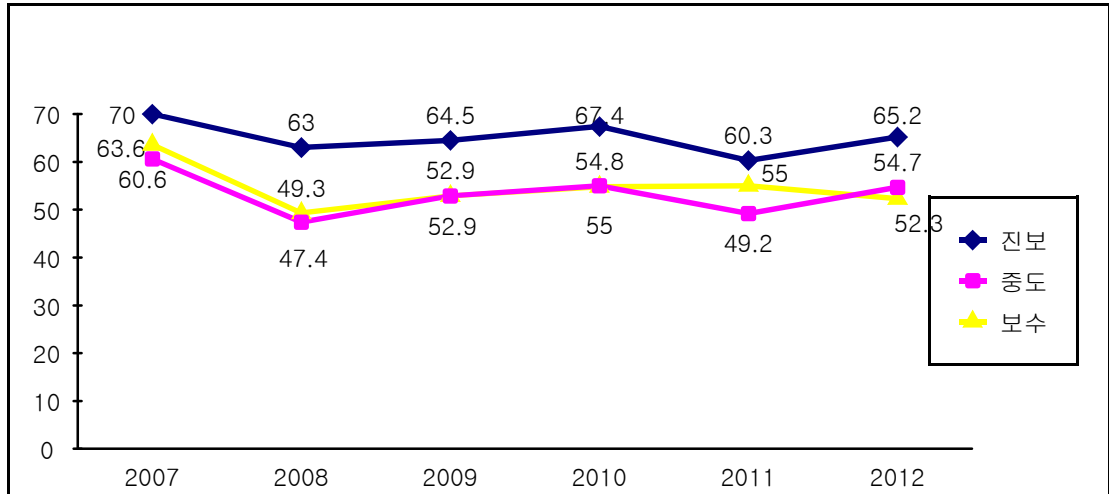
지역별 변화 가운데 충청권은 변화의 폭이 독특하게 나타났다. 즉 다른 지역에서는 통일 필요성 의식이 모두 상승한데 비해 충청권은 오히려 하락하는 특이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호남권, 수도권에서 통일의지가 높아진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영남권에서도 2012년에는 46.9%→52.9%로 높아졌으나 충청권에서는 60.3%→57.8%로 통일의지가 낮아졌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된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불안정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통일의식의 지역별 차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져 2009년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좁혀지고 있다. 지역별 차이가 좁혀진 배경에는 영남권의 통일 필요성 의식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영남권의 통일 필요성 의식이 상승함으로써 통일필요에 대한 의견이 이전보다 수렴하는 현상이 발전한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고조되었던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으나, 군사적 위기를 겪으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전쟁방지' 라는 응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아졌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성향 별로 보면,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진보와 중도에서는 각각 60.3%→65.2%, 49.2%→54.7%로 약 5% 포인트씩 높아진 반면, 보수는 55%→52.3%로 보수의 통일의지는 오히려 낮아졌다.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진보와 중도는 전쟁방지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낀 반면, 보수는 이러한 군사충돌의 경험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강화시켜 통일의식을 더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작년에 보수와 진보간의 통일의식 차이가 가장 좁혀졌으나 올해는 두 이념집단간 통일의식 차이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다.

〈그림 4〉 정치성향별 통일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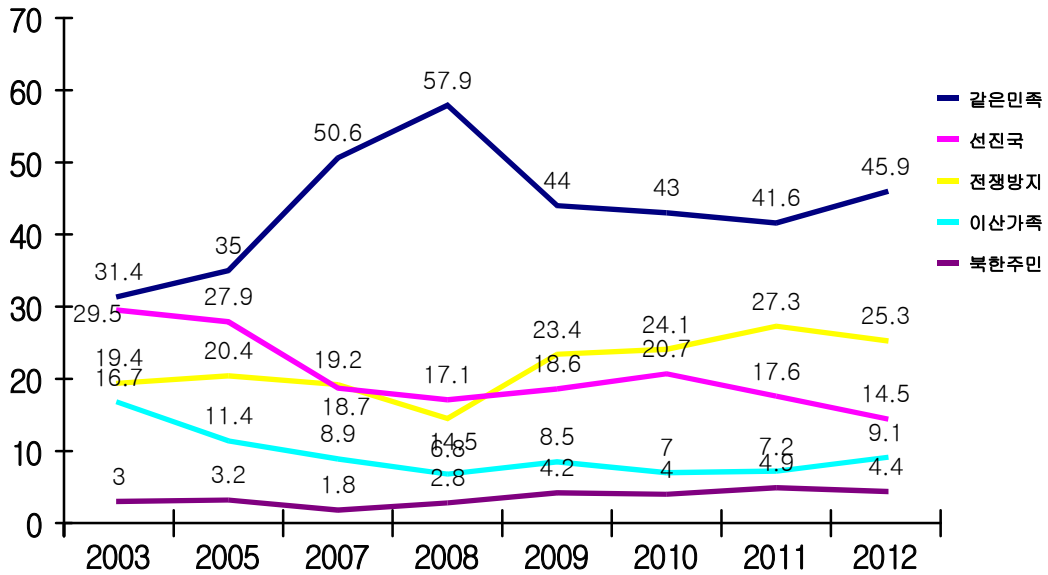


## 2) 통일의 이유 : 전쟁방지 비중 증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 까’ (45.9%)를 꼽아 ‘민족의식’ 이 여전히 통일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전쟁방지’ (25.3%)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 (14.5%), ‘이산가족 고통해소’ (9.1%),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4%)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4.3% 포인트 증가하였고, ‘이산가족 고통해소’ 라는 응답도 1.9%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전쟁방지’, ‘선진국’ 등의 응답은 감소하였다. ‘전쟁방지’ 에 대한 응답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응답 역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지속되던 전쟁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반영하는 의식 변화라 할 수 있다.

## 〈그림 5〉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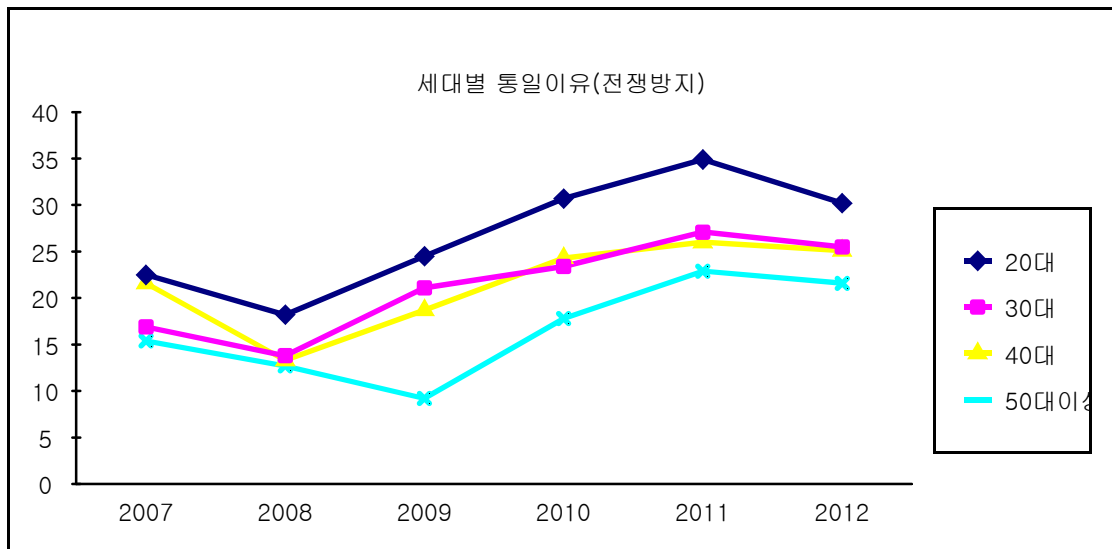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같은 민족 때문’ 응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57.6%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41.3%, 43.3%로 중간이었고, 20대는 37.3%로 가장 낮았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대 연령층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5%→37.3%로 7.8% 포인트 상승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쟁방지’와 ‘선진화’ 이유에 대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전쟁방지’ 응답에서 20대는 30.2%로 30대(25.5%), 40대(25.1%), 50대이상(21.6%)에 비해 높았고, ‘선진화’ 응답에서도 18.4%로 30대(16.0%), 40대(16.6%), 50대이상(8.7%)에 비해 높았다. 이는 20대 젊은층이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보

여준다. 즉 2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민족의 틀로 남북관계를 보지 않고 전쟁의 방지와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매우 실용적이며 독립국가적 사고의 틀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보면 20대의 연령층에서 ‘전쟁방지’ 라는 응답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올해 20대 연령층이 안보불안과 군사적 긴장감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에 대한 세대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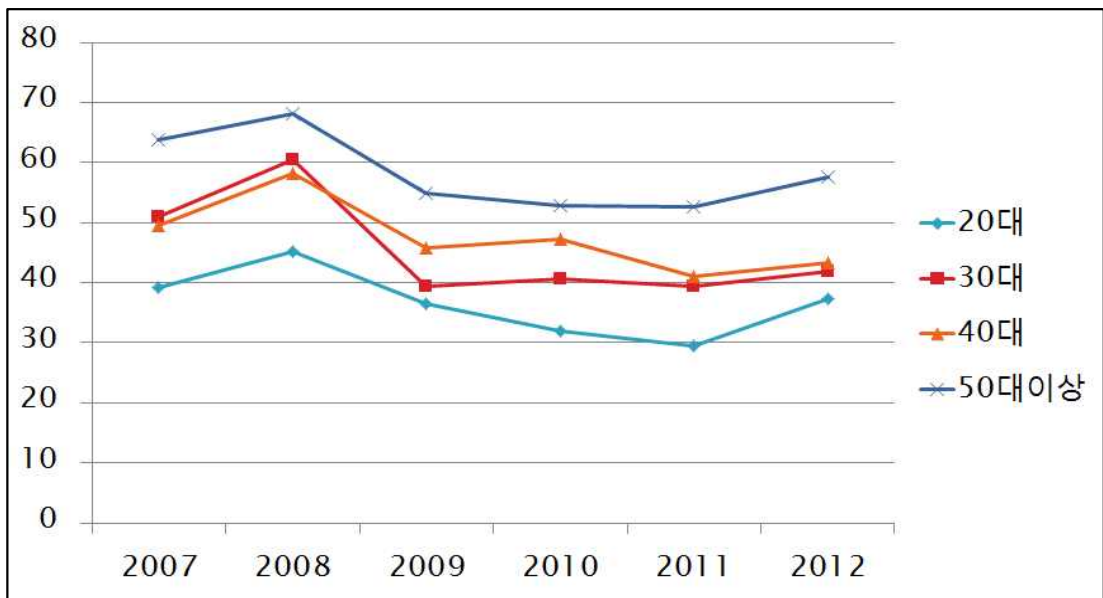
## 2. 통일에 대한 기대

### 1)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51.6%가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응답한 반면, 48.4%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6.0%만이 “이익이 될 것” 이라고 대답한 반면, 74.0%는 “이

익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답하였다. 통일의 집합적 이익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작년에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던 반면, 올해는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8〉 통일의 기대이익 : 집단과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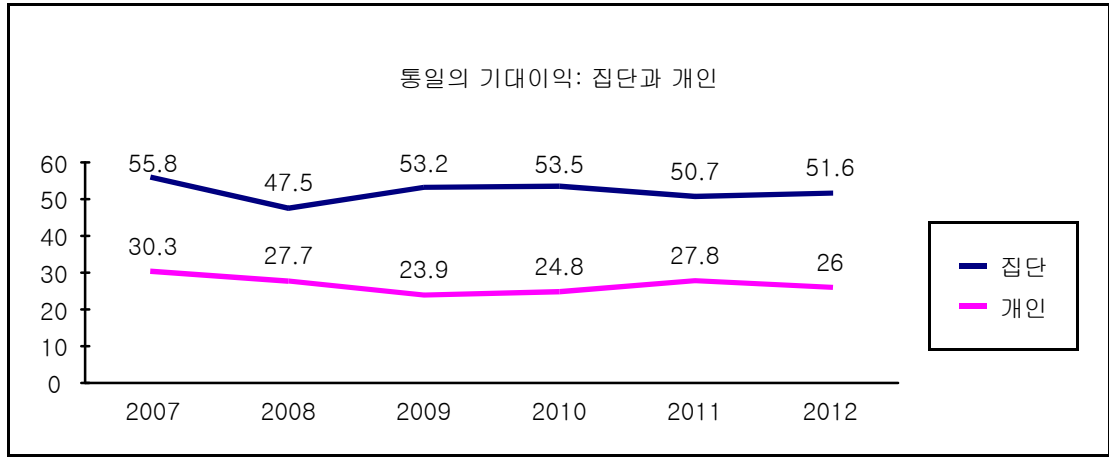
통일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개인적 기대감에서는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통일세 등 통일비용 분담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기대감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이 가져올 지리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이익이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개개인의 삶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통일정책을 준비해야만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 남한체제 선호 감소, 절충형 및 독립체제 희망 증가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는 응답은 37.7%,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는 15.1%,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는 응답은 3.0%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남한 현 체제 유지' 응답은 49.0%→44.3%로 4.7% 포인트 감소한 반면, '남북한 체제 절충' 과 '남북한 독립체제 유지' 는 각각 2.3%, 2.7% 포인트씩 증가하였다. 즉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을 희망하거나 남북한이 각각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의견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 보다는 연합제 또는 연방제와 같은 방식의 통일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작년에는 그 이전에 비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흡수통일적 사고가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다시 반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기저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28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함으로써 남한방식의 체제를 북한에 확대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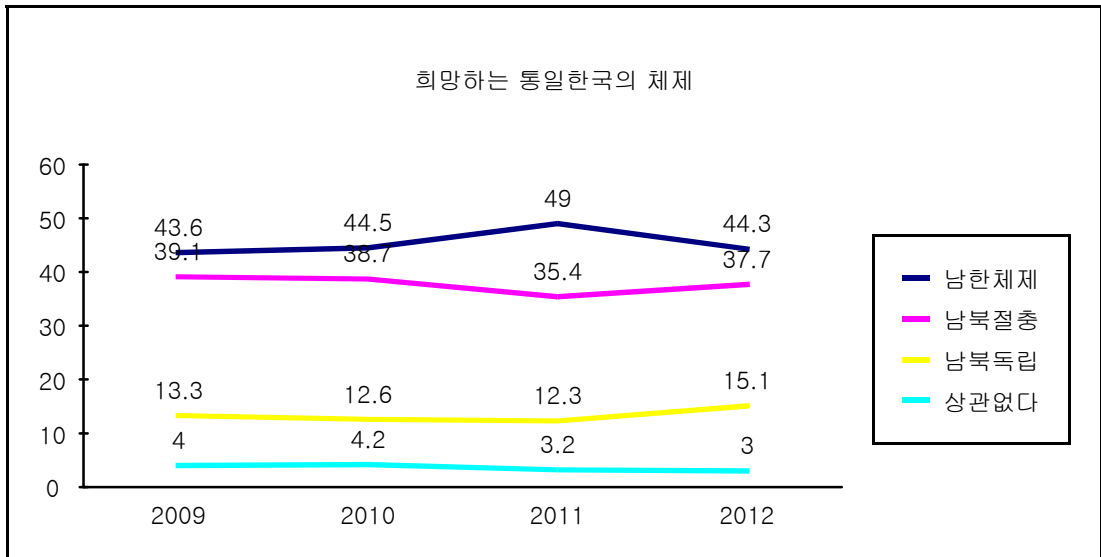


### Ⅲ. 북한인식

####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1%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1.3%, 지원대상 15.8%, 적대대상 10.9%, 경쟁대상 4.8%로 각각 응답했다.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협력대상’ 이라는 응답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가파르게 상승하던 ‘적대대상’ 이라는 인식은 2012년에 6%나 하락하였으며 감소한 숫자만큼 ‘경계대상’ 쪽으로 옮겨갔다. 2008년 이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나 올해에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여 한국인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북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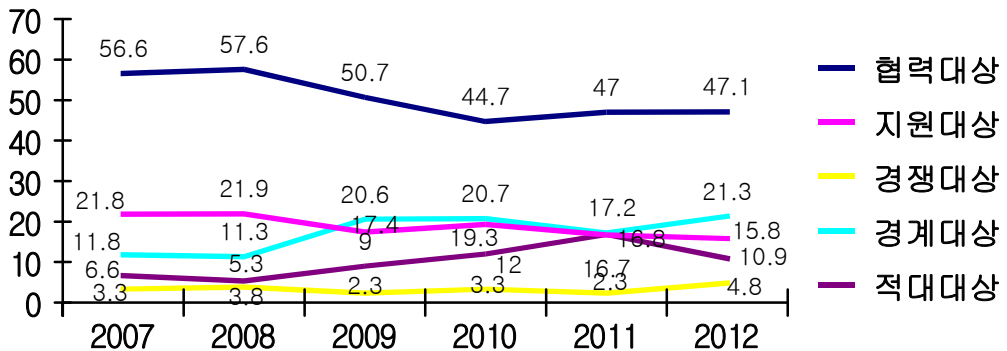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비율이 2007년과 2008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7.1%를 유지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량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대상’ 인식이 감소한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고조되었던 위기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불안이 예상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의 등장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고조되었던 정국을 일시에 다른 안정국면을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과 리설주의 파격 등장, 장성택의 중국방문 등 북한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서 ‘적대’에서 ‘경계’로 시선이 옮겨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험에서 생겨난 학습효과도 크게 작용하였다. 지난 15~20년 사이에 김일성 사망과 남북교류를 경험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이 곧바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한 결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국민들도 남북교류의 경험과 정보에 근거하여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의식이 감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희망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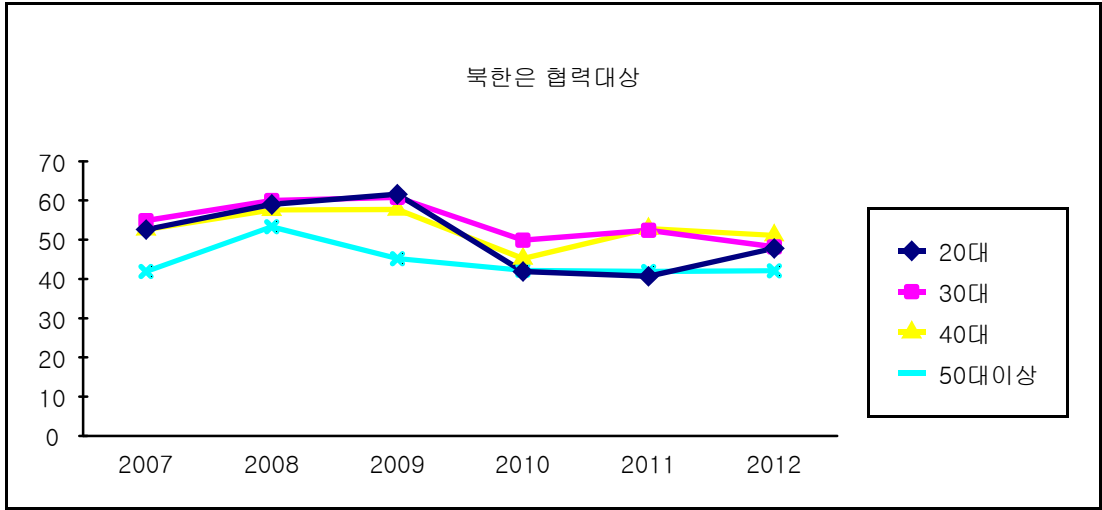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작년에 비해 20대가 ‘협력대상’ 인식 쪽으로 이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작년에는 30~40대와 20대·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50대와 20·30·40대의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20대가 40.7%에서 47.8%로 7.1% 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존의 50대 이상 그룹에서 벗어나 30·40대와 같은 부류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적대대상’ 인식이나 북한위기의식 등 여러 영역에서 20대가 30·40대 그룹에 합류하기보다는 50대 이상과 비슷한 대북인식을 갖고 있어서 20대의 대북인식 변화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쟁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가 11.8%로 적은 반면, 30,40,50대는 각각 16.7%, 15.3%, 18.5%로 많았고,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20대가 7.5%로 높은 반면 30,40,50대에서는 각각 3.9%, 4.9%, 3.7%로 낮았다.

〈그림 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북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작년과 비교할 때 16.8% → 10.9%로 낮아져 전반적으로 적대의식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20대 연령층이 적대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20대의 ‘적대대상’ 인식이 26% → 14.5%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즉 30대, 40대, 50대 이상은 각각 9.2%, 10.4%, 10.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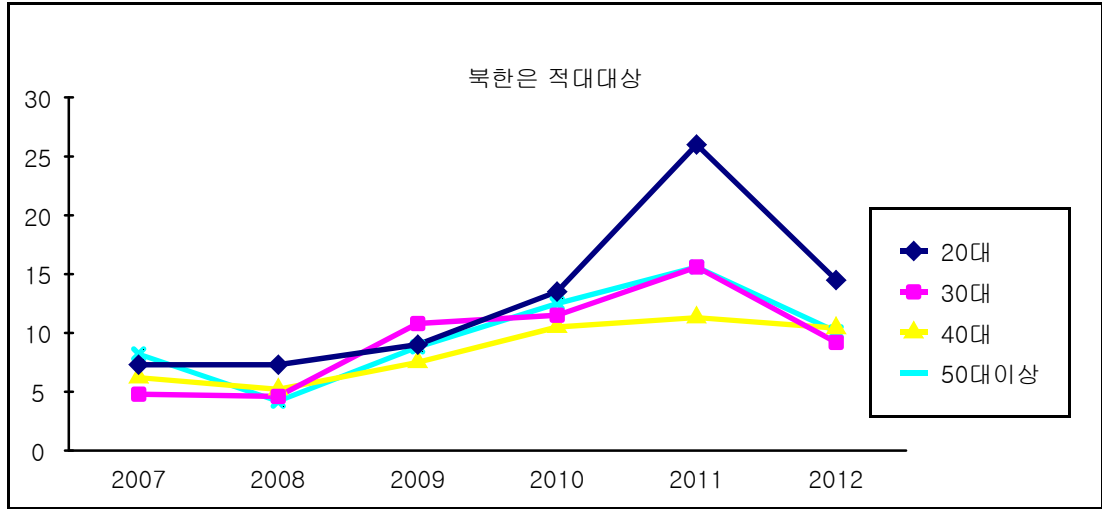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협력대상 인식에서 중졸(31.1%)<고졸(45.7%)<대졸(51.9%)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경계대상 인식에서 중졸이하가 36.8%로 고졸(22.7%)이나 대졸(16.7%)보다 14~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경계대상에서는 남성(19.8%)보다 여성(22.9%)이, 특히 전업주부(28.3%)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적대대상에서는 남성(13.4%)이 여성(8.3%)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 보는 인식이 수도권 47.7%, 충청권 39.7%, 호남권 53.9%, 영남권 45.8%, 강원 44.4%, 제주 61.5%로 나타났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충청권은 55.1%→39.7%로 15.4% 포인트가 줄어든 반면, 호남권은 50.0%→53.9%로, 영남권은 38.9%→45.8%로 각각 3.9%, 6.9% 포인트가 늘어났다. 또 ‘경계대상’ 이라는 응답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이 각각 20.2%, 26.7%, 27.8%인데 비해, 호남권은 7.8%로 현저히 낮았다. 호남권의 대북인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2012년의 전반적인 경향은 호남권이 2010년의 패턴으로 복귀하고 영남권의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높아졌으며, 충청권이 2010년 이전의 영남권과 비슷한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2010년에는 호남권이 북한을 ‘협력대상’ 과 ‘지원대상’ 으로 보는 시각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경계대상’ 의식에서는 낮았다.<sup>1)</sup> 2011년에는 호남권의 이러한 특성이 누그러진 반면 영남권의 대북 경계인식이 매우 높게 상승하였다.<sup>2)</sup> 호남권과 영남권의 이러한 대북의식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갈등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의식의 변형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매우 절박했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안정을 찾음으로써 작년의 이례적인 흐름이 다시 예년의 양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영남권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충청권은 ‘지원대상’ 및 ‘경계대상’ 인식에서 각각 12.9%, 26.7%로 영남권(13.1%, 27.6%)과 비슷하며 ‘협력대상’ 인식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대북인식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지원대상’ 인식의 비율이 높고, ‘경계대상’, ‘적대대상’ 의식 비율이 낮다. 작년과 비교할 때 진보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보수의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즉 ‘진보’는 ‘협력대상’ 인식 비율이 49.5%→50.9%, ‘경계대상’ 응

1) 2010년의 경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9.7%, 17.8%, 16.9%인데 비해, 호남권은 27.7%로 매우 높았고, ‘협력대상’ 응답에서도 수도권(49.5%), 중부권(43.2%), 영남권(34.6%)에 비해 높았다.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5.1%, 25.4%, 32.8%였는데 비해, 호남권은 1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2011년의 경우,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48.2%, 55.1%, 50.0%인데 비해, 영남권은 38.9%로 매우 낮은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15.0%, 17.1%, 14.9%인데 비해, 영남권은 23.1%로 높게 나타났다.

답이 12.5%→ 13.1%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보수’는 ‘협력대상’ 인식 비율이 44.5%→ 33.5%로 11% 포인트 낮아졌고, ‘경계대상’ 인식도 19.8%→ 33.5%로 13.7% 포인트나 높아졌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보수’의 대북인식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요동한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2012년에는 비판적, 부정적 대북인식을 다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와 대북인식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종교간 대북 인식이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대상’에서는 천주교가 55.2%로 불교(39.7%)와 기독교(49.7%), 무종교(47.3%)보다 높았으며, ‘적대대상’에서는 8.0%로 불교(11.4%), 기독교(10.4%), 무종교(11.0%)보다 낮았다. 반면 기독교는 ‘지원대상’에서 19.8%로 불교(17.4%), 천주교(13.8%), 무종교(13.7%)보다 높고, ‘경계대상’에서는 16.1%로 불교(24.7%), 천주교(18.4%), 무종교(23.3%)보다 낮았다.

## 2.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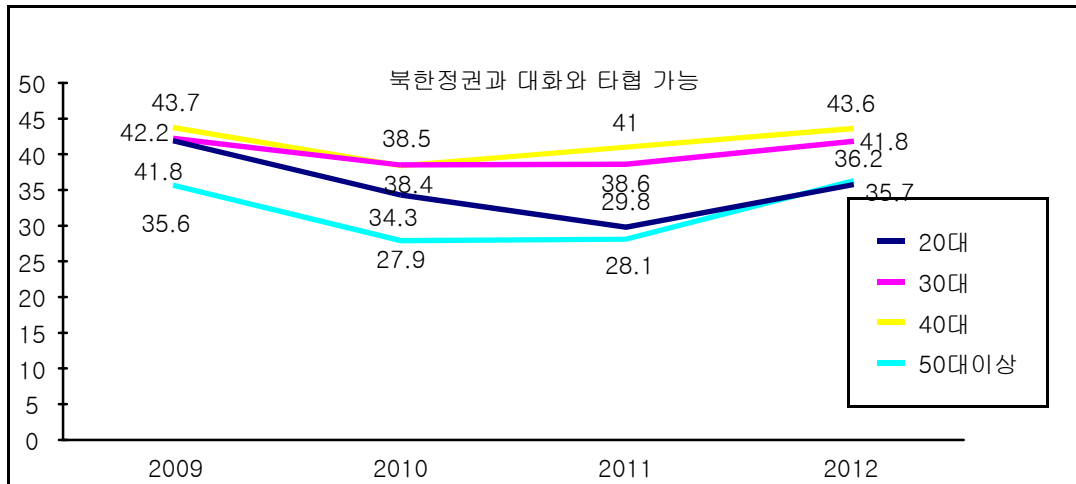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0.7%로 “가능하다” (39.3%)는 응답보다 1.5배가 많았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5.0%포인트 늘어났다.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40.9%(09년)→ 34.9%(10년)→ 34.3%(11년)→ 39.3%(12년)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불신이 커지다가 2012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5% 포인트가 상승하여 2009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능하다”는 신뢰가 각각 41.8%, 43.6%로 높았으며, 20대와 50대는 각각 35.7%, 36.2%로 낮았다. 대북 신뢰도 인식에서는 작년의 세대별 양상과 같이 30~40대와 20·50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30~40대가 20·50대에 비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대북 신뢰도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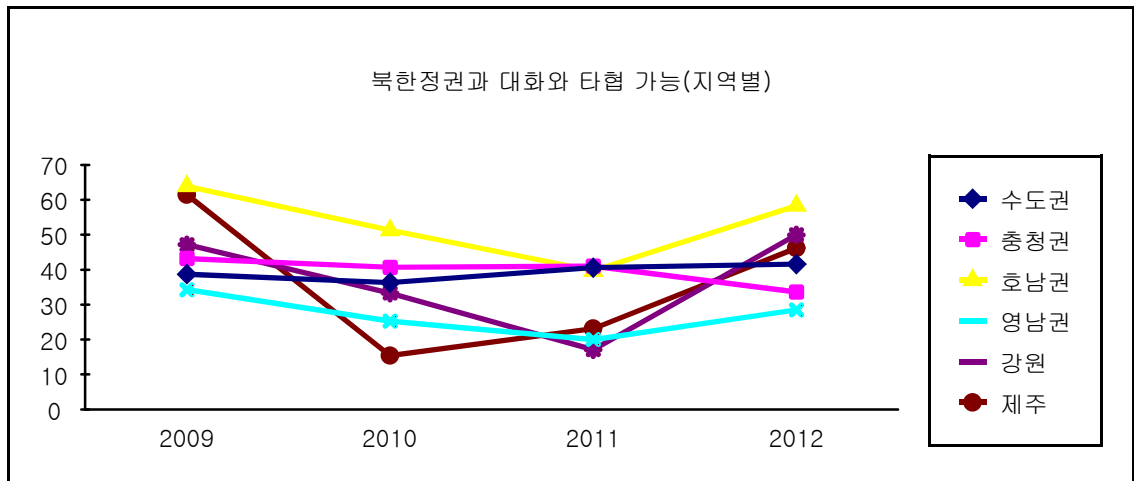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와 50대 이상이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더 많이 변화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할 때 두 집단간의 차이는 더 좁혀졌다.

〈그림 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는 응답이 각각 호남권(58.3%)> 수도권(41.6%)> 충청권(33.6%)> 영남권(28.5%)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호남권은 39.7%→ 58.3%로 18.6% 포인트나 대폭 증가하여 대북인식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영남권도 20.0%→ 28.5%로 8.5%가 증가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 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충청권은 41.0%→ 33.6%로 7.4%가 낮아져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호남권이 연평도 사건이라는 실제적인 무력 충돌의 위협 상황 속에서 대북 신뢰도에서 매우 위축되어 은둔 형태로 수면 하로 내려갔으나, 2012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대북 신뢰가 상승하여 예년과 같은 의식의 양태를 형성하였다. 반면 충청권의 대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반대로 영남권의 대북신뢰가 상승한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충청권의 대북 불신과 영남권의 대북신뢰가 증가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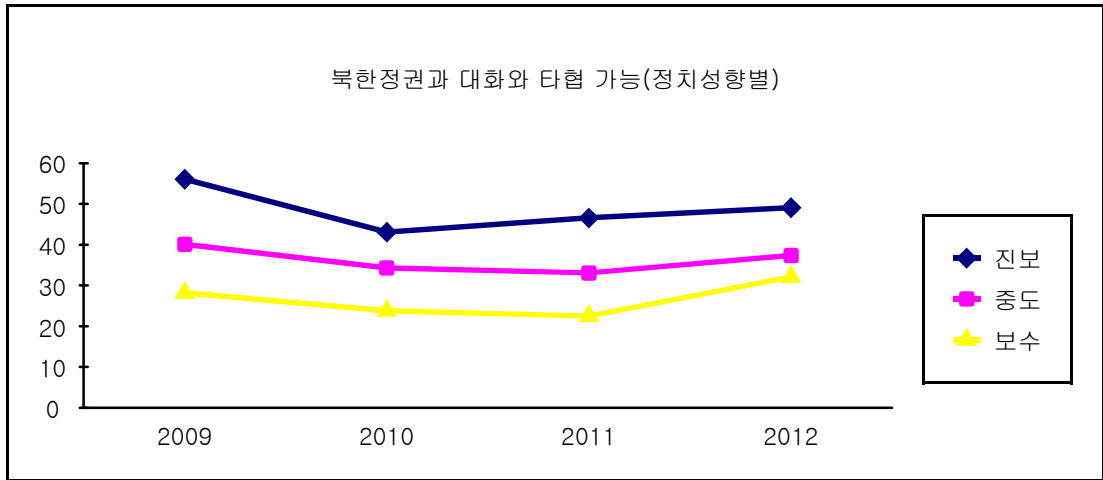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정치적 이념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9.1%)>중도(37.4%)>보수(32.0%)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진보의 대북신뢰도는 56.1%(09년)→43.1%(10년)→46.6(11년)→49.1%(12년)으로 2010년에 13%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49% 수준으로 높아졌다.<sup>3)</sup>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 보수의 대북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작년과비교할 때 대북 신뢰도의 평균 증가율이 5%인데 비해 ‘보수’의 대북 신뢰도는 22.5→32.0%로 9.5%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보수의 대북 신뢰도 상승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쉽지 않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으로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 지형이 급격히 변화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진보층은 8.2%나 확장되고 보수층은 5.1%가 줄어든 것이다. 2011년에는 진보 27.9%, 중도 48.1%, 보수 24.0%로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그림 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5.4%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계열로 보면 2008년에 71.7%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에 83.7%로 12% 포인트가 높아졌고 그 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83.2%→ 85.4%로 2.2% 포인트가 높아졌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조금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임을 명시하여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은 세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와는  $p=0.05$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별이나 종교 변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2012년의 특이한 점은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이 각각 10.2%, 12.2%, 13.1%인데 비해 충청권은 20.7%로 높았다. 작년에는 연평도 사건의 효과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북한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작년에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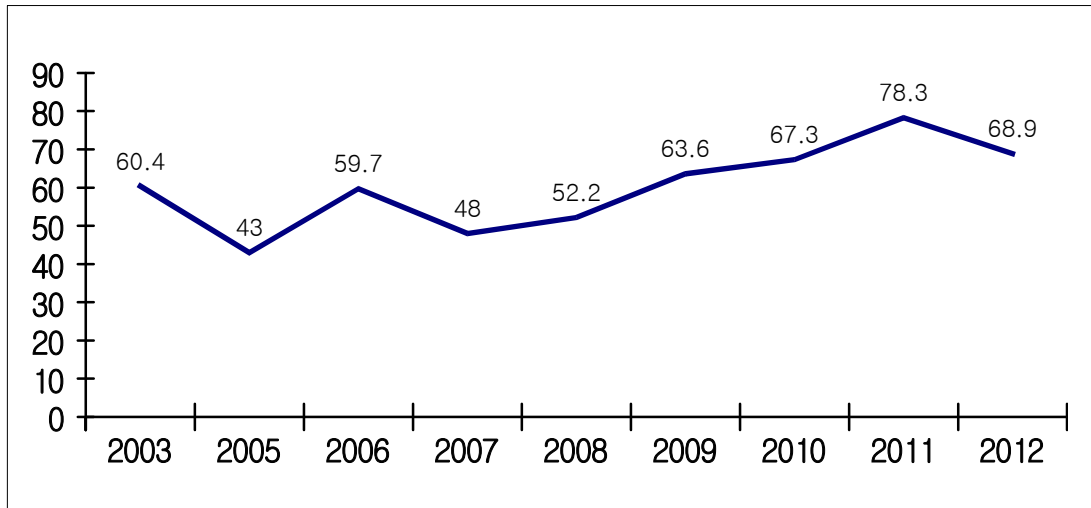
의 핵포기 가능성에 9%가 동의했으나 2012년에는 20.7%가 동의하여 11.7% 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올해 충청권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은 해석하기 난해하다. 앞의 문항에서 충청권은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불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매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펼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금년도에 처음 질문을 던진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북한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15.1%가 동의한 반면, 50.9%는 이의를 표시했고, 34%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즉 국민들의 절반이 북한정권은 앞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소수만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북한정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대북정책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북한위기의식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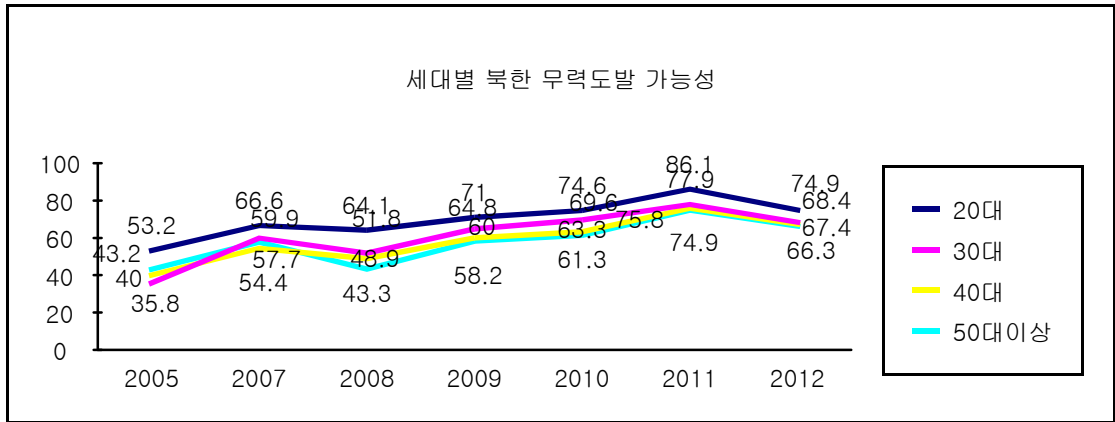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9%로 “없다” (31.1%)는 응답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던 작년(78.3%)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 북한발 안보불안이 해소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후 고조되던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이 올해에 그 추세가 반전되어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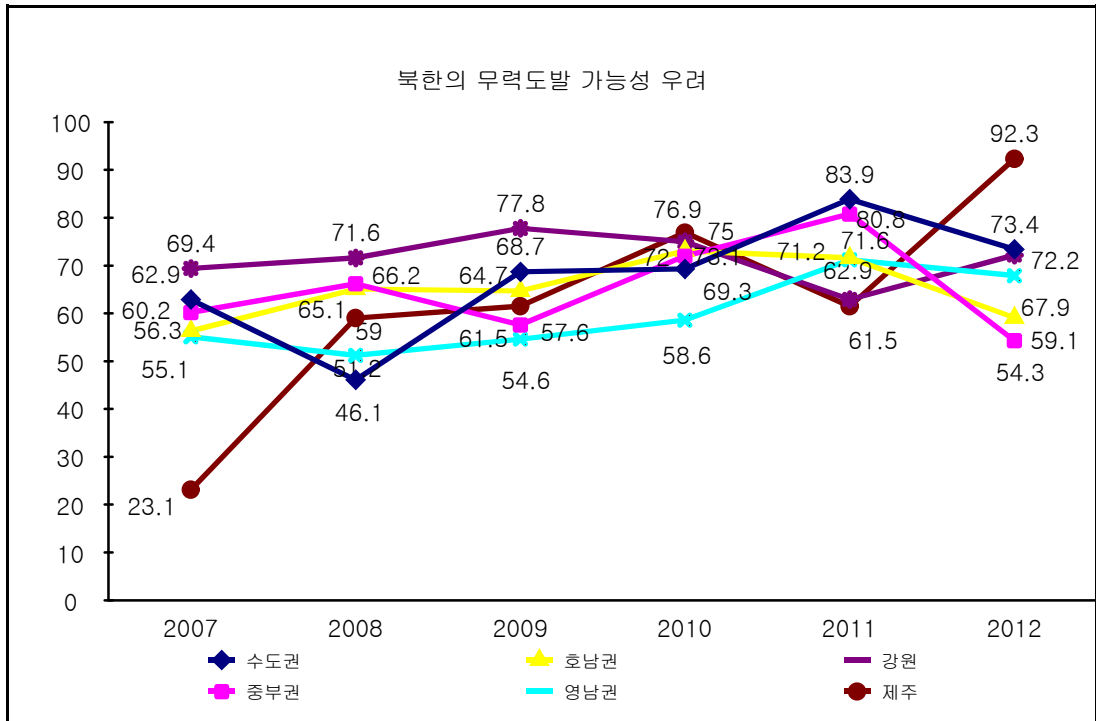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과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변수와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나 20대와 다른 연령층간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다른 연령층간의 차이는 작년 10% 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으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최근 2년간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2010년까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20대가 다른 연령층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이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군복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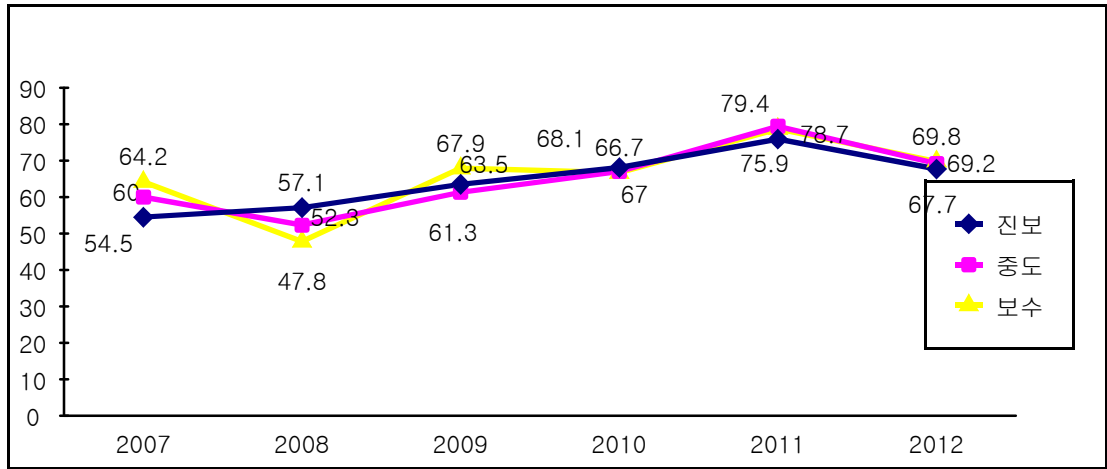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 는 의견에 제주(92.3%)를 예외로 하면 수도권과 강원이 각각 73.4%,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이 67.9%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호남권(59.1%)과 충청권(54.3%)이 가장 낮았다.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10%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나 강원은 각각 61.5%→ 92.3%, 62.9%→ 72.2%로 증가한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은 83.9%→ 73.4%로 감소하여 평균 감소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영남권은 71.2%→ 67.9%로 평균보다 낮은 3.3%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그러나 호남권과 충청권에서는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71.6%→ 59.1%로 12.5% 포인트 낮아졌고, 충청권은 80.3%→ 54.3%로 26%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즉 호남권과 충청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 는 쪽으로 여론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안보불안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남권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효과가 사라진 후 그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충청권의 급락은 이해하기 어렵다. 충청권의 안보불안이 1년 사이에 이처럼 큰 폭으로 해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 는 응답이 진보(67.7%), 중도(69.2%), 보수(69.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야간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2007년과 2008년에는 이념성향과 안보불안 사이에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였으나,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안보불안이 급등하여 정치이념간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효과’ 가 압도하여 진보-보수 두 집단간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 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IV. 맺음말

첫째, 2012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지난해를 정점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이른바 “천정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5.3%에서 16.8%로 상승하던 북한 ‘적대대상’ 인식이 올해 6% 포인트 하락했으며,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식도 55.0%에서 53.2%로 낮아졌다. 북한과 “대화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도 59.1%(09년)→65.1%(10년)→65.7%(11년)→60.7%(12년)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높아졌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정서도 강화되었다. 2008년 이후 줄곧 하향추세이던 민족주의 논리가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남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흡수통일적 시각도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신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북한 양체제를 절충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둘째, 무엇보다 작년에 최고조(78.3%)에 달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가

68.9%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대북인식이 “천정을 치고” 내려오는 추세를 형성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안보불안 의식은 52.2%(08년)→63.6%(09년)→67.3%(10년)→78.3%(11년)→68.9%(12년)로 지난해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는 10% 포인트 하락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은 가장 낮을 때 40%, 가장 높을 때 60%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작년에 안보불안이 78.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 기록한 68.9%의 안보불안 수준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고조된 남북한간 긴장과 갈등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처럼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기대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러한 통일의식은 20대 젊은 층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20대의 보수화’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북인식에서 50대이상과 비슷한 비판적,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던 20대의 연령층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7.1% 포인트가 상승했고, ‘적대대상’ 인식이 작년에 비해 26%→14.5%로 대폭 줄어들었다. 통일의식에 있어서도 작년과는 달리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2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의식도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전쟁방지’ 목적이 20대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대신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정서가 20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20대는 여전히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50대 이상과 비슷한 대북불신을 갖고 있으며 북한발 안보불안과 위기의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상인식에서 적대의식이 11.5%가 줄고 협력대상 의식이 7.1% 포인트 상승한 것, 그리고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대와 30·40대간의 격차가 작년에는 10% 포인트였는데, 올해는 7%포인트로 좁혀진 사실들은 20대의 대북인식이 그 추세와 강도에서 작년을 정점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북한인식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랐다. 북한의 존재인식과 북한의 변화, 정권 신뢰도 등 여러 영역에서 진보는 보수보다 북한에 대해 더 긍정적,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진보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지원대상’ 인식의 비율이 높고, ‘경계대상’, ‘적대대상’ 비율이 낮았으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즉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대북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이념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대북우호의식이 다시 증가하여 2010년의 패턴으로 복귀한 반면, 충청권의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북한의 ‘협력대상’ 인식에서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각 3.9%, 6.9% 포인트가 늘어난데 비해 충청권은 15.4%가 줄어들었다. 2010년 이전에 영남권이 보여주었던 대북 경계·적대의식을 충청권이 대신 담당하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영남권은 기존의 패턴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협력·우호의식을 보였다.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18.6%, 8.5% 포인트가 상승한데 비해 충청권은 7.4% 포인트가 하락하여 충청권의 대북 불신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식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다른 지역에서는 통일 필요성 의식이 모두 상승한데 비해 충청권은 오히려 하락하는 특이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호남권, 수도권에서 통일의지가 높아진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영남권에서도 2012년에는 46.9%→52.9%로 높아졌으나 충청권에서는 60.3%→57.8%로 통일의지가 낮아졌다. 수도권이 담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호남권의 복귀와 영남권의 새로운 변화, 충청권의 퇴조가 대북인식의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고조되던 전쟁위기의식이 해소되면서 지역별 분화와 재구조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2년의 대북인식은 최고조에 달했던 안보불안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천정을 치고” 내려와 긍정적·우호적 의식을 조금씩 형

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주요 원인은 '50대이상' 집단과 유사한 통일/북한의식으로 '보수화' 되었던 20대가 30~40대의 대북의식 쪽으로 부분적 이동이 일어났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전으로 대북의식을 복원한 호남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20대가 여전히 대북 경계의식과 불신, 안보불안을 갖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가늠하지 쉽지 않으며, 충청권의 극단적 대북 비판의식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진보'가 아직은 과거와 같은 대북인식의 차이를 분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대북인식 지형도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

이 수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 1. 머리말<sup>1)</sup>

탈냉전 글로벌 시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가시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가 단일하고 동질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원화된 사회’ 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사회구성원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한국인,’ ‘한국인다움’ 에 대한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와 한국인을 구성하는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질성과 고정된 경계를 전제로 논의되던 다양한 기존 과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사회의 ‘다문화화’ 와 다름과 평등의 공약가능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일치를 추구하는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통일논의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다문화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한국인의 다문화 관련 태도를 살펴 보고 이와 기타 정치의식 관련 문항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1) 머리말의 논의는 상당부분 필자의 “다문화주의와 통일담론” (2012)에서 따 온 것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도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이주민이다. 세계적 냉전의 종결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 그리고 한중수교가 없었더라면 이들의 이주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타의 이주민들과는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인다. 이는 이들이 ‘한민족’ 이자 분단되어 대립 중인 나라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 온 특수한 이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문화 담론과 연동되어 사고되기보다는 ‘민족,’ ‘통일’ 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 및 정치적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과연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는 부(-)의 관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는 정(+)의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리버럴리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 글은 2012년 현재, 한국인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가 민족주의 및 정치적 성향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과 통일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우선 2012년 현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다문화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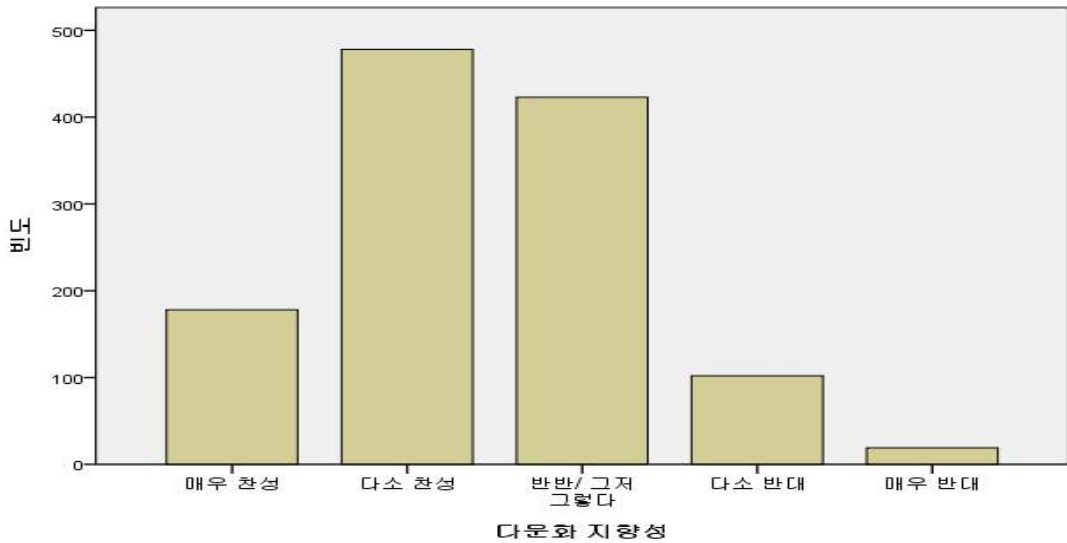
통일의식조사는 2012년 처음으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개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하나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이 좋다.” 라는 질문으로 다문화지향성을, 다른 하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라는 질문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물론 이 질문들은 다양성에 대한 개인적 관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적 정체성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두 질문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다문화수용성’의 정도와 성격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우선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4.7% (매우 찬성 14.8%, 다소 찬성 39.8%), 반대가 10.1%(다소 반대 8.5%, 매우 반대 1.6%), 그저 그렇다는 3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10% 내외이고, 유보적인 경우가 30% 중반대인 것이다.

〈표 1〉 다문화 지향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찬성	178	14.8	14.8	14.8
다소 찬성	478	39.8	39.8	54.7
반반/그저그렇다	423	35.3	35.3	89.9
다소 반대	102	8.5	8.5	98.4
매우 반대	19	1.6	1.6	100.0
합계	1200	100.0	100.0	-

이를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 56.9%, 여성 중 52.4%가 다문화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각각 9.7%, 10.5%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과 가구소득수준도 다문화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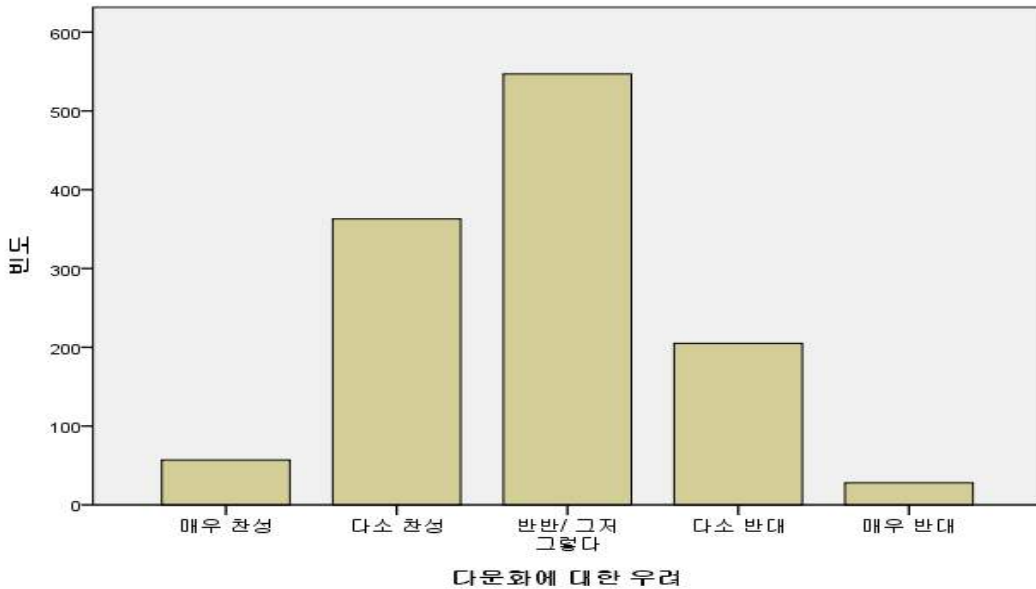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36.8%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각각 51.1%, 6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고졸, 대졸이 상응답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다문화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력별로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 차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중졸 이하 13.2%, 고졸 10.1%, 대졸 9.3%). 대신 중졸 중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50%를 차지하였다.

한편,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해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35.1%(매우 찬성 4.8%, 다소 찬성 30.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9.4%(다소 반대 17.1%, 매우 반대 2.3%)보다 15.7% 높았다. 유보적 입장을 가진 경우는 45.6%였다.

〈표2〉 다문화에 대한 우려 빈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찬성	57	4.8	4.8	4.8
다소 찬성	363	30.3	30.3	35.0
반반/ 그저 그렇다	547	45.6	45.6	80.6
다소 반대	205	17.1	17.1	97.7
매우 반대	28	2.3	2.3	100.0
합계	1200	100.0	100.0	



이를 다시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 34.1%, 여성 중 35.9%가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친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우려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19.2%, 19.7%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가구소득수준별로도 응답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쳤다. 중졸 이하의 경우, 44.3%가 다문화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데 반해, 대재 이상의 경우는 32.3%로 줄어들어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비율에서도 중졸이하가 10.4%, 대재 이상이 26.0%로

15%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은 고졸에서 49.6%로 가장 높고, 중졸, 대졸 순이었으며 모두 40% 이상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지향적 태도와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교차했을 때,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를 긍정하는 사람 중 결속력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39.2%, 유보적 태도를 보인 사람이 34.1%,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응답자가 26.7%인 반면,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결속력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57.9%, 중도가 20.7%,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이 21.5%로 나타났다. 다문화지향적인 응답자들도 결속력 약화에 관한 우려는 하지만 다문화에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다문화 지향성 \* 다문화 우려 교차분석표 ( $\chi^2 = 183.157, p=0.000$ )

			다문화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	257 (39.2)	224 (34.1)	175 (26.7)	656 (100.0)
	보통	빈도 (%)	93 (22.0)	298 (70.4)	32 (7.6)	423 (100.0)
	반대	빈도 (%)	70 (57.9)	25 (20.7)	26 (21.5)	121 (100.0)
전체		빈도 (%)	420 (35.0)	547 (45.6)	233 (19.4)	1200 (100.0)

종합하여 다문화수용도의 정도와 성격을 살펴보면, 한국 국민들의 절반은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3분의 1 가량은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해가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가 10% 내외인 것으로 보아 이 우려가 다문화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및 이의 국가결속력 관련 부정적 영향에 관한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경우가 각각 35.3%, 45.6%에 이르러,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수

준이 낮은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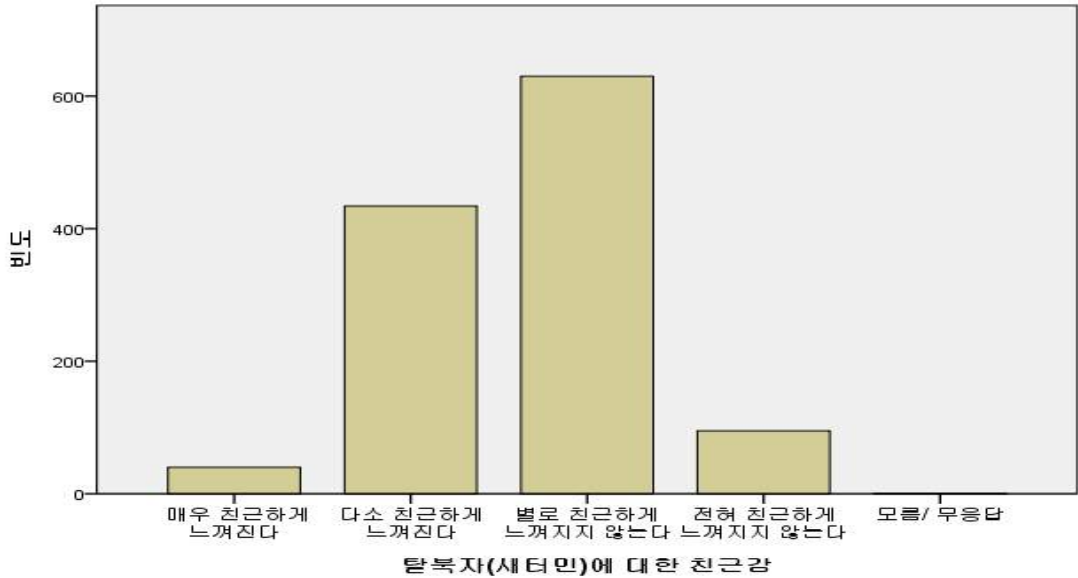
## 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출신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으로는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39.5%(매우 친근 3.3%, 다소 친근 36.2%),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0.4%(별로 안 친근 52.5%, 전혀 안 친근 7.9%)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4〉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빈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0	3.3	3.3	3.3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34	36.2	36.2	39.5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30	52.5	52.5	92.0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95	7.9	7.9	99.9
모름/ 무응답	1	0.1	0.1	100.0
합계	1,200	100.0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나타난 응답률 분포를 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성(42.4%)이 여성(36.6%)보다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친근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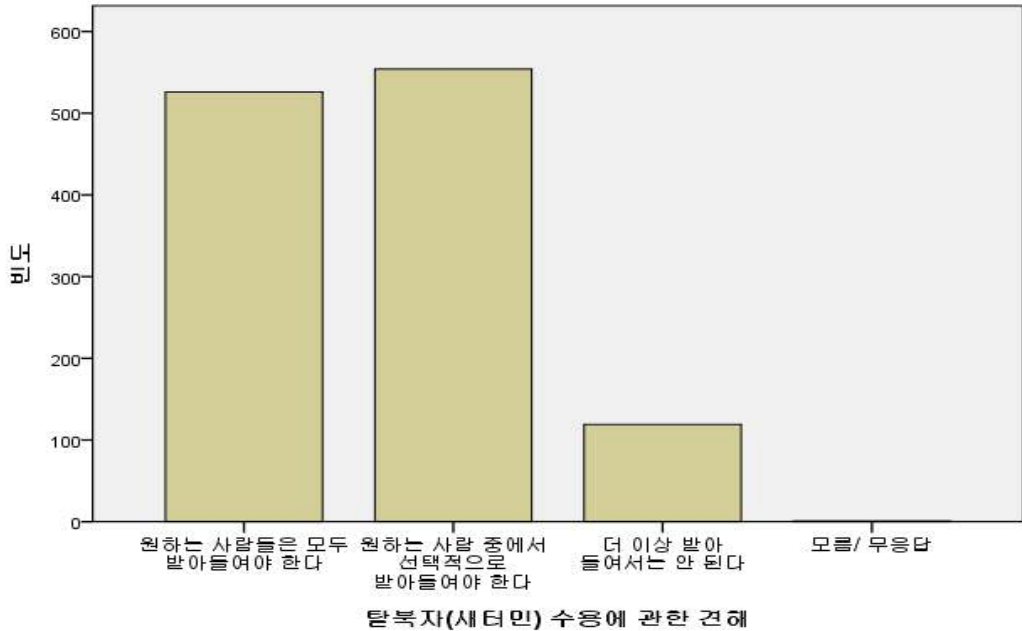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관련된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대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는 의견이 43.8%,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는 의견이 46.2%로 비슷했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는 의견은 9.9%였다.

이를 다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는 유의수준 (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평균보다 ‘모두 수용’ 의견이 훨씬 적었고,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5〉 북한이탈주민 한국 수용에 관한 의견 빈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526	43.8	43.8	43.8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54	46.2	46.2	90.0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119	9.9	9.9	99.9
모름/ 무응답	1	0.1	0.1	100.0
합계	1200	10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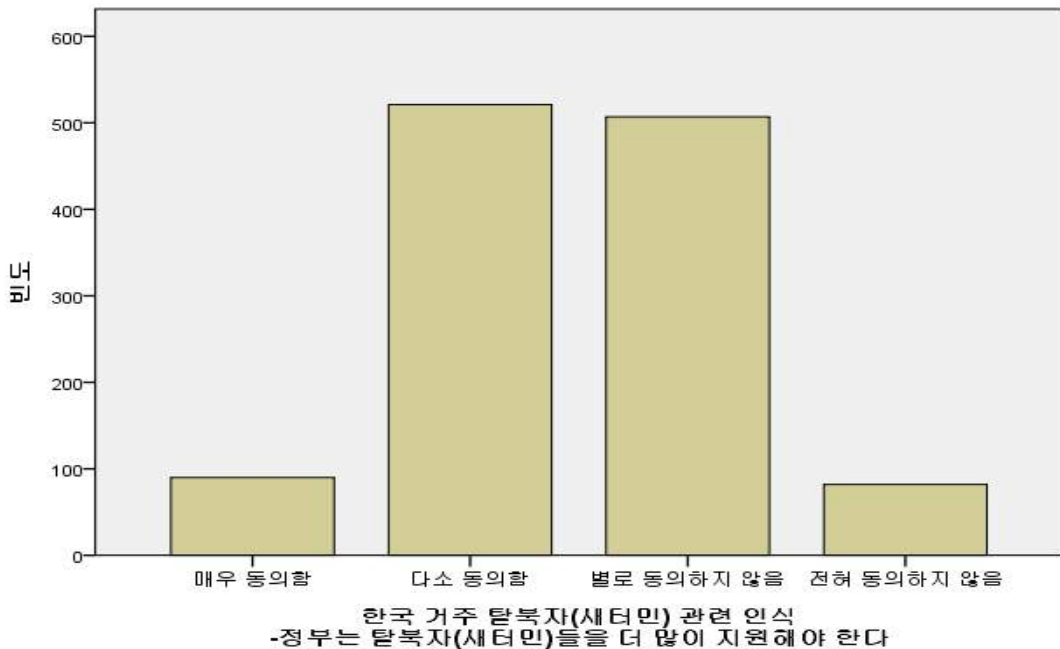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인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는 데에는 전체의 50.9%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 49.1%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조사결과보다 반대의견이 8.8% 늘어난 것

으로써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자원압박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나 보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6〉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 빈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동의함	90	7.5	7.5	7.5
다소 동의함	521	43.4	43.4	50.9
별로 동의하지 않음	507	42.3	42.3	93.2
전혀 동의하지 않음	82	6.8	6.8	100.0
합계	1,200	100.0	100.0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연령과 소득수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성별, 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

다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원강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들을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6:4 정도로 많고, 수용에 있어서는 '선택 수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수용' 보다 2.4% 많다. 그런데,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이르러 정부의 전원수용 방침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강화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은 반대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여성과 중졸 이하 학력의 구성원들에게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일까?

### 3.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다문화지향성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그리고 지원확대에 대한 의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1.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우선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사이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지향성이 강할수록 친근감도 높았다.

〈표7〉 다문화 지향성\*새터민 친근감 교차분석 ( $\chi^2 = 17.136, p=0.000$ )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	293 (44.7)	362 (55.3)	655 (100.0)
	보통	빈도 (%)	145 (34.3)	278 (65.7)	423 (100.0)
	반대	빈도 (%)	36 (29.8)	85 (70.2)	121 (100.0)
전체		빈도 (%)	474 (39.5)	725 (60.5)	1199 (100.0)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의견도 다문화지향성과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에 있었다.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경우 수용에 강한 정도로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8〉 다문화 지향성\*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 $\chi^2 = 11.100, p=0.004$ )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	608 (92.7)	48 (7.3)	656 (100.0)
	보통	빈도 (%)	366 (86.7)	56 (13.3)	422 (100.0)
	반대	빈도 (%)	106 (87.6)	15 (12.4)	121 (100.0)
전체		빈도 (%)	1080 (90.1)	119 (9.9)	1199 (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응답자가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 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9〉 다문화지향성\*새터민지원강화 교차분석 ( $\chi^2 = 31.020, p=0.000$ )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	382 (58.2)	274 (41.8)	656 (100.0)
	보통	빈도 (%)	179 (42.3)	244 (57.7)	423 (100.0)
	반대	빈도 (%)	50 (41.3)	71 (58.7)	121 (100.0)
전체		빈도 (%)	611 (50.9)	589 (49.1)	1200 (100.0)

종합하면, 다문화지향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3. 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의 관계

다음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력, 그리고 지원 강화 관련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려가 많은 경우가 우려가 적은 경우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다문화 우려\*새터민 친근감 교차분석 ( $\chi^2 = 7.993, p=0.018$ )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문화 우려	우려	빈도 (%)	159 (37.9)	260 (62.1)	419 (100.0)
	중도	빈도 (%)	204 (37.3)	343 (62.7)	547 (100.0)
	우려 없음	빈도 (%)	111 (47.6)	122 (52.4)	233 (100.0)
전체		빈도 (%)	474 (39.5)	725 (60.5)	1199 (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력은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려가 있는 경우 경향적으로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다문화 우려\*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 $\chi^2 = 4.422, p=0.110$ )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다문화 우려	우려	빈도 (%)	378 (90.0)	42 (10.0)	420 (100.0)
	중도	빈도 (%)	484 (88.6)	62 (11.4)	546 (100.0)
	우려 없음	빈도 (%)	218 (93.6)	15 (6.4)	233 (100.0)
전체		빈도 (%)	1,080 (90.1)	119 (9.9)	1,199 (100.0)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에 대한 찬성여부와도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다문화 우려\*새터민 지원강화 교차분석 ( $\chi^2 = 14.815, p=0.001$ )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문화 우려	우려	빈도 (%)	202 (48.1)	218 (51.9)	420 (100.0)
	중도	빈도 (%)	264 (48.3)	283 (51.7)	547 (100.0)
	우려 없음	빈도 (%)	145 (62.2)	88 (37.8)	233 (100.0)
전체		빈도 (%)	611 (50.9)	589 (49.1)	1,200 (100.0)

즉, 다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덜 우호적이며, 우려하지 않는 경우 보다 우호적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상호관련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다문화수용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흔히 북한이탈주민 이슈와 다문화 관련 이슈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관례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요소가 이 두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민족주의와 정치적 성향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4. 민족주의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조사내용 중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 항목을 선택하였다. 통일이유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 고 응답한 경우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상대적으로 뚜렷한 민족의식을 가진 경우로 해석하여 각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 4.1. 민족주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우선 통일이유와 다문화 지향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통일의 필요성을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다문화지향성과 큰 상관성이 없었다. 그런데 통일의 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사이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진 경우, 다문화의 국가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이다.

〈표13〉 통일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 $\chi^2 = 6.259, p=0.044$ )

			다문화에 대한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통일이유	같은 민족	빈도 (%)	201 (36.5)	260 (47.2)	90 (16.3)	551 (100.0)
	기타	빈도 (%)	219 (33.8)	286 (44.1)	143 (22.1)	648 (100.0)
전체		빈도 (%)	420 (35.0)	546 (45.5)	233 (19.4)	1199 (100.0)

한편, 민족자긍심과 다문화지향성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여부가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자긍심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민족주의적 성향과 다문화수용도는 통일의 필요성을 같은 민족임에서 찾는 경우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해를 끼친다는 우려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상호연관성이 적다.

#### 4.2. 민족주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통일의 이유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로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경우에도 친근감, 수용여부, 지원강화 세 항목 모두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민족자긍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새터민 수용, 새터민 지원 강화-간에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택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뚜렷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응답자들이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예외적이다. 다문화가 민족주의와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탈주민 이슈가 주로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되어 논의되곤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및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과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선택하였다. 이념적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었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 여부에 관한 응답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하였다. 지난 수년간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북한인식이 일관되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조사에서도 이념적 성향과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북 정권과 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14〉 정치적 성향과 북에 대한 태도관계 교차분석 ( $\chi^2 = 20.287, p=0.000$ )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전체
			가능	불가능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	161 (49.1)	167 (50.9)	328 (100.0)
	중도	빈도 (%)	221 (37.4)	370 (62.6)	591 (100.0)
	보수	빈도 (%)	90 (32.0)	191 (68.0)	281 (100.0)
전체		빈도 (%)	472 (39.3)	728 (60.7)	1200 (100.0)

### 5.1.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우선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지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의 다문화 지향성이 보수적인 응답자의 다문화 지향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보보다는 중도가 다문화를 긍정하는 비율이 높고 부정하는 비율이 낮다. 다만 보수는 다문화를 긍정하는 비율이 낮고 부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진보와 중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분석의 유효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 $\chi^2 = 18.339, p=0.001$ )

			다문화 지향성			전체
			찬성	보통	반대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	201 (52.1)	92 (36.1)	35 (10.7)	328 (100.0)
	중도	빈도 (%)	320 (54.1)	224 (37.9)	47 (8.0)	591 (100.0)
	보수	빈도 (%)	135 (48.0)	107 (38.1)	39 (13.9)	281 (100.0)
전체		빈도 (%)	656 (54.7)	423 (35.3)	121 (10.1)	1200 (100.0)

다음으로,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간에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었다. 즉,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가 없고, 보수적일수록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 다문화화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비율은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35% 내외로 유사성을 보인 반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경우가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표16〉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 $\chi^2 = 15.601, p=0.004$ )

			다문화에 대한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	113 (34.5)	129 (39.3)	86 (26.2)	328 (100.0)
	중도	빈도 (%)	202 (34.2)	289 (48.9)	100 (16.9)	591 (100.0)
	보수	빈도 (%)	105 (37.4)	129 (45.9)	47 (16.7)	281 (100.0)
전체		빈도 (%)	420 (35.0)	547 (45.6)	233 (19.4)	1200 (100.0)

한편,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는가)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경우 다문화 지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17〉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 $\chi^2 = 6.389, p=0.041$ )

			다문화 지향성			전체
			찬성	보통	반대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	278 (58.9)	115 (32.8)	39 (8.3)	472 (100.0)
	불가능	빈도 (%)	378 (51.9)	268 (36.8)	82 (11.3)	728 (100.0)
전체		빈도 (%)	656 (54.7)	423 (35.3)	121 (10.1)	1200 (100.0)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우려의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과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가 없다.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면,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향성은 높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 5.2.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념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자신을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8〉 정치적 성향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 $\chi^2 = 1.181, p=0.554$ )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	135 (41.3)	192 (58.7)	327 (100.0)
	중도	빈도 (%)	235 (39.8)	356 (60.2)	591 (100.0)
	보수	빈도 (%)	104 (37.0)	177 (63.0)	281 (100.0)
전체		빈도 (%)	474 (39.5)	725 (60.5)	1199 (100.0)

이념적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전원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도, 보수로 갈수록 낮아졌다.

〈표19〉 정치적 성향과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 $\chi^2 = 32.519, p=0.000$ )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불수용	모름/무응답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	179 (54.6)	130 (39.6)	19 (5.8)	0 (0.0)	328 (100.0)
	중도	빈도 (%)	254 (43.0)	271 (45.9)	65 (11.0)	1 (0.2)	591 (100.0)
	보수	빈도 (%)	93 (33.1)	153 (54.4)	35 (12.5)	0 (0.0)	281 (100.0)
전체		빈도 (%)	526 (43.8)	554 (46.2)	119 (9.9)	1 (0.1)	1200 (100.0)

이념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의견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진보적인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보수적인 경우에 비해 18.7%나 높았다.

〈표20〉 정치적 성향과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 $\chi^2 = 22.072, p=0.000$ )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 적 성 향	진보	빈도 (%)	200 (61.0)	128 (39.0)	328 (100.0)
	중도	빈도 (%)	292 (49.4)	299 (50.6)	591 (100.0)
	보수	빈도 (%)	119 (42.3)	162 (57.7)	281 (100.0)
전체		빈도 (%)	611 (50.9)	589 (49.1)	1200 (100.0)

다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북한정권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0% 이상 높았다.

〈표21〉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 $\chi^2 = 14.792, p=0.000$ )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	218 (46.3)	253 (53.7)	471 (100.0)
	불가능	빈도 (%)	256 (35.2)	472 (64.8)	728 (100.0)
전체		빈도 (%)	474 (39.5)	725 (60.5)	1199 (100.0)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입장과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관용성이 있는 경우 지원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표22〉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 $\chi^2 = 14.792, p=0.000$ )

			새터민에 대한 지원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	434 (92.1)	37 (7.9)	471 (100.0)
	불가능	빈도 (%)	646 (88.7)	82 (11.3)	728 (100.0)
전체		빈도 (%)	1080 (90.1)	119 (9.9)	1199 (100.0)

북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과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지만, 경향적으로 북에 대해 관용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은 높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 $\chi^2 = 7.734, p=0.052$ )

			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불수용	모름/무응답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	224 (47.5)	210 (44.5)	37 (7.8)	1 (0.2)	472 (100.0)
	불가능	빈도 (%)	302 (41.4)	344 (47.3)	82 (11.3)	0 (0.0)	728 (100.0)
전체		빈도 (%)	526 (43.8)	554 (46.2)	119 (9.9)	1 (0.1)	1200 (100.0)

이상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경우와 북한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경우, 즉 정치적 성향이 진보 쪽에 가까울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친근감, 수용성, 그리고 지원강화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우호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민족주의 관련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정치적 진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이상 논의한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4〉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 우려	새터민 친근감	새터민 수용성	새터민 지원 강화	통일 이유 민족	민족 자긍심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다문화 우려	-.078**							
새터민 친근감	.118**	-.077**						
새터민 수용성	.107**	-.070*	.205**					
새터민 지원 강화	.165**	-.086**	.274**	.291**				
통일 이유 민족	-	-	-	-	-			
민족 자긍심	-	-	.133**	-	-	-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078**	-.065*	.114**	.077**	.210**	-	-	
이념적 성향	.093**			.134**	.136**	-	-.079**	.157**

\*p<.05, \*\*p<.01

다문화지향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 찬성률 및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 이념적 진보성 등이고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다문화에 대한 우려이다. 한편 다문화에 대해 우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 찬성률 및 북한 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경우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지원강화,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민족자긍심과도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지원강화 및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및 이념적 진보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는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수용성,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 및 이념적 성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역시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표로 삼은 통일의 이유를 같은 민족에서 찾는 경우는 모든 변수와 관련성이 없었고, 민족자긍심의 경우 오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정(+), 이념적 진보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인 북한 정권에 대한 관용성은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강화, 이념적 진보성과 정(+)의 상관관계,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한편 이념적 진보성은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지원강화,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정(+), 민족자긍심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다문화 수용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정치적 진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긍정적 차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민족주의는 부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상관성 및 이념적 진보성과 각각 정, 부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외 크게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 7. 결론

첫째, 2012년 한국 국민들의 절반 정도 (54.7%)는 다문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35.3%로 아직 다문화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35.1%로 우려하지 않는 경우 19.4%에 비해 훨씬 높은 것, 다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 중에서도 국가결속력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사람이 39.3%에 달해 궁극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양가적이고 유보적인 태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들을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용에 있어서는 ‘모두 수용’ 보다 ‘선택 수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는 의견도 9.9%에 이른다. 또한 지원강화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중졸 이하 학력의 구성원들에게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서로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민족주의적 성향보다는 정치적 진보성과 관련된다. 최소한 이 조사의 결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민족주의적 성향에 배치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또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연동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용한 변수들의 적합성 및 다른 변수의 영향 등을 심층분석을 통해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파악할 때 국민들의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진보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용의 이슈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 동북아 정세변화와 주변국 대외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 1. 머리말

지난 6년 간 우리 국민들은 역동적인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주변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 왔을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겪으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북한은 한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하였으며, 남한은 5.24 남북교류협력 전면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2011년 겨울에는 17년 간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소위 G2로 대변될 정도로 세계 강국으로서의 입지들 재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견줄만큼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과 자국 내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과거만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2011년 일본은 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12년 들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열을 올리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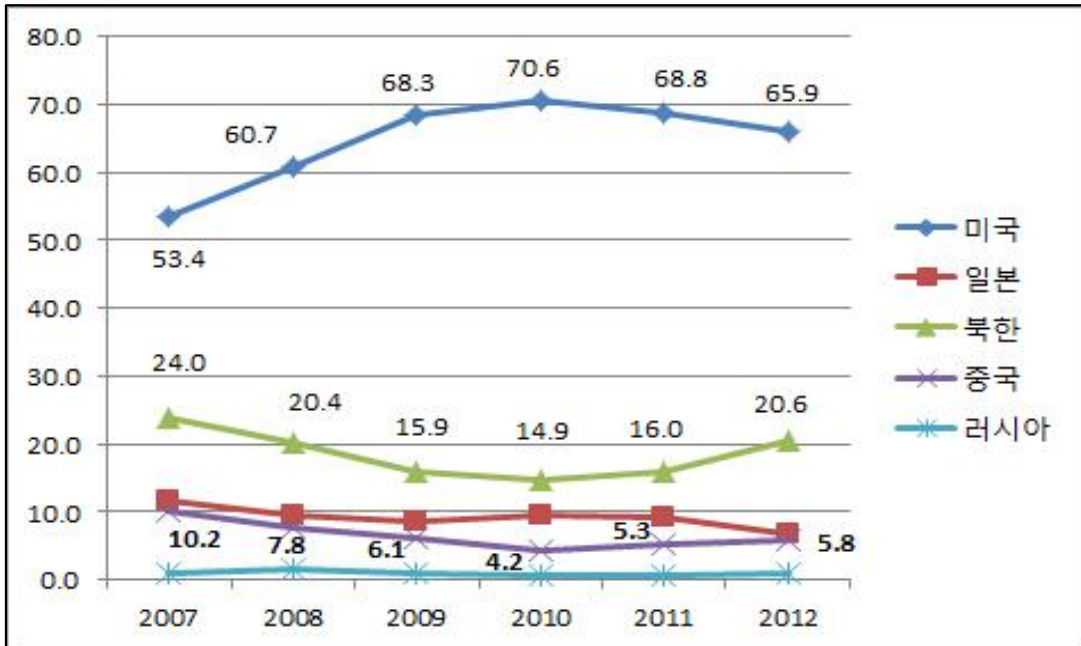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 및 대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가진 인식의 필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주변 환경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2년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주변국관계에 대한 대외인식을 중심으로 대외인식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와 북중 협력 강화가 대중국인식의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료분석을 할 것이다.

## 2.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는 설문문을 통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다섯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까지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후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하락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남북 간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순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반드시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2007-2012

(단위 : %)



N=7,192 (무응답 제외),  $\chi^2=144.14$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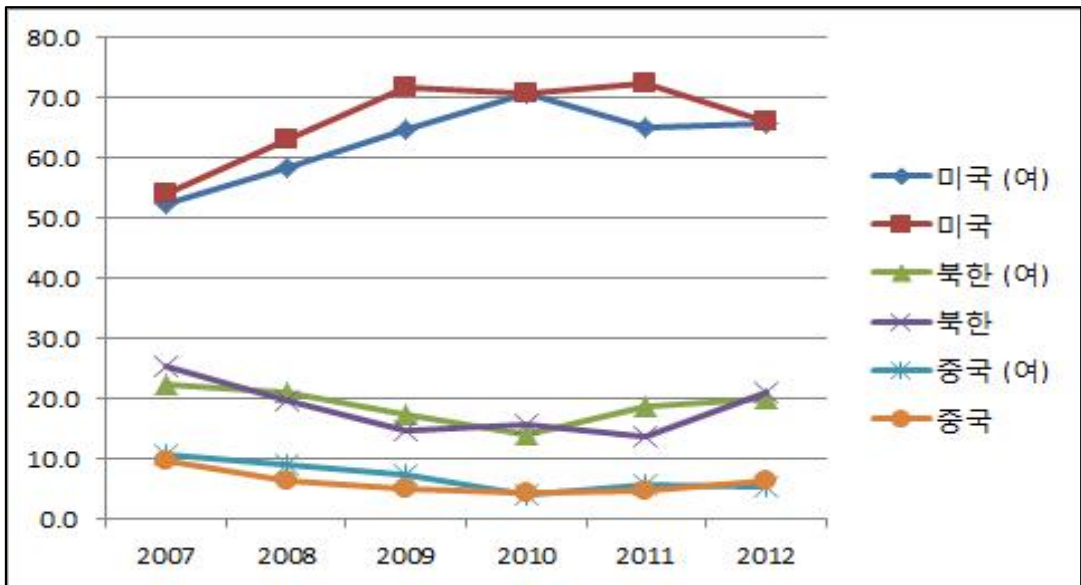
미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약간씩 감소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약 5% 가량 감소한 것이다. 반면 북한을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20.6%까지 약 5% 가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 4월 북한의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11월 연평도사건 등을 거치면서 2009년부터 2011년 조사에서의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15% 수준에서 담보하였지만, 2011년 가을 이후 북한의 물리적 안보위협 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2년 조사의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친밀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큰 차이를 찾기 힘들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2010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남성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여성의 미

국에 대한 친밀감보다 적게는 2007년 1.6% 많게는 2009년 7.0% 차이가 났다. 여성들이 근소하게나마 북한과 중국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림 2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 성별분석, 2007-2012

(단위 : %)



## 2.1 대미친밀도 조사결과 : 전반적인 감소추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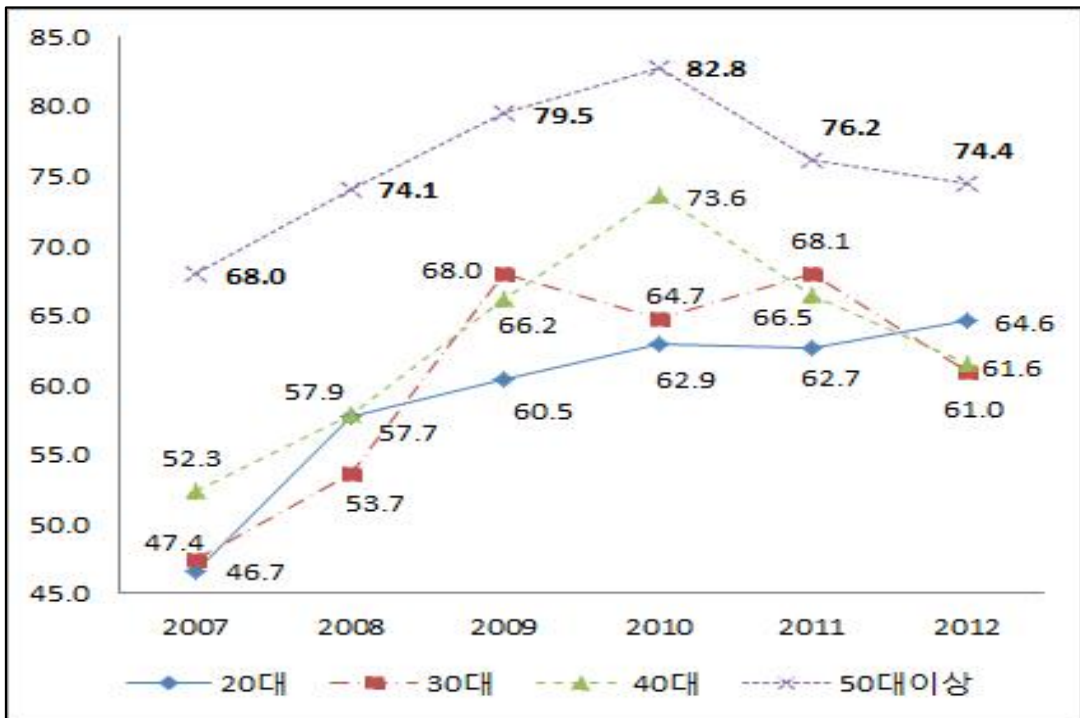
대미친밀도의 연령별 변화의 추이는 <그림 3>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74.4%이다. 20대의 64.6%가 미국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40대의 대미친밀도가 가장 낮아 각 연령대 응답자의 61.0%와 61.6%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20대의 대미친밀도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하게 약 13%정도 증가한 이후 갑작스런 증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30대와 40대보다 높은 대미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30대의 대미친밀도는 2011년 68.1%에서 2012년 61.0%로 떨어졌으며,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대미친밀도는 2010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10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두 연령대의 대미친밀도는 각기 12.0%와 8.4%씩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대미친밀도,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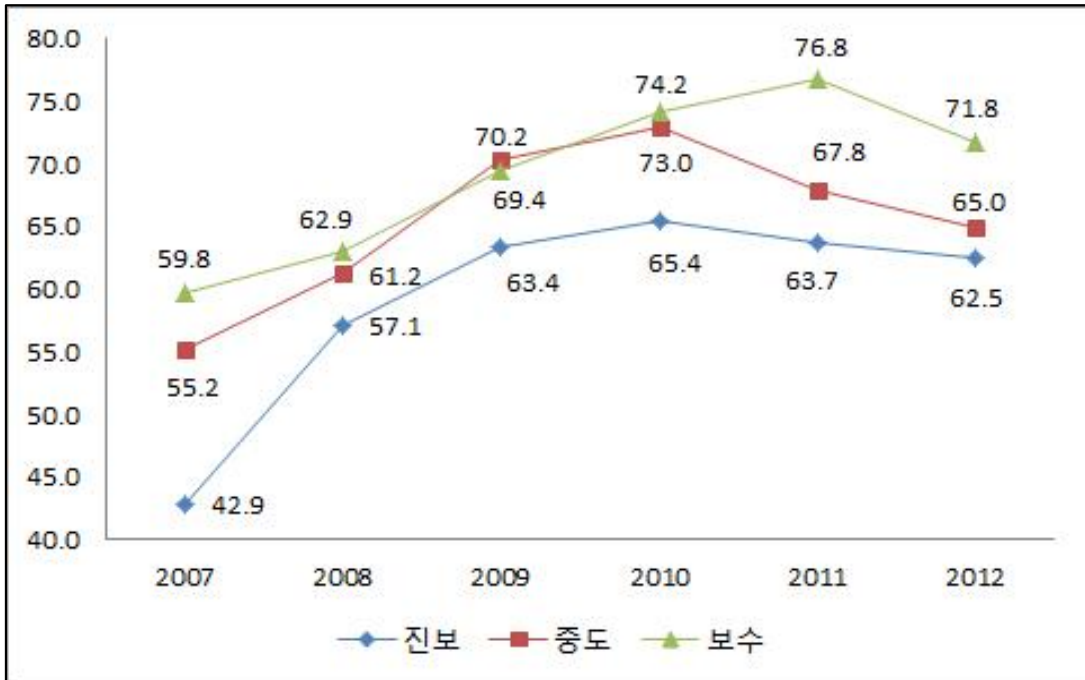
대미친밀도를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정치적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201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든 이념별 그룹에서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도층과 보수층의 대미친밀도가 증가하면서도 수렴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 조사를 기점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중도층의 친밀도가 진보층의 친밀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층의 친밀도와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2007년 이후 대미친밀도의 상승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이명박 정부의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안함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의 위협과 사건해결을 위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 등은 보수층에게는 대미친밀도의 상승 요건으로 중도층과 진보층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남북관계 및 군사적 긴장의 악화보다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가 증가하면서 대북친밀도가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미친밀도가 낮아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의 대미친밀도 이동과 2010년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념집단 간 대미친밀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모든 집단의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미친밀도는 적게는 5.8% 많게는 17%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진보층과 보수층이 대미인식이 아주 상반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진보층의 대미친밀도의 절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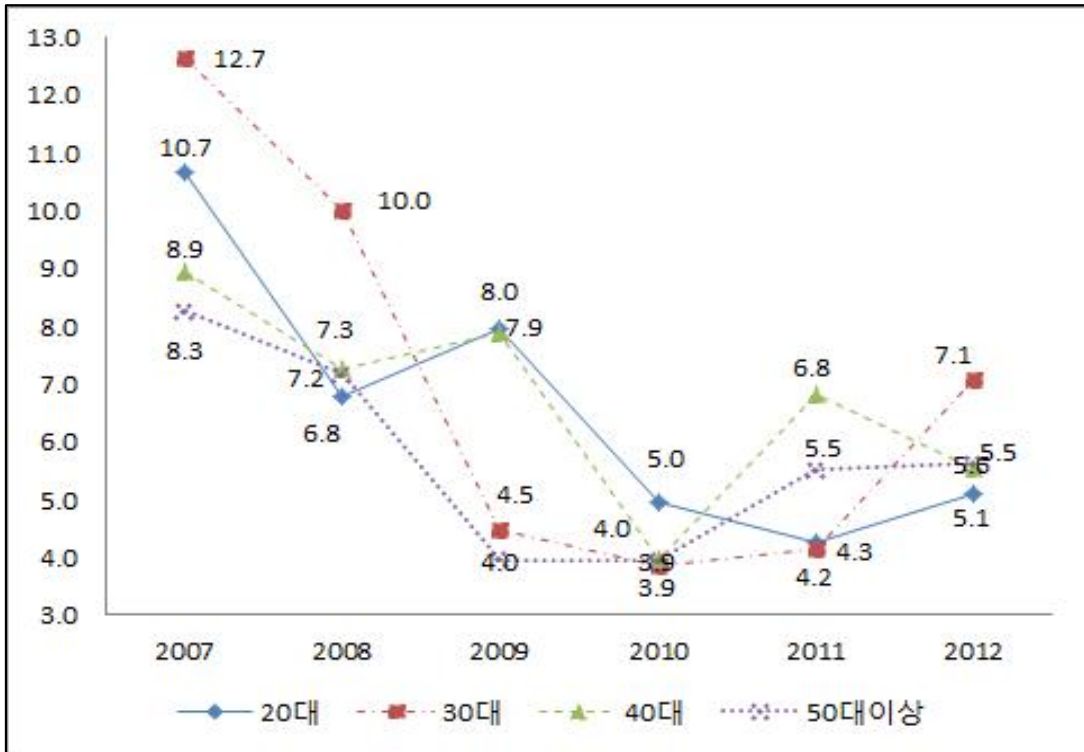


## 2.2 대중친밀도 조사결과 : 여전히 낮은 수준의 친밀도 유지

2007년 이후 대중친밀도는 평균 6% 정도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0대의 대중친밀도가 2011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약 3%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는 20대, 40대, 50대 이상 약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약 5% 정도로 수렴되고 있다. 2010년까지 급락했던 대중친밀도가 아주 작은 폭이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도 대북친밀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상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여름부터 격화되고 있는 한·중·일의 영토분쟁과 이에 따른 민족감정의 악화가 앞으로 대중친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5 연령별 대중친밀도,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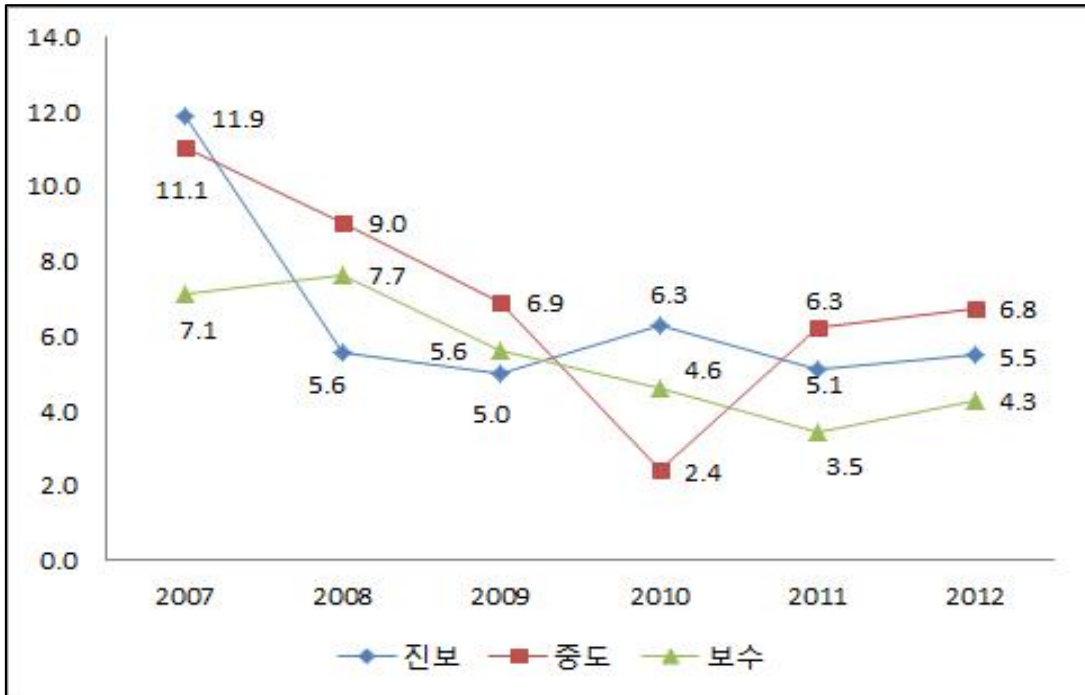
(단위 : %)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는 <그림 6>과 같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중도층의 대중친밀도가 약 4%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2009년까지는 진보층이 제일 낮은 대중친밀도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보수층의 대중친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수층의 대미친밀도가 아주 높게 형성되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층에서는 대중친밀도가 6.8%까지 회복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중친밀도 조사결과는 중도층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 대중친밀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중도층에게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슈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2007-2012

(단위 : %)



### 2.3 대북친밀도 조사결과 :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유지

지난 6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북친밀도는 대미친밀도와 역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2010년까지의 대미친밀도의 증가는 대북친밀도의 감소로, 이후 대미친밀도의 감소는 대북친밀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변화의 폭은 대중친밀도의 변화폭을 함께 고려할 때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역관계 추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대북친밀도의 변화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는 40대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대북친밀도가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2년에는 전 연령층의 대북친밀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50대의 대북친밀도도 200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다른

연령층이 약 23%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에 따른 대북친밀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대에 따른 대북친밀도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대와 30대 연령대에서 대일친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점도 2012년 대북친밀도가 상승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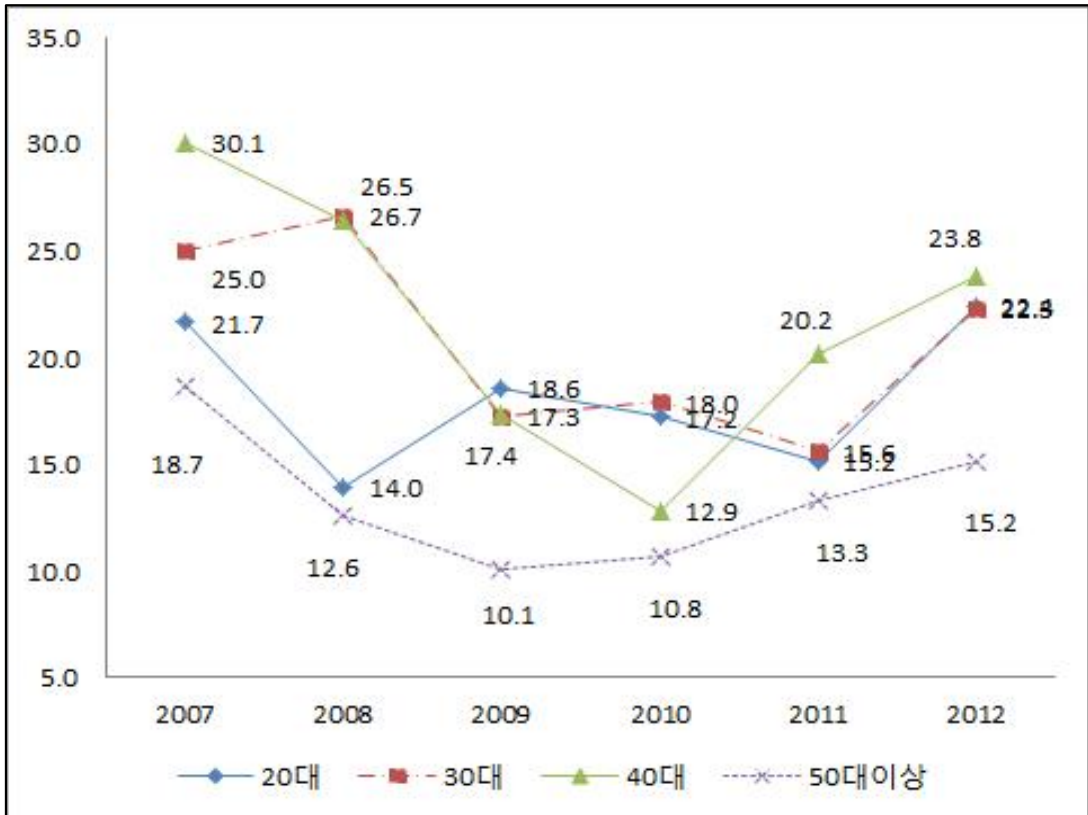
대북친밀도의 변화폭은 40대에서 가장 크게 발견된다. 2010년까지 악화되었던 40대의 대북친밀도는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흔히 486세대로 대변되는 현 40대의 정치적 관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점이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였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1)</sup> 2011년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널리 확산되고 김정은 체제가 불안할 것이라는 예상들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면서 위협인식이 감소하면서 대북친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1)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40대와 50대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07년 조사부터 일관되게 20대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연령별 대북친밀도,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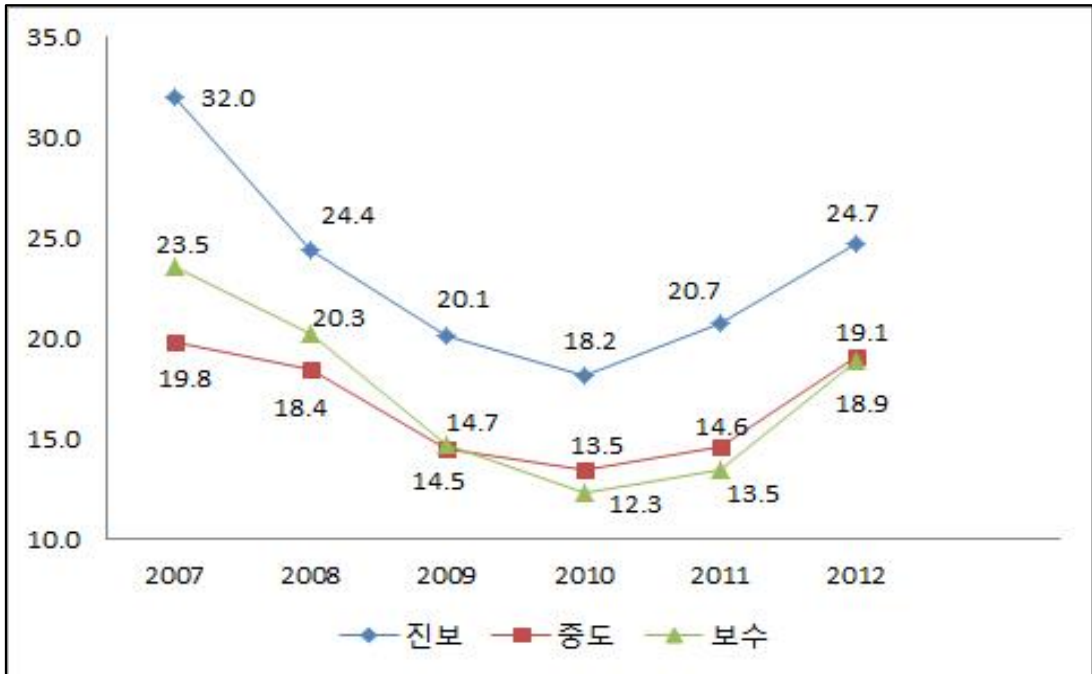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8〉은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를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진보층의 대북친밀도는 2011년 20.7%에서 2012년 24.7%로 증가하였으며, 중도와 보수층의 대북친밀도는 각기 2011년 14.6%, 13.5%에서 2012년 19.1%, 18.9%로 증가하였다. 모든 조사에서 진보층의 대북친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와 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대북친밀도가 형성되고 있다. 세 이념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2010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U자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전체의 분포와 동일하다. 즉, 진보층과 다른 두 집단 간에 친밀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변동의 폭은 크지 않으며 추이의 변화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8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2007-2012

(단위 : %)



### 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 통일의식조사는 주변국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도 우리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중요한 지표로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즉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각 국가별 위협도를 조사하고 있다. 친밀도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5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위협도의 상승은 다른 국가의 위협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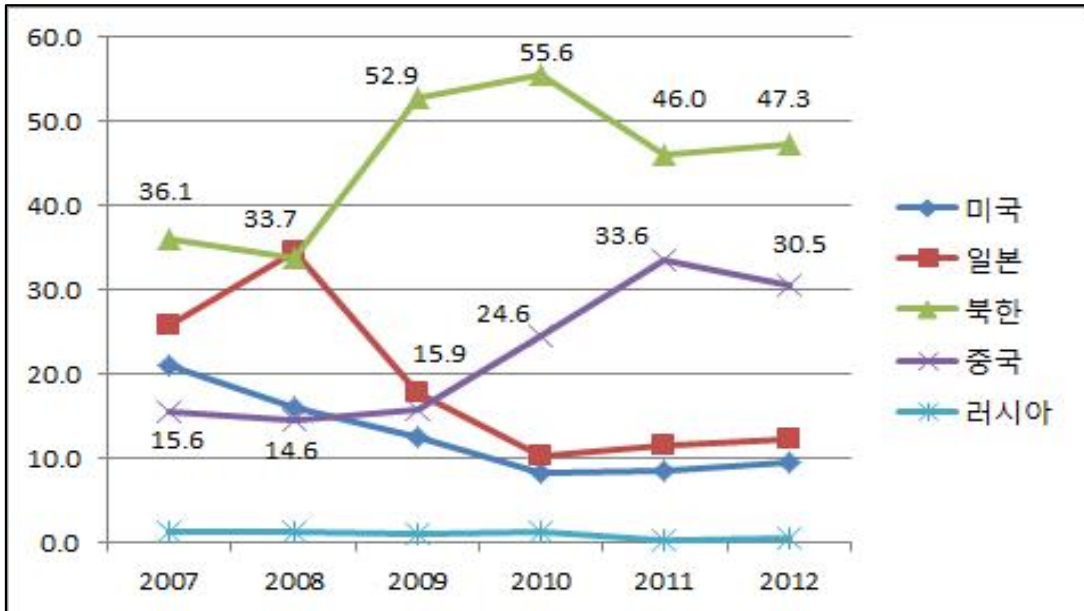
〈그림 9〉에 의하면 2012년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까지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았으나, 2009년 조사부터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위협인식은 1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30%가 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일위협도, 대미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되었다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의식이 형성되고 있으나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해에서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이어도 분쟁,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대국으로서의 부상 등도 중국의 위협도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요소라 하겠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이 우리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나 2012년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림 9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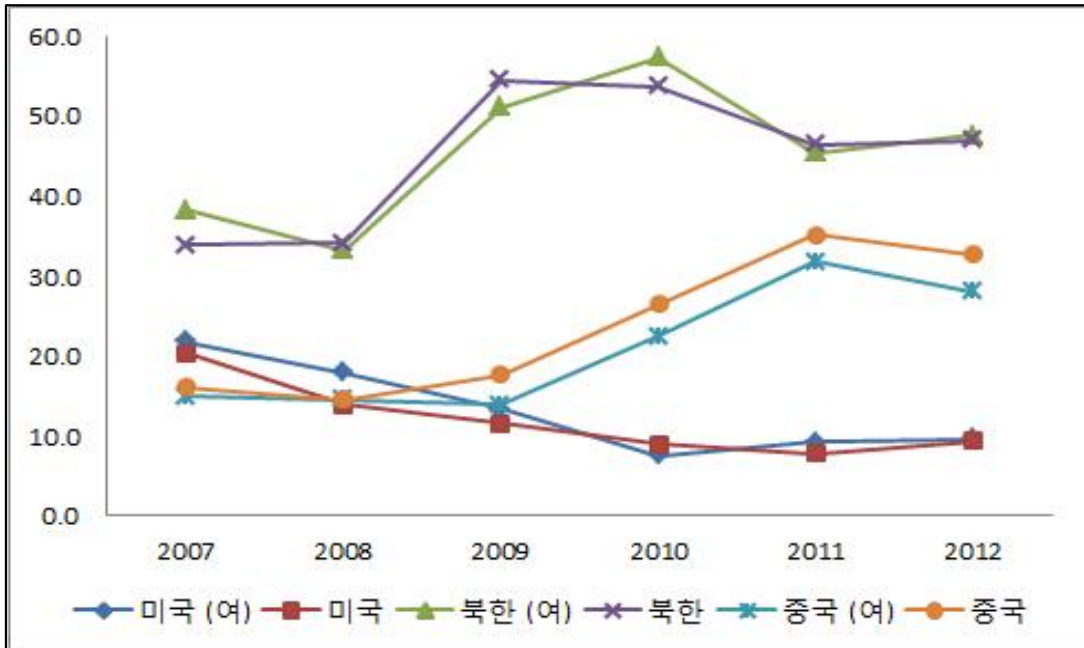
(단위 : %)



주변국가의 위협도에 대한 성별 비교의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세 나라에 대한 위협인식에서는 친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여성들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외 정책의 이슈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의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더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정세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림 10 주변국가의 위협도 : 성별 분석,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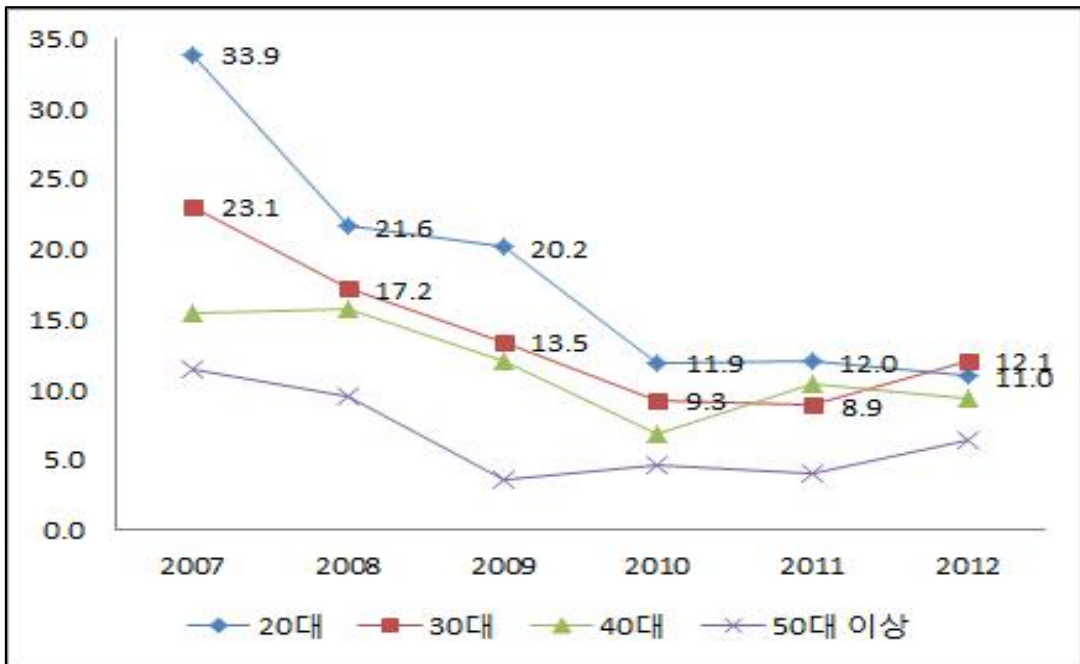


### 3.1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

연령별 대미위협도의 추이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에 나타나는 추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연령층의 대미위협도가 감소하여 약 10-12% 정도에서 수렴되고 있다. 둘째, 연령층 간의 대미위협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반미감정이 널리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는 추가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위협도가 증가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세대가 수렴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령별 대미위협도, 2007-201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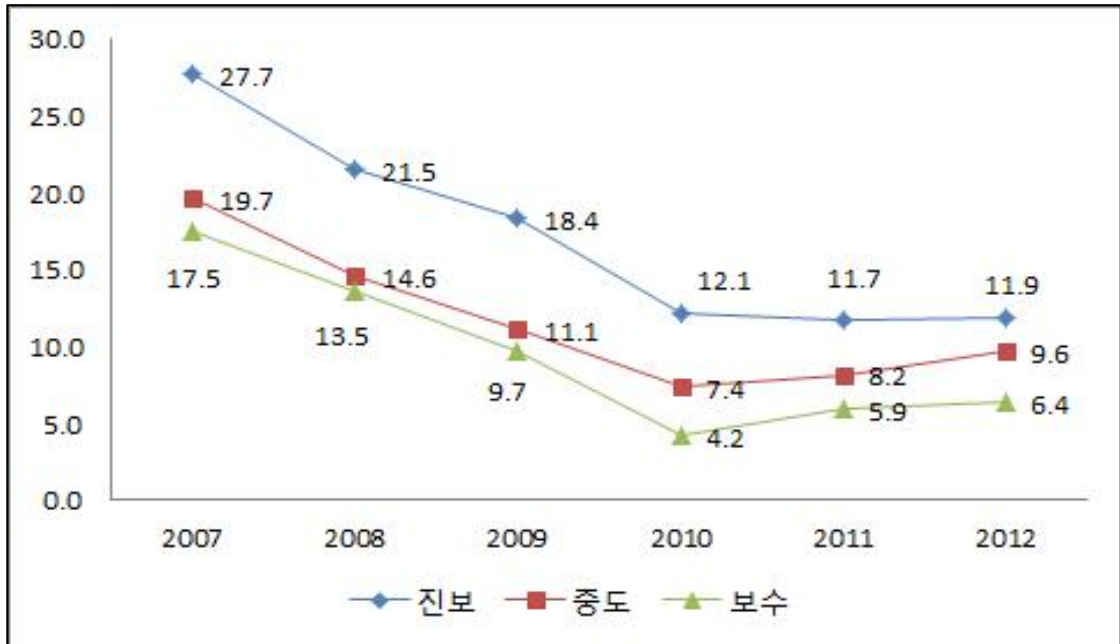


대미위협도의 응답자 자신의 정치적 이념형에 따른 결과는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대미위협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념형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지속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에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세 집단의 대미위협도가 큰 변화없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층의 응답자들 간의 인식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약화로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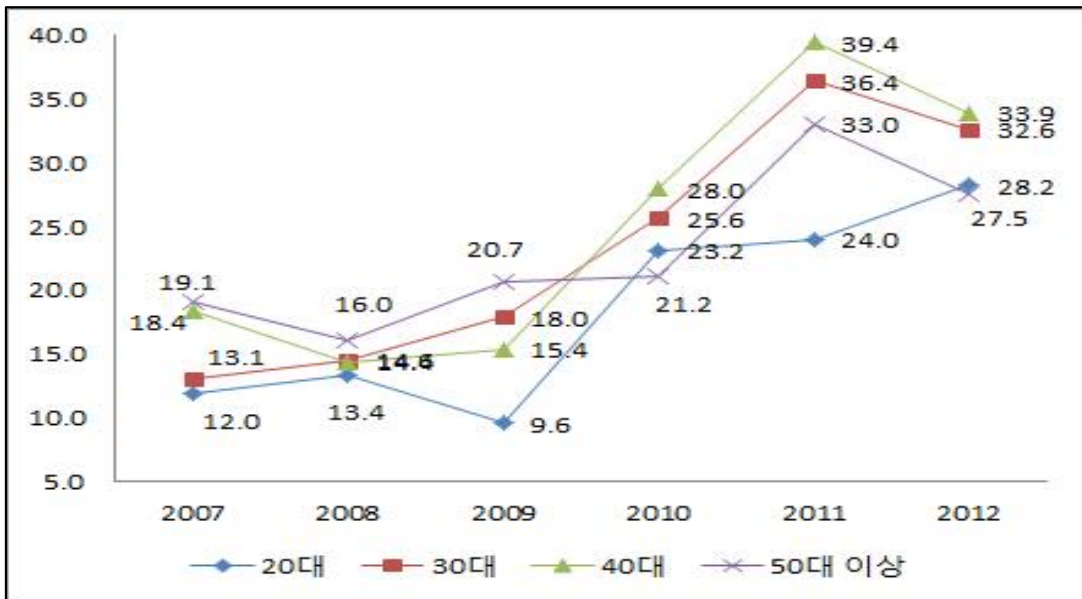


### 3.2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연령별 대중위협도는 2011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증가추이가 발견된다. 2011년에는 20대의 대중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20대의 대중위협도가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세대의 대중위협도는 감소하였다. 20대와 50대의 대중위협도가 다른 세대들보다 약 5% 정도 낮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그림 13 연령별 대중위협도,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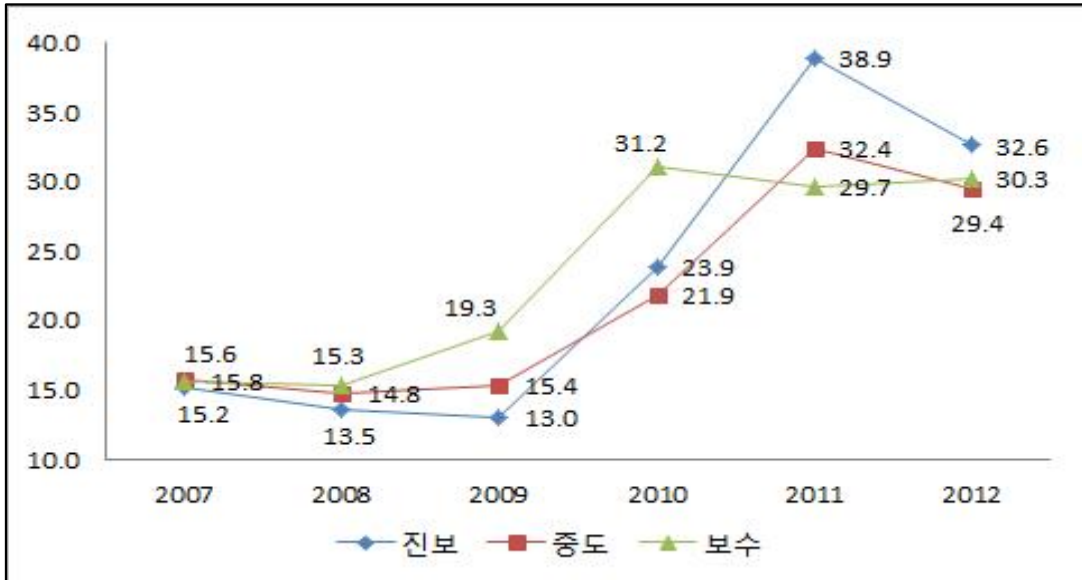
〈그림 14〉에 나타나듯이 통일의식조사 실시 첫해인 2007년에는 진보, 중도, 보수 이념집단이 느끼는 대중위협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점차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보수의 대중위협도는 19.3%, 진보는 13%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천안함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가 23.2%까지 급상승하였고, 보수의 대중위협도도 31.2%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진보와 보수의 대중위협도 증가추세가 역전되어 진보층의 대중위협도가 보수층의 대중위협도가 약 9.2% 가량 높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중도의 대중위협도가 감소하고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변하지 않고 30% 선에서 유지되어 이념집단 간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진보층의 응답자들의 대중위협도가 보수층의 대중위협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대중위협도와 대북위협도를 비교해보면, 진보층의 대북위협도의 증가와 대중위협도의 감소가 맞물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층의 대북위협도는 2010년 50.4%, 2011년 37.1%, 2012년 42.1%로 나타난 반면, 진보층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 23.9%, 2011년 38.9%, 2012년 32.6%로 나타나 대북위협도의 증가

는 대중위협도의 감소로,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진보층의 응답자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4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2007-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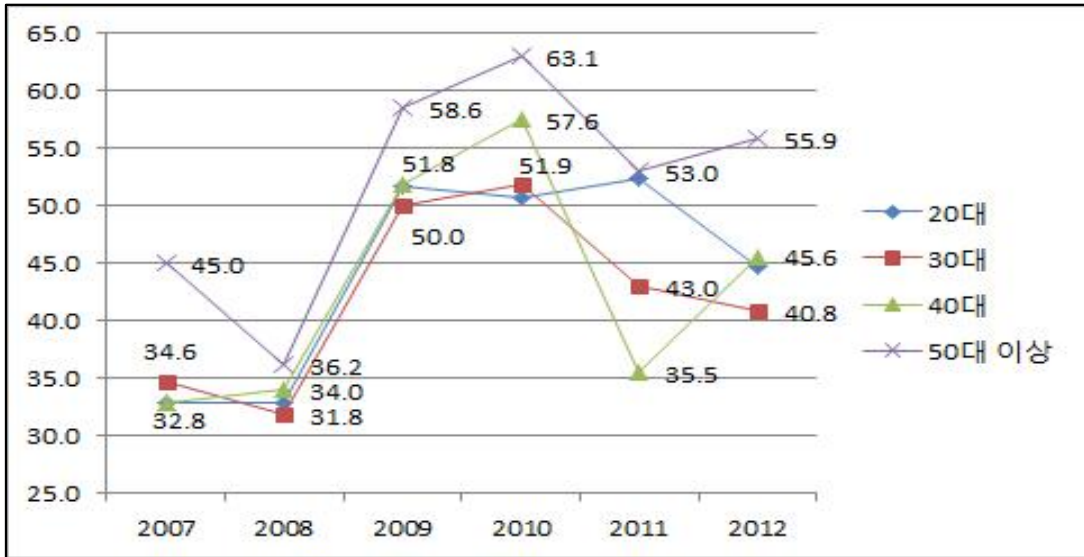


### 3.3.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연령별 대북위협도는 지난 6년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에 나타나듯이 2007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세대의 대북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의 대북위협도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와 함께 연령별 대북위협도의 차이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서는 20대와 50대의 차이가 약 12.4%에 달할 정도로 세대 간 격차가 커졌다. 2011년 조사에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대북위협도가 감소하고 50대와 40대의 대북위협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결과 특징은 50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대북위협도가 적게는 약 10%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5 연령별 대북위협도,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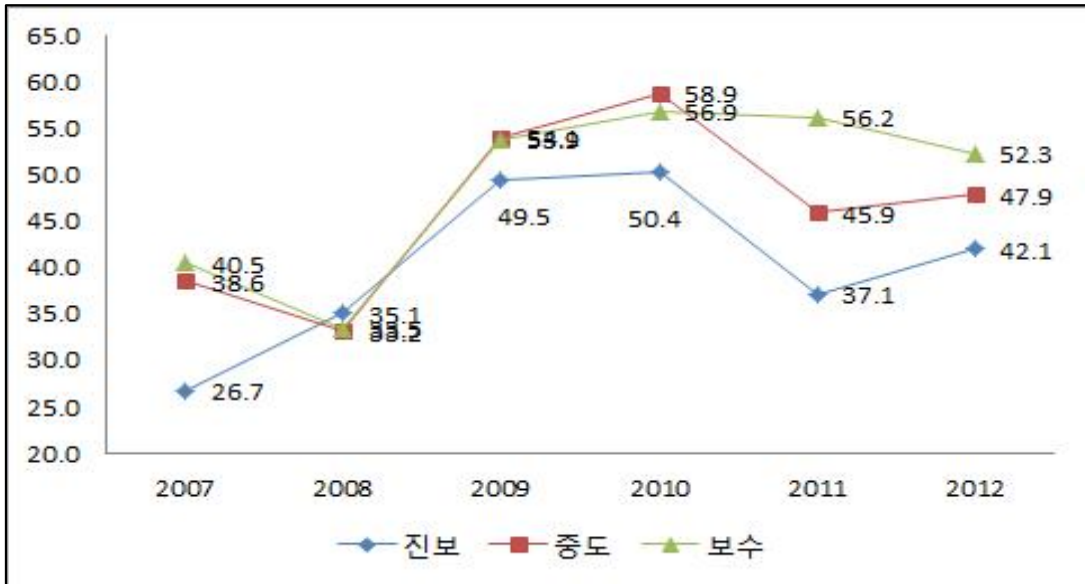
(단위 : %)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인식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변국가의 위협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부터 대북위협도와 대중위협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느끼는 대북위협도가 진보층이 느끼는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 2007-2012

(단위 : %)



한 때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지만, 진보와 중도층에서의 대북위협도는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념집단 간 차이도 뚜렷해졌다. 그런데, 2012년에는 진보와 중도의 위협도가 약간 높아졌으며, 보수층의 대북위협도도 약간 낮아져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약 10% 정도로 좁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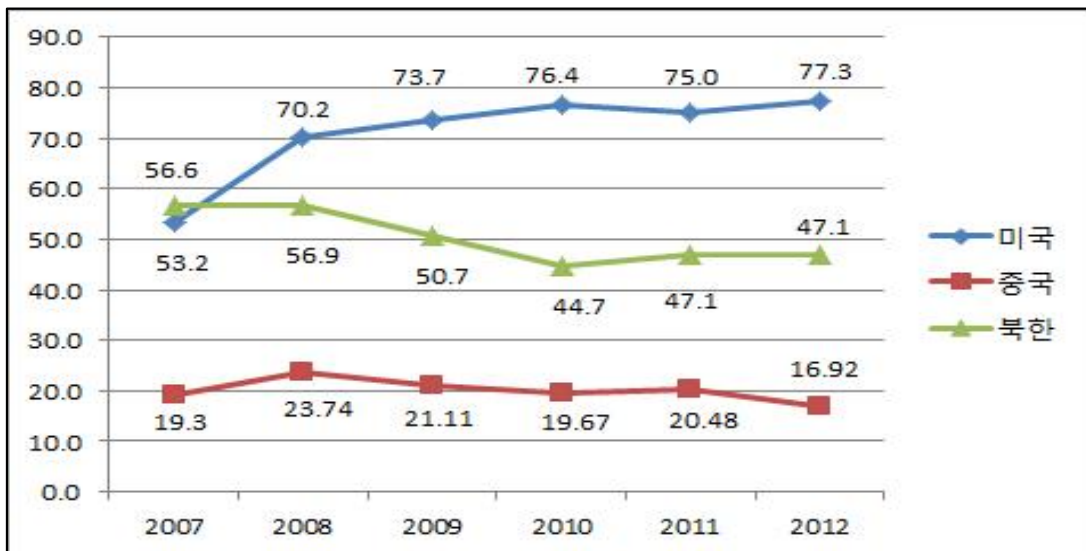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는 달리 대북위협도는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국내 혹은 남북관계의 틀에서만 해석하려는 시도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강화되는 북중 협력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대미, 대중위협도에 대한 인식과 대북위협도의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 4. 미국, 중국, 북한의 국가이미지 : 협력, 경계, 적대 이미지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5개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가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개별국가에 대해 구조화된 인지의 집합을 의미하며, 인지심리학에서 널리 수용되어지는 스키마 개념으로 국제정치 연구에서 응용하여 이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타국의 이미지를 통하여 정당화시킴으로써 내부적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주변 4개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으로 나누어서 대답할 수 있으나, 북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원대상” 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여기서는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이미지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7 주변국가 이미지 : 협력대상, 2007-2011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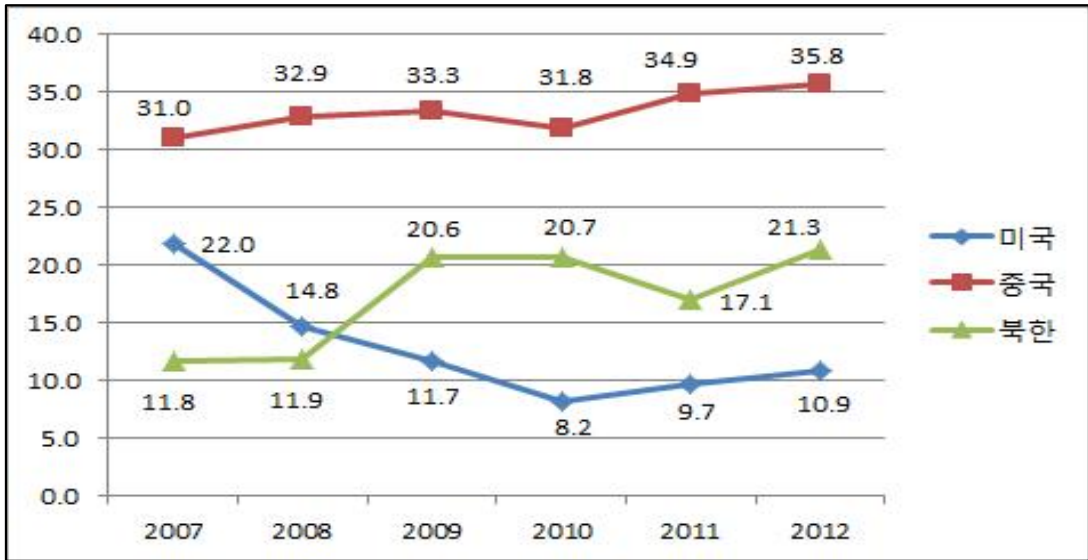
〈그림 17〉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협력대상, 즉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53.1%에서 2008년 70.2%로 상승한 이후,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70% 중후반대를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기 미국의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최고 2008년 23.7%에서 최저 2012년 16.9%로 최대 6.8%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20%를 전후하여 매우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2008년 56.9%에서 2010년 44.7%로 떨어진 후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여기는 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2008년 22.3%에서 2012년 15.8%로 낮아지고 있다.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부터는 등락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후반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즉,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중·미에 대한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 이후 큰 변동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변국에 대한 경계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국민들은 20%가 넘었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이후 경계이미지가 10.9%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는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주변국가 이미지 : 경계대상, 2007-201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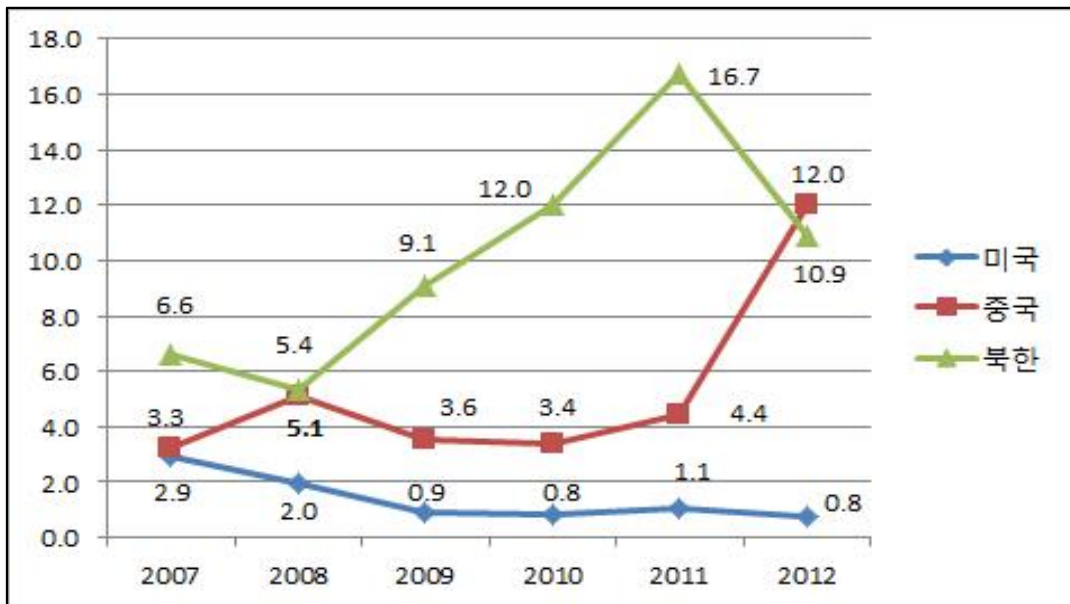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경계이미지도 30% 초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와 위협도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중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2007년과 2012년 각기 약 12%에서 2012년 21.3%로 증가하였다. 2011년 북한의 국가이미지가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을 통해 경험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계의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국가에 대한 적대이미지는 <그림 12>에 나타난다. 앞의 결과들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적대적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변국의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중국의 국가이미지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북한의 적대적 국가이미지는 2012년에는 약 6% 가량이 감소한 반면, 중국의 적대적 국가이미지는 7%가 증가하였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우경화 경향을 띠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들

에 대한 우려의 반영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지속 혹은 변화할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19 주변국가 이미지 : 적대대상, 2007-2012

(단위:%)



## 5. 중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 (2011-2012)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해결방안을 두고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도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모두가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의 악화를 천안함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 중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하지만 인식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국의 위협도와 남북관계악화의 책임의 정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을 다른 설문 문항들과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대북 혹은 대중인식 관련 논의에 활용할 수 있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5.1 천안함 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인식

〈표 1〉은 천안함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를 신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첫 번째 셀은 2010년 조사에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응답자들 중 중국을 가장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23.3%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셀은 2012년 조사에서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중국을 가장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2.1%라는 것이다.

표 1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위협도, 2010-2012

(단위 : %)

	2010	2011	2012
신뢰한다	23.3	34.0	29.6
그저그렇다	25.8	36.2	29.6
신뢰하지 못한다	24.7	30.8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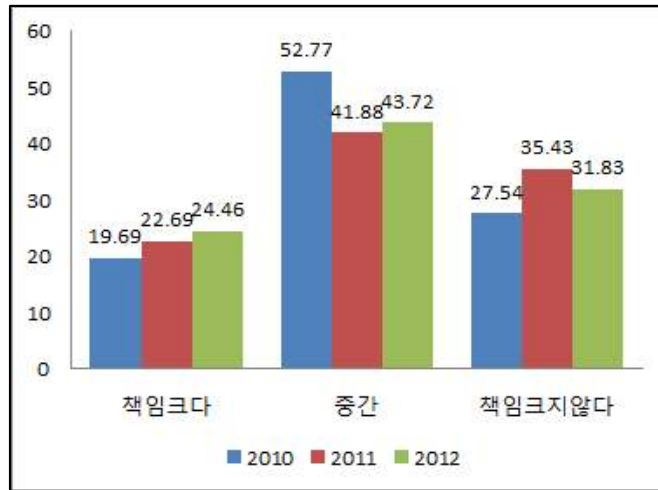
〈표 1〉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와 대중국위협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2010년과 2012년에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보다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그룹에서 대중국위협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2011년에는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대중위협도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2년에는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룹의 대중위협도가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대중위협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 번의 조사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찾기는 어렵다.

〈그림 20〉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의 발표를 신뢰하는 응답자와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2012년 조사에서는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응답자 그룹에서

는 중간이라는 응답은 약간 줄고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약간 늘었다. 반면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절대적인 비율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 보다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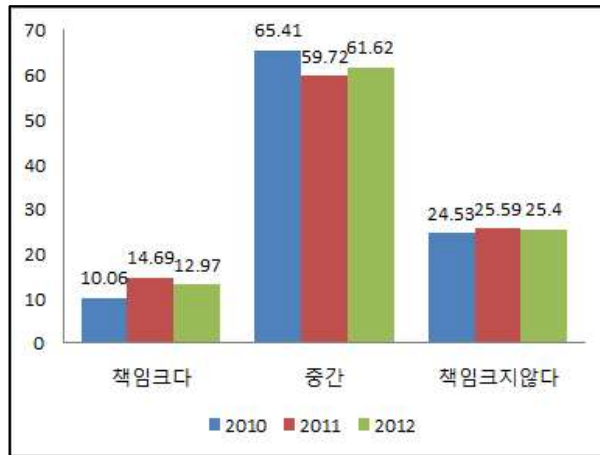
그림 20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신뢰도와 남북관계악화의 중국책임

(단위 : %)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책임이 크다는 응답보다는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보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응답자들이 중국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하는 비율이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발표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들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21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불신과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단위 : %)



## 5.2 북·중 협력강화와 대중국인식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북한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성의 심화에 대한 우려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중 협력 강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약 3.6% 감소하였고 별로 상관없다는 응답률이 약 2.8%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표 2〉의 자료는 이러한 변화의 추이보다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과 북한과 중국의 다방면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정부가 가질 수 있는 대북레버리지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

표 2 북·중 협력 강화에 인식, 2011-2012

(단위 : %)

	2011	2012
우려스럽다	76.1	72.5
별로 상관없다	20.3	23.1
바람직하다	5.6	4.4

〈표 3〉은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와 대중국위협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두 해 모두 북·중 협력 강화를 우려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각기 해당연도의 평균 대중국위협도보다 높은 비율로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하고 있다.

표 3 북·중 협력 강화와 대중국위협도

(단위 : %)

		미국	북한	중국
2011	우려스럽다	5.8	47.6	36.2
	별로 상관없다	17.6	43.0	22.5
	바람직하다	16.3	27.9	39.5
2012	우려스럽다	8.9	47.7	32.2
	별로 상관없다	10.8	47.3	25.3
	바람직하다	13.2	41.5	30.2

〈그림 22〉는 북중 협력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자들 중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정도에 대한 응답비율이며, 〈그림 23〉은 북중 협력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들 중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정도에 대한 응답비율이다. 북중 협력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자들 중 약 50%가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중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들도 2011년 68.8%, 2012년 52.8%의 비율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두

집단에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각기 약 4%와 7%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22 북중협력 우려와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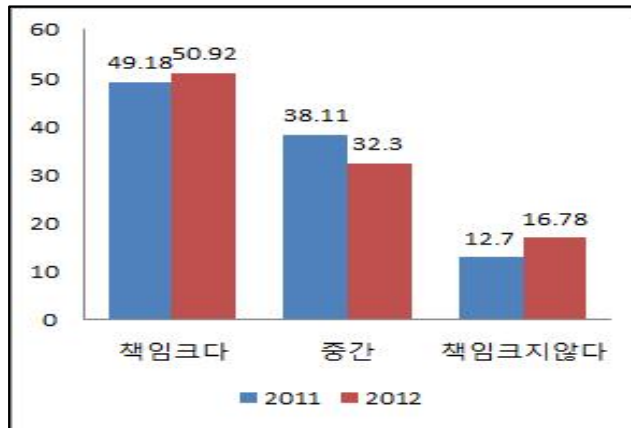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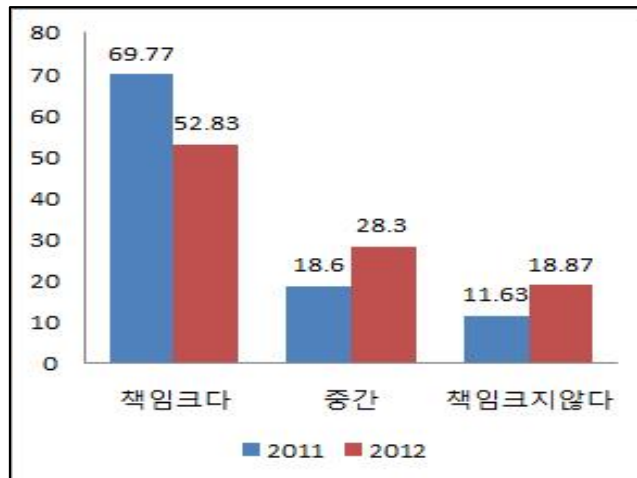


그림 23 북중협력 바람직함과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단위 : %)



## 7. 맺음말

지난 6년 동안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2010년 이후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친밀도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대중친밀도는 2010년에 비하여서는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년 연속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즉 대미친밀감의 감소는 대북친밀도의 증가로 반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친밀도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조사에서 대북위협도와 대중위협도는 각기 47%와 30% 정도에서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의 추이를 고려하면 대북위협도의 증가는 대중위협도의 감소로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대북위협도에 대한 이념집단 간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음이 발견된다.

북·중·미에 대한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 이후에 큰 변동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계의 이미지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이미지는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적대이미지가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적대이미지는 2012년에는 8%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2012년 통일의식조사의 대외의식 파트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조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자료해석은 추세분석과 교차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1차적 해석들을 인과관계로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2007년부터 매해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들을 통하여 대외의식의 추이를 확인하

고 다른 영역들의 이슈들과 교차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심층자료 분석은 연말에 출간될 보고서를 통하여 제시될 예정이며, 통일의식조사의 자료가 더 많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 · 통일정책의 재정립

대북정책 : 핵문제와 남북협력 분리?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남남갈등 : 변화와 지속?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주철 (KBS남북교류협력단),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 대북정책, 핵문제와 남북협력 분리?

장 용 석 (IPUS 선임연구원)

## 1. 시작하는 말

2012년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먼저 올해 4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시 3년 상을 치렀던 전례와 달리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00일이 된 2012년 3월 25일 100일 추모대회를 치른 뒤 4월에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당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였다. 5월에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0월에는 중국에서 18차 당대회가 열리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 대표되는 4세대 지도자들이 퇴진하고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다.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국들에서 새로 출범하였거나 출범할 정부들은 기존의 대북, 대한반도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의 틀과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

다. 새로 출범한 정부들이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새로운 대북접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북한도 관련국들의 새로운 정부를 상대하면서 협의 틀과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더해 강경한 행태들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싫던 좋던 유동적인 정세가 전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핵심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전략적인 대북협력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핵활동 동결 조치였던 소위 '2.29합의' 이행을 무산시킴으로써 미국으로서는 뚜렷한 대북정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둘러싼 현재의 대치와 경색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과거 부시 행정부 2기 때처럼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핵개발과 도발에는 보상이 아닌 징벌을 내릴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관련국들이 협력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 미국이나 중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정책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내부정세와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으나 정책 방향이나 주요한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특히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더욱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여러 후보

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읽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 시급한 정책 분야나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를 찾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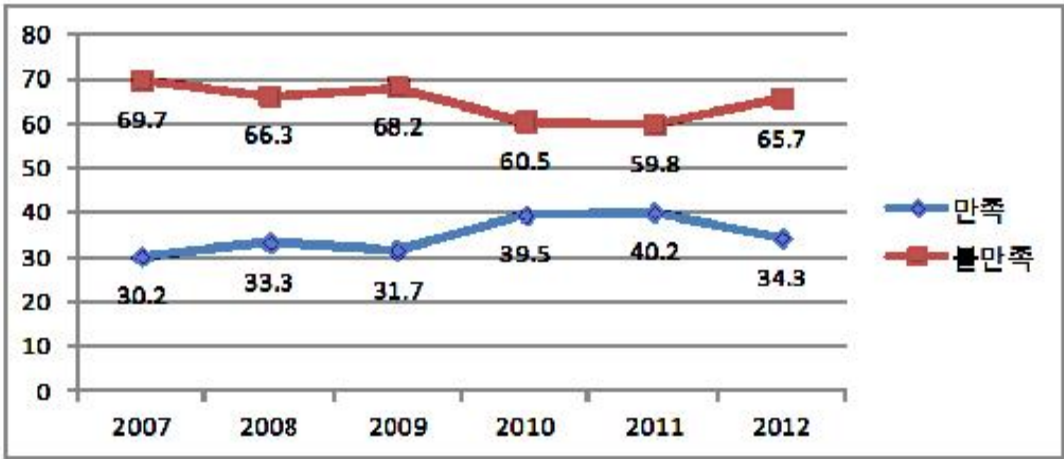
## 2.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

### 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와 차기정부 대북정책 기조

####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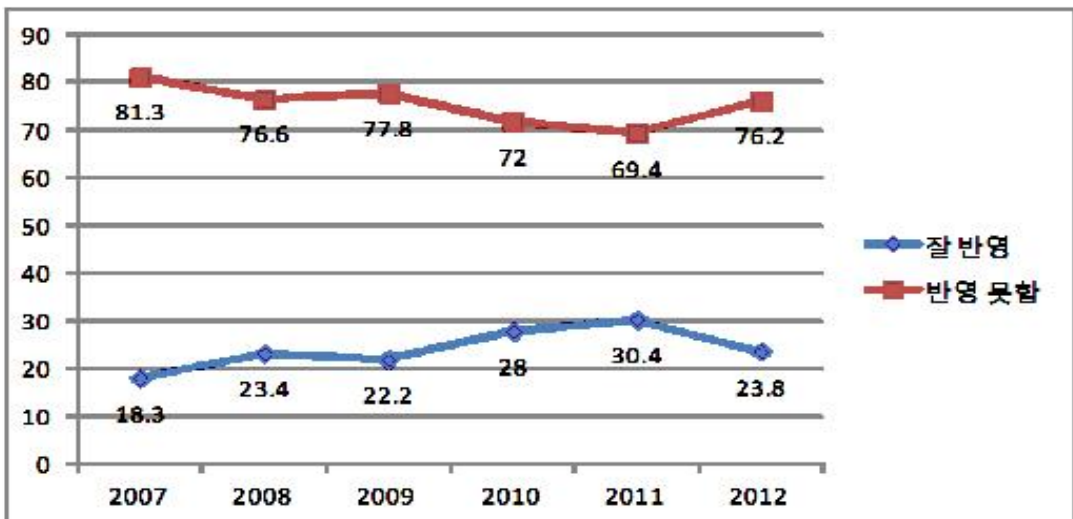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5.7%는 다소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지난해 40.2%에 비해 5.9%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정도는 1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에 비해 다소 올라간 것이다. 2007년의 경우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는 비율이 30.2%로서 2012년에 비해 4.1% 낮았다.

〈그림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3.8%만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6.2%는 별로 또는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6.6% 줄어들었다. 반면 2007년과 비교하면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5.5% 늘어났다.

〈그림 2〉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31.8%와 31.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0대에서는 3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3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대에서는 1.9%, 40대에서는 3.6% 높아진 것이지만 30대에서는 3.8%, 50대에서는 1.1% 낮아진 것이다. 올해 연령대별 만족 정도를 2007년과 비교하면 만족 정도가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각각 1%, 8.7%, 8.8% 높아졌으나 30대에서는 3.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20, 40, 50대와 30대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 정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29 대	30.8	28.0	28.9	36.0	29.9	31.8
30대	34.4	30.3	27.2	36.9	35.0	31.2
40대	24.9	34.8	33.2	38.7	40.0	33.6
50대	30.5	40.7	38.2	47.2	40.4	39.3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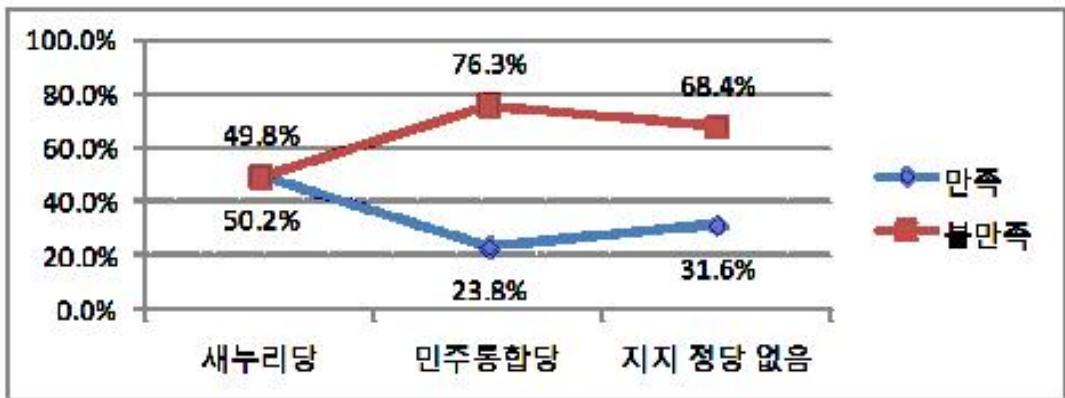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만족 정도가 낮아진 반면 충청권에서는 만족 정도가 18.7%나 급상승하였다. 올해의 만족 정도를 2007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6%, 충청권은 7.4%, 영남권은 12% 상승한 반면 호남권의 경우 23.7% 하락하였다.

〈표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만족 정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도권	26.7	29.0	31.3	38.6	38.8	32.7
충청권	28.8	29.8	22.9	37.3	17.5	36.2
호남권	43.7	16.1	19.3	18.5	23.3	20.0
영남권	31.3	49.6	41.7	51.9	46.6	43.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이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50.2%가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3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지자들의 23.8%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 정도가 50.2% 대 49.8%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76.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9%를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무당파(지지정당 없음)의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민주통합당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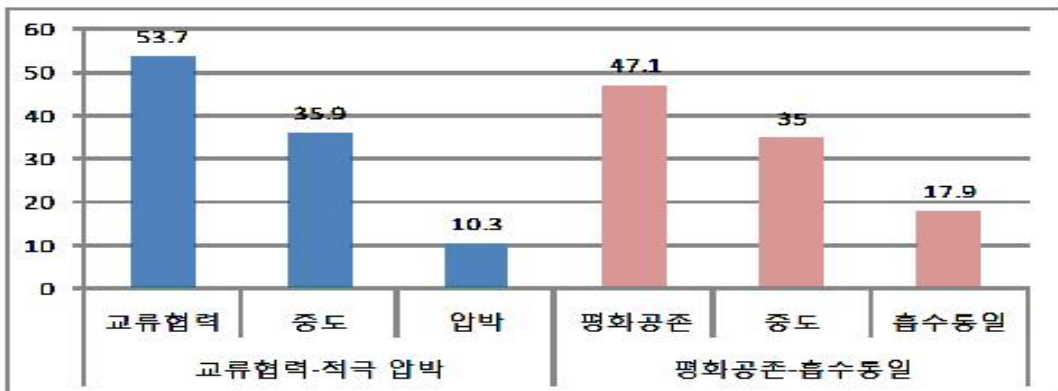
## 2) 차기정부 대북정책 기초

2012년 12월 대선과 2013년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2011년과 같이 대체적으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협력에서 적극적인 압박까지를

1~10까지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은 4.2점으로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미하지만 2011년 4.23보다 낮은 수치로서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공존에서 흡수통일까지도 10점 척도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평균은 4.6으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평균 4.66보다 미세하지만 낮아진 수치로서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그 만큼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교류협력-중도-압박’ 과 ‘평화공존-중도-흡수통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sup>1)</sup> 아래 그림과 같이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은 53.7%로서 절반을 상회하는 반면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은 47.1%로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교류협력문제에서는 20대가 30대나 40, 50대보다 압박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압박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호남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화공존문제에서는 50대 이상에서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보다는 20대에서 미세하지만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하여 20대와 40대, 50대가 적극 압박보다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쪽으로 약간 이동한

1) 1~4점까지는 교류협력, 5~6점은 중도, 7~10점은 압박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빈도에 따른 비율을 산출

반면 30대는 압박 쪽으로 약간 이동하였고, 평화공존문제와 관련해서는 20대와 30대, 40대가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50대는 흡수통일 쪽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류협력문제나 평화공존문제 모두 수도권에서 압박이나 흡수통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충청권과 호남권이 압박을 선호하는 쪽으로 약간 움직인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교류협력 방향으로 약간 움직였으며 평화공존문제와 관련해서도 충청권과 호남권이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표 3〉 연령대 및 지역별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교류협력-적극압박]		2011	2012	[평화공존-흡수통일]		2011	2012
전체 평균		4.23	4.2	전체 평균		4.66	4.6
연령대 별	19-29대	4.35	4.28	연령대 별	19-29대	4.85	4.59
	30대	4.16	4.19		30대	4.66	4.56
	40대	4.17	4.14		40대	4.69	4.6
	50대	4.24	4.19		50대	4.5	4.63
	이상				이상		
지역별	수도권	4.4	4.36	지역별	수도권	4.84	4.71
	충청권	4.07	4.3		충청권	4.34	4.47
	호남권	3.41	3.68		호남권	4.22	4.37
	영남권	4.26	4.03		영남권	4.66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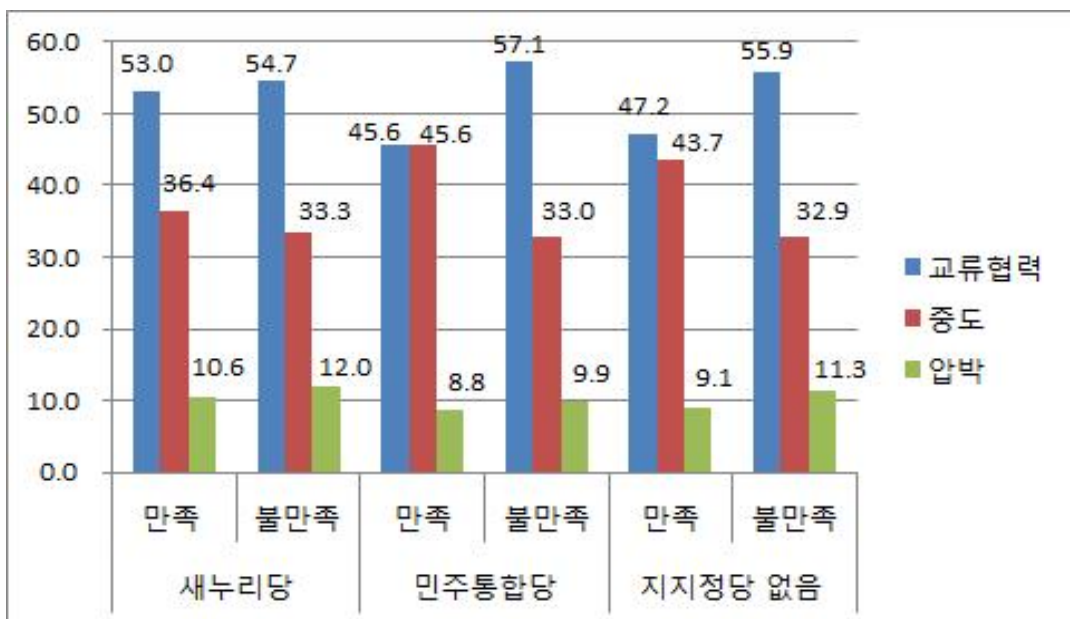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를 기준으로 교류협력과 적극적 압박 가운데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을 지지한 경우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지지한 비율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53.0%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54.7%를 차지하였다. 반면 적극적 압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경우가 10.6%,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2.0%를 차지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의 경우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와 무관하게 50% 이상이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경우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가 45.6%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에서는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가 57.1%로 나타났다. 양측 간의 차이는 11.5%로서 1.7%의 편차를 보인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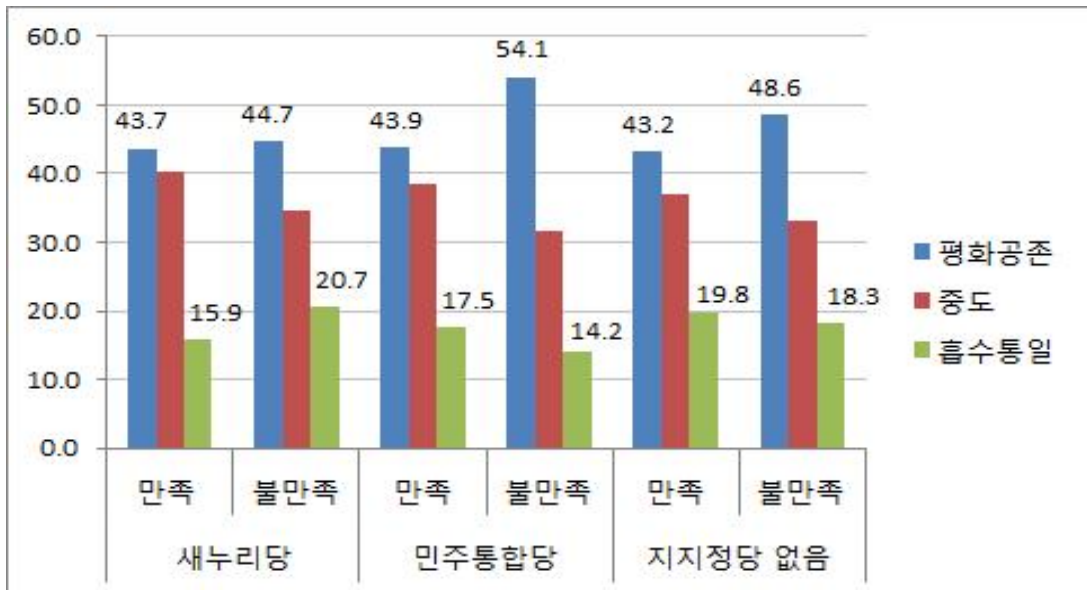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 47.2%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에서는 55.9%로 나타났다. 만족과 불만족 간에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8.7%의 편차를 보여 민주통합당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림 5〉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1



평화공존과 흡수통일 가운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물어본 결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7%,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44.7%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9%,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54.1%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교류협력과 압박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10.2%의 편차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2%,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48.6%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5.4%의 편차를 보였다.

〈그림 6〉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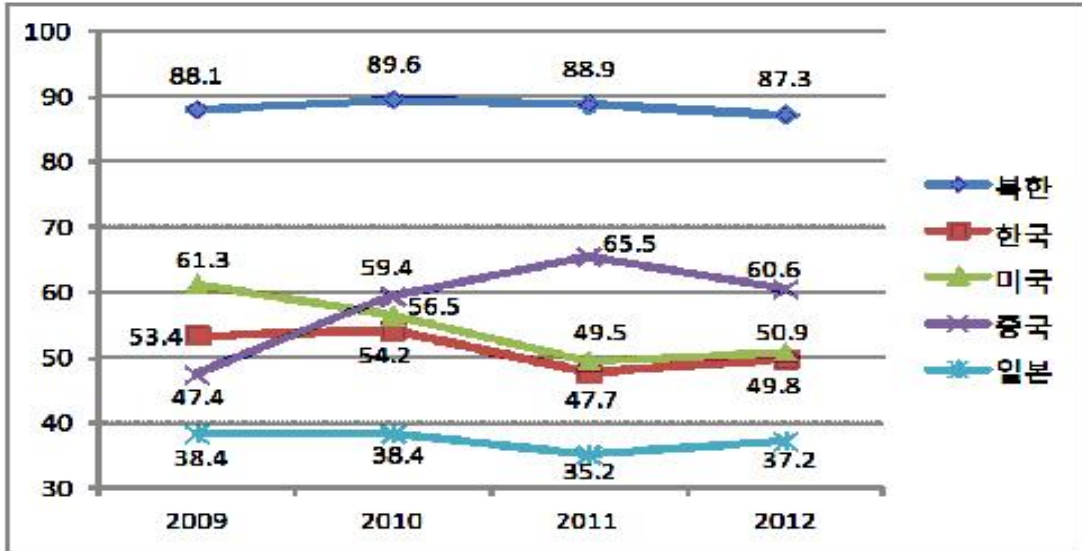
#### 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이명박 정부 5년 간 남북관계는 사실상 198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하였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감안하면 70년대 이전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하였

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에 이어 11월에는 대청해 전까지 발생하면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반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10년 들어서는 3월의 천안함 사건에 이어 11월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간 비핵화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하면서 북한이 대남비난을 강화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회복의 계기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각국의 책임 정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책임이 아주 또는 조금 크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국이며,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늘어난 반면 북한과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87.3%로 지난해 88.9%보다 1.6% 줄어들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8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고 지목된 중국의 경우 60.6%로서 지난해 65.5%보다 4.9%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는 50.9%로 지난해 49.5%보다 1.4% 늘어났고 그 다음인 한국의 경우는 49.8%로서 2.1%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는 37.2%로서 지난해 35.2%보다 2% 높아졌으나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30%대에 머물고 있다.

〈그림 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가 86% 전후로 수렴되는 반면 50대 이상은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9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영남권이 90% 전후로 수렴되면서 가장 낮은 호남권과의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표 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정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19-29대	82.9	85.8	85.7	86.7
	30대	88.1	89.7	86	85.1
	40대	86.9	90.8	88.2	86.3
	50대	95	92.2	94.2	90.4
	이상				
지역별	수도권	90.9	90.5	89	86.2
	충청권	90.7	90.7	91.5	90.5
	호남권	77.3	79.8	84.5	82.6
	영남권	87	91.7	87.8	89.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는 50% 초반대로 수렴되는 반면 50대 이상은 4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40%대인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60%대를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8.5%가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6.4% 감소하였다.

〈표 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 별	19-29대	45.5	52.8	42.2	53.3
	30대	59.1	53.5	49.8	51.1
	40대	55.1	59.7	50.8	53.4
	50대	53.6	50.4	47.4	43
	이상				
지역별	수도권	57	59.5	41	49.5
	충청권	55.1	53.4	62.8	62.1
	호남권	61.3	63.9	70.1	69.6
	영남권	46	41.1	47.1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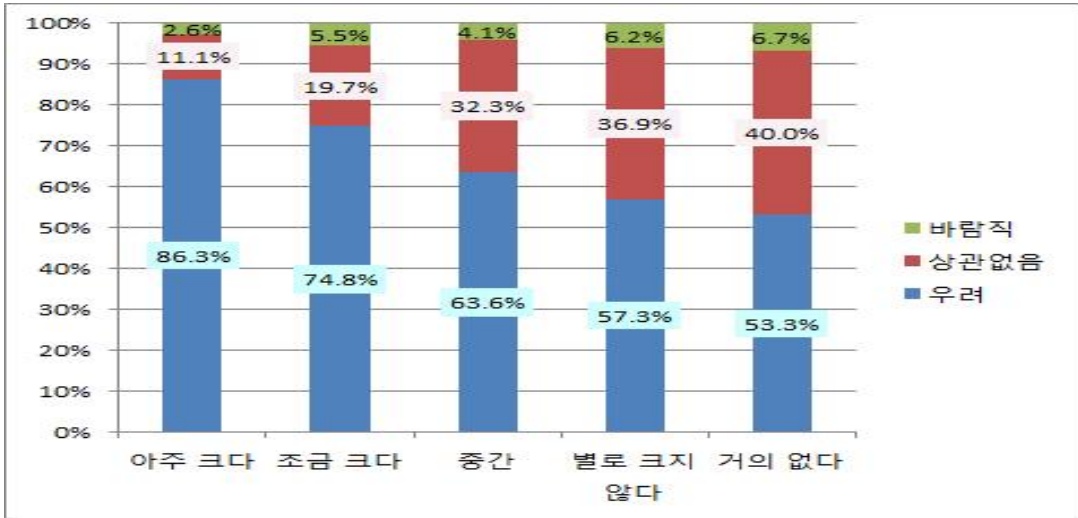
북한 다음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큰 나라로 인식되는 중국에 대해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가 6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대의 경우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하락하고 충청권에서 약간 상승하여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으로 수렴되는 반면 영남권에서는 70%대로 상승하였다.

〈표 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19-29대	41.7	55.4	59	61.2
	30대	50.2	59.6	65.9	60.3
	40대	54.6	62.3	68.3	61.9
	50대				
	이상	42.6	60.5	67.4	59.3
지역별	수도권	51.1	61.2	64.2	55.4
	충청권	45.8	67.4	56.8	57.8
	호남권	52.9	61.3	75.9	61.7
	영남권	41.7	51.8	66.2	70.5

한편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최근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데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자들 중 86.3%가 북중협력 강화에 우려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의 책임이 거의 없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53.3%가 북중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이 협력대상인지 적대대상인지 등 중국에 대한 이미지나 지지하는 정당과는 유의할만 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와 북중협력 강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30대와 40대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20대에서는 6.8% 증가하였고 50대 이상에서는 미세하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감소한 반면 수도권에서 5.4% 증가하였고 충청권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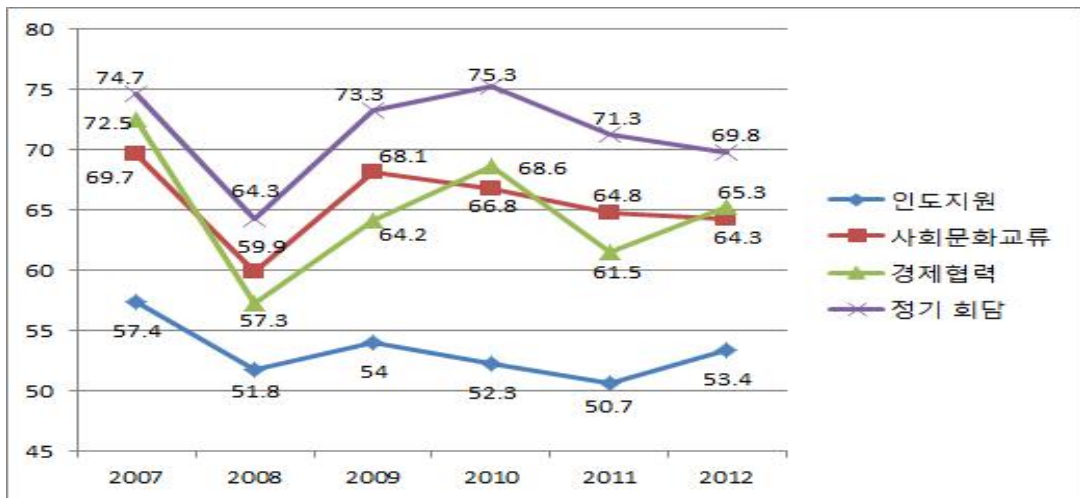
〈표 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정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19-29대	60.7	54.1	45	51.8
	30대	65.1	57.1	51.4	51.4
	40대	63.2	59.7	54.1	55
	50대	55.7	54.9	47.3	46.3
	이상				
지역별	수도권	66.7	57.5	41.8	47.2
	충청권	54.2	58.5	51.3	51.7
	호남권	69.7	67.2	69	62.6
	영남권	52.8	49.3	56.2	54.5

## 다. 통일에 대한 대북정책 분야별 기여 정도

대북정책 분야별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각각 65.3%와 64.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인도지원이 가장 낮은 53.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보다는 당국 차원의 접촉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정책별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경제협력과 인도支원은 각각 3.8%와 2.7% 증가하였다.

〈그림 9〉 통일에 대한 대북정책 분야별 도움 정도



지난해에 비해 비율이 증가한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5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40대에서 감소하여 대체로 60% 중반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지원의 경우도 40대가 감소한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증가하여 대체로 50% 중반대에 수렴되는 양상이나 20대의 경우 지난해 비해 3.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에 머물렀다.

〈표 8〉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 협력	19-29대	72.8	57.3	63.5	65.7	58.4	63.9
	30대	75.2	58.8	63.5	65.4	59.2	65.6
	40대	74.4	58.7	67.5	73.1	70.3	66.8
	50대						
	이상	67	54	61.9	70.5	58.1	64.9
인도 지원	19-29대	57.9	50.8	50.5	49.5	45.6	49
	30대	58.3	53.6	52	49.4	48.2	56.4
	40대	57	55.6	61	58	56.7	53.7
	50대						
	이상	56.3	46.7	52.4	52.4	51.4	53.9

#### 라.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와 북한인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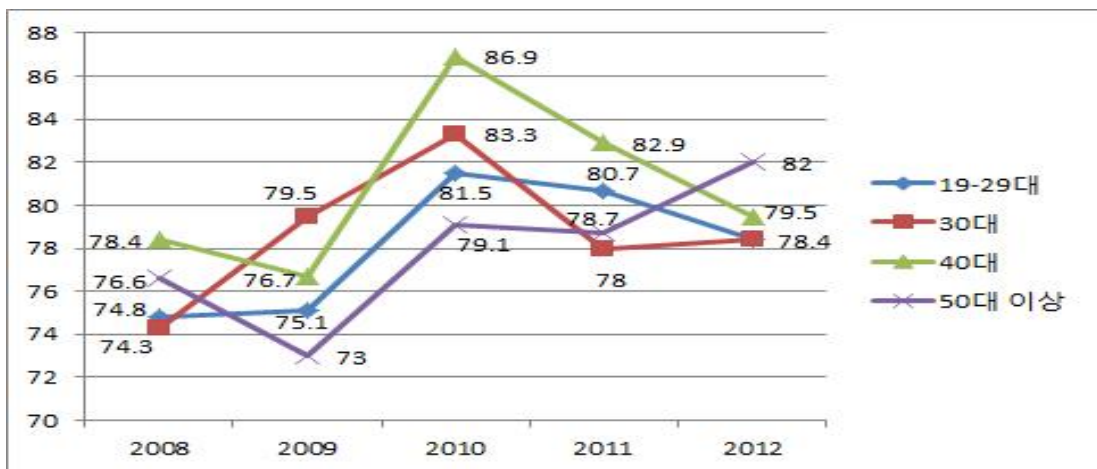
주요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를 살펴보면 북한인권 개선이 7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79.3%를 차지하였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높았으며 미군 철수는 22.5%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해소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회담 정례화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9〉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상회담 정례화	66.8	61.7	72	69.7	67.7	68.5
북한 개혁개방	78.3	68.9	80.2	78.2	79.4	79.3
군사적 긴장해소	79.9	70.6	83.5	83.6	83.2	77.4
미군 철수	31.1	30.6	24.9	24.3	24.1	22.5
이산가족·국군포로	79.9	72.2	72.9	75.7	75.8	74
북한인권 개선		76	76.2	82.8	80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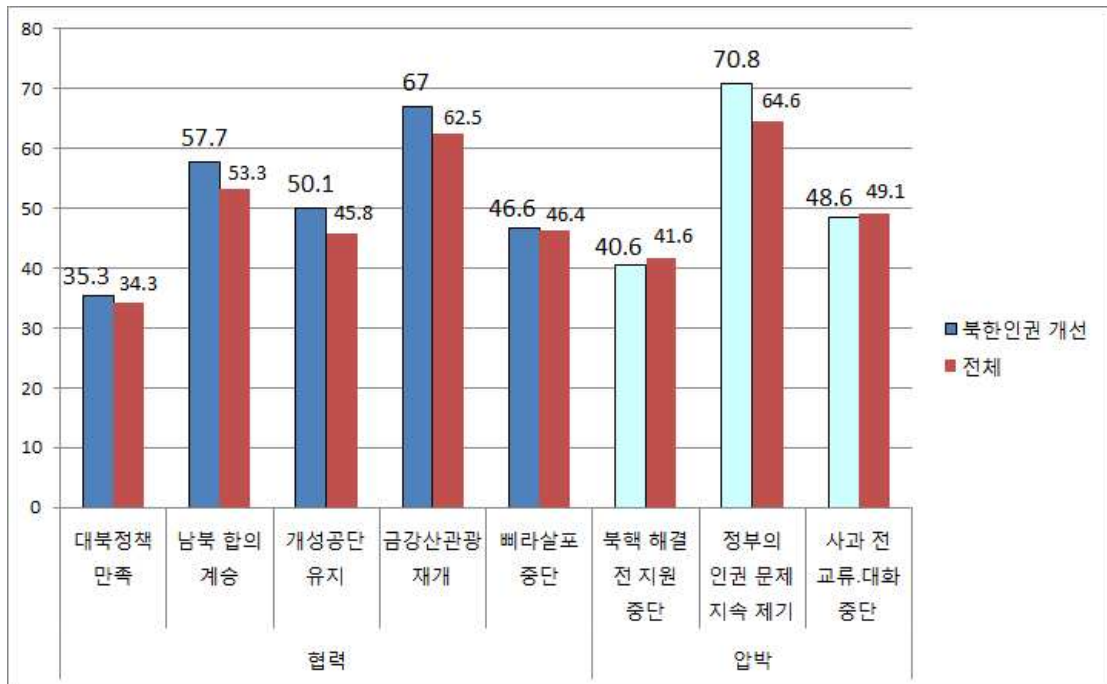
주요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보면 50대 이상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로서 79.5%이며 20대와 30대는 78.4%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서 3.3% 높아졌으며 30대에서도 0.4% 올라갔다. 반면 40대의 경우 3.4% 낮아졌고 20대의 경우도 2.3%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와 30대, 40대는 70% 후반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0〉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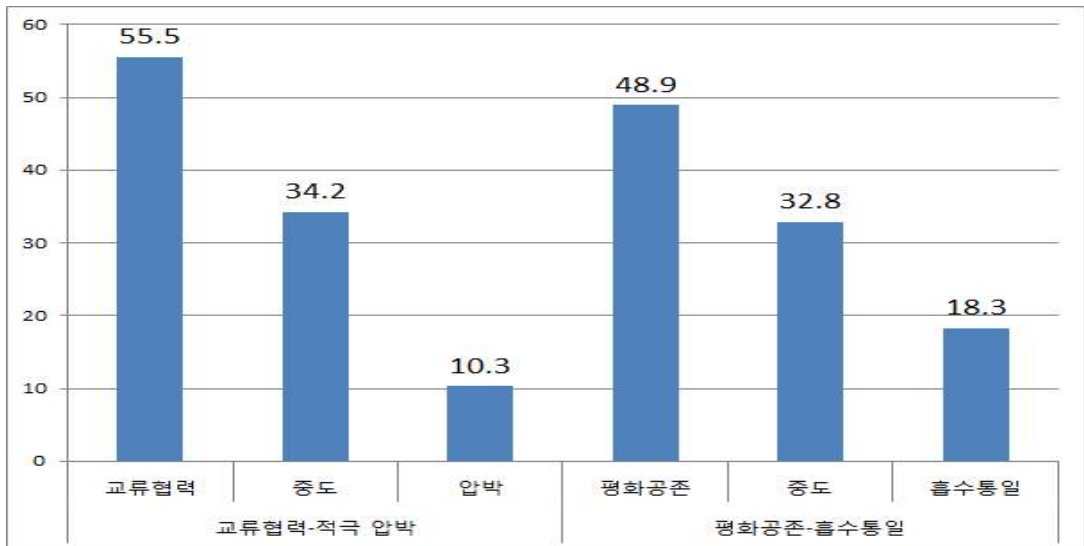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정도는 조사 대상자 전체의 만족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대북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에 대체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남북 간 합의 계승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보다 2.4%,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는 4.3%,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서는 4.5% 높게 나타났고, 삐라살포 중단에 대해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들보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전체 응답자들보다 1.0%,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0.5%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8%로서 전체 응답자들보다 6.2%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그림 11〉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현안별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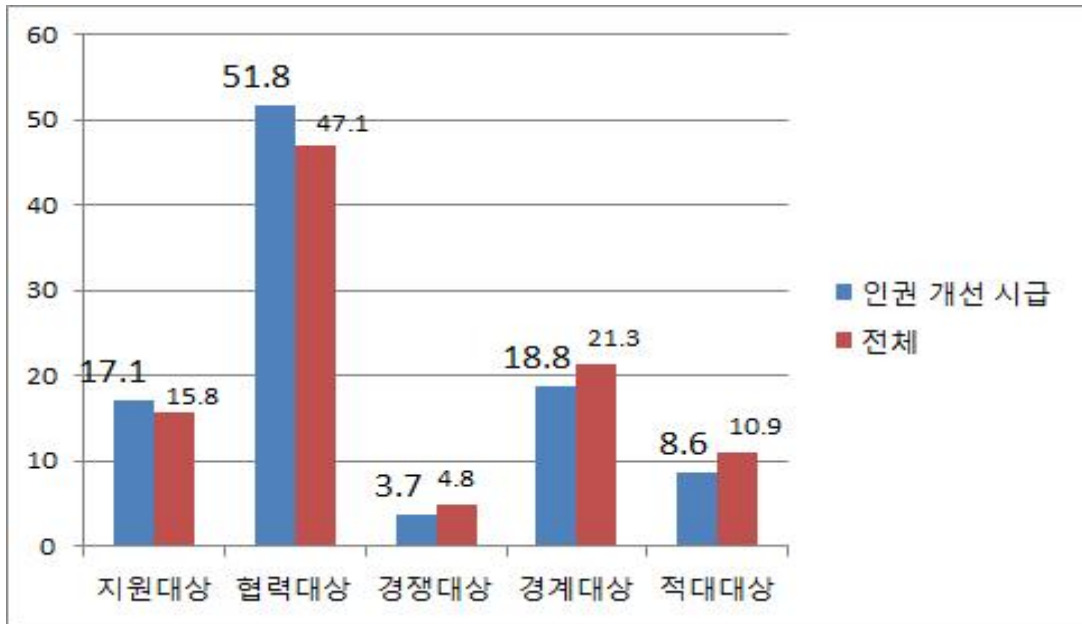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가 55.5%인 반면 대북압박에 대한 선호는 10.3%에 불과하였고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48.9%로 거의 절반에 이른 반면 흡수통일에 대한 선호는 18.3%로 나타났다.

〈그림 12〉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 중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원대상으로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68.9%가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8.6%에 불과하였고 경계대상까지 포함해도 비우호적인 인식은 27.4%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전체 응답자들에 비해 우호적인 대북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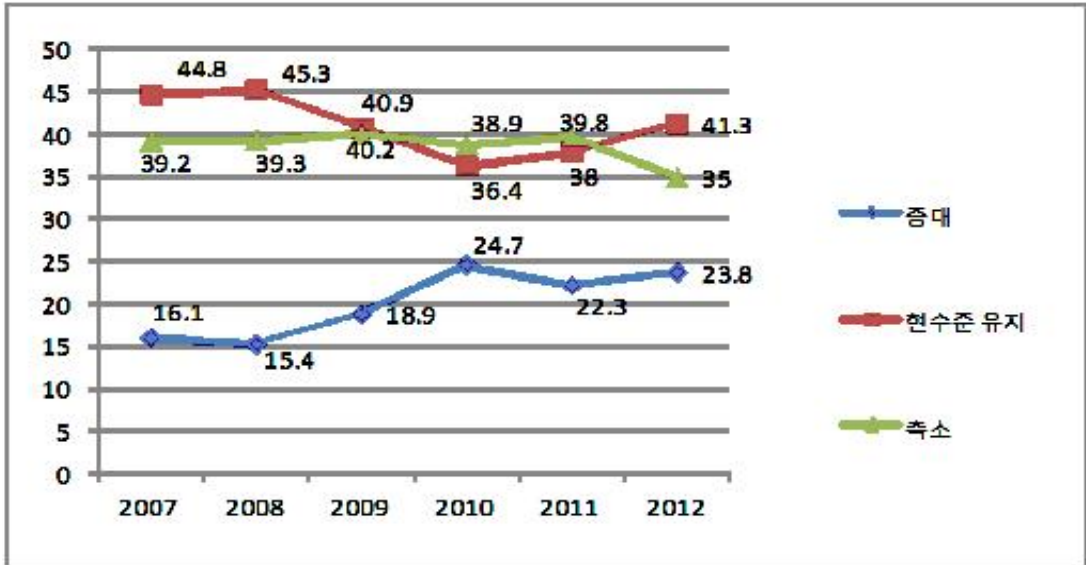
〈그림 13〉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 마.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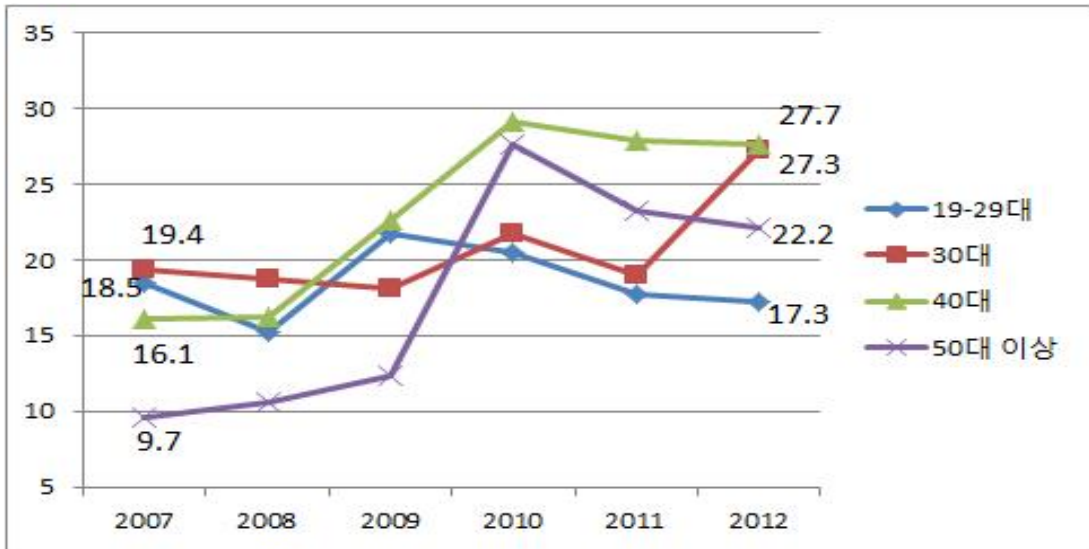
대북지원 수준에 대해서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 증가하였고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 증가한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감소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늘어난 반면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5%와 4.2% 줄어들었다.

〈그림 14〉 대복지원 수준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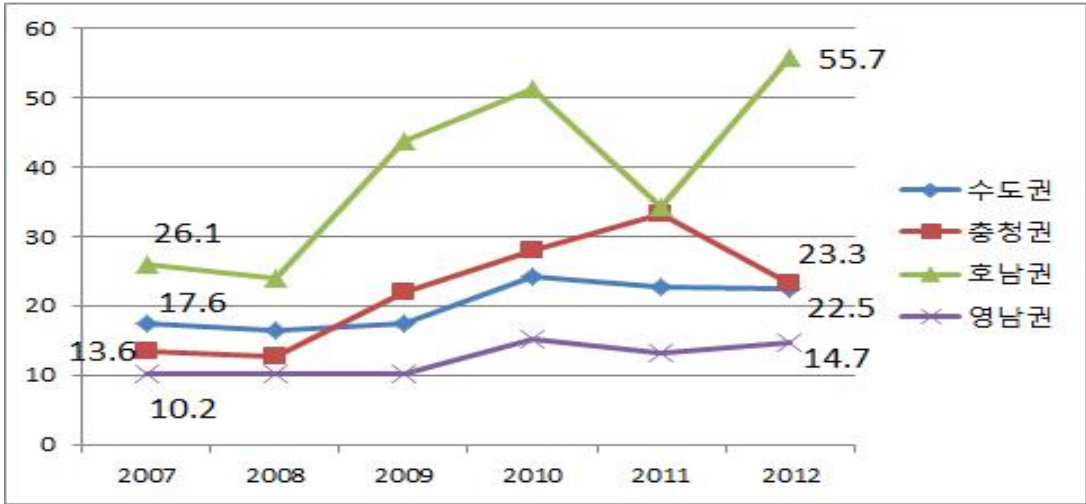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27.3%와 27.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50대가 22.2%로 그 다음을 차지한 반면 20대는 17.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대와 40대, 50대는 각각 0.5%, 0.6%, 1.1% 줄어든 반면 30대는 8.3%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20대는 감소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연령대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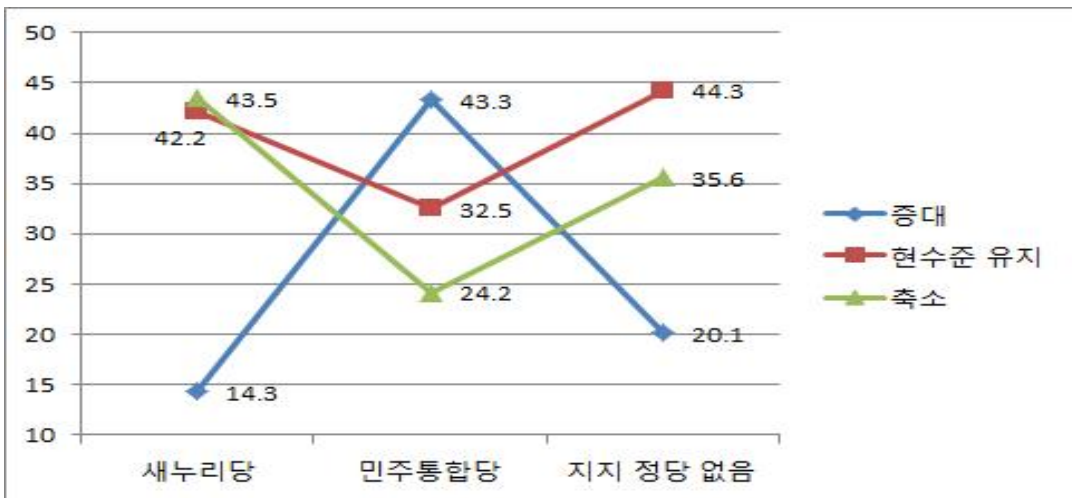
지역별로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면 호남권이 5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청권이 23.3%, 수도권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영남권의 경우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비호남권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각각 0.4%, 10.0% 줄어들었고 호남권에서는 21.5%로 급증하였으며 영남권에서도 1.3% 늘어났다. 2007년과 비교하면 전 지역에서 대북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그림 16〉 지역별 대복지원 증대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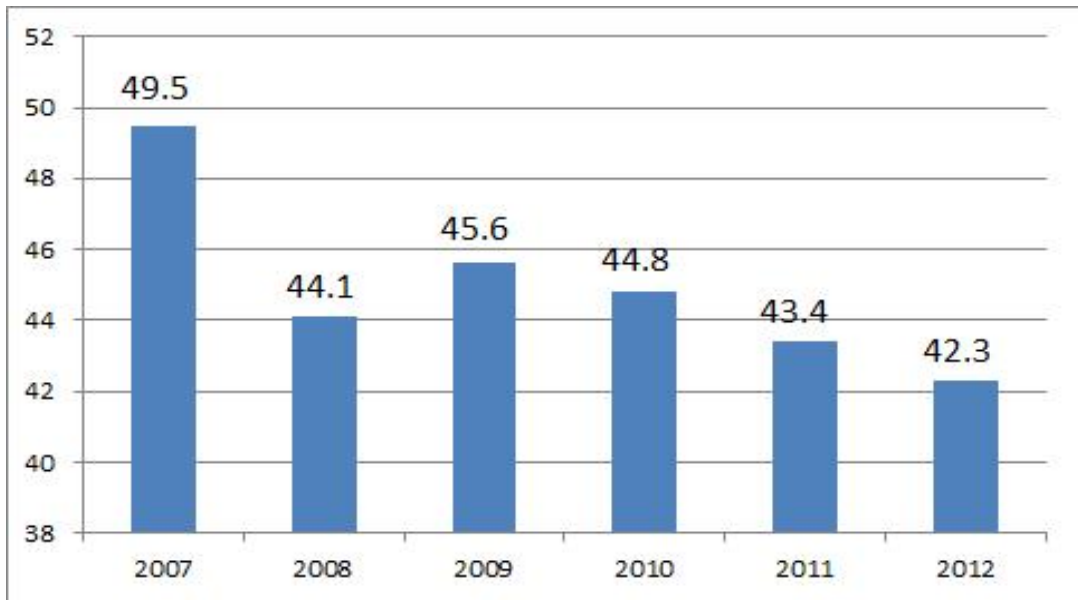
한편 지지정당별로 대복지원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대복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를 차지하여 민주통합당과 대조적인 인식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의 경우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그림 17〉 대복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지정당별 인식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09년 약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42.3%를 나타냈다. 이는 2007년보다 7.2% 줄어든 수치이다.

〈그림 18〉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대북지원에 대해 현수준 유지나 축소 응답이 높은 가운데,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분배투명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이 넘는 56.2%가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정권 유지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국민세금부담에 대한 우려는 낮은 수준에서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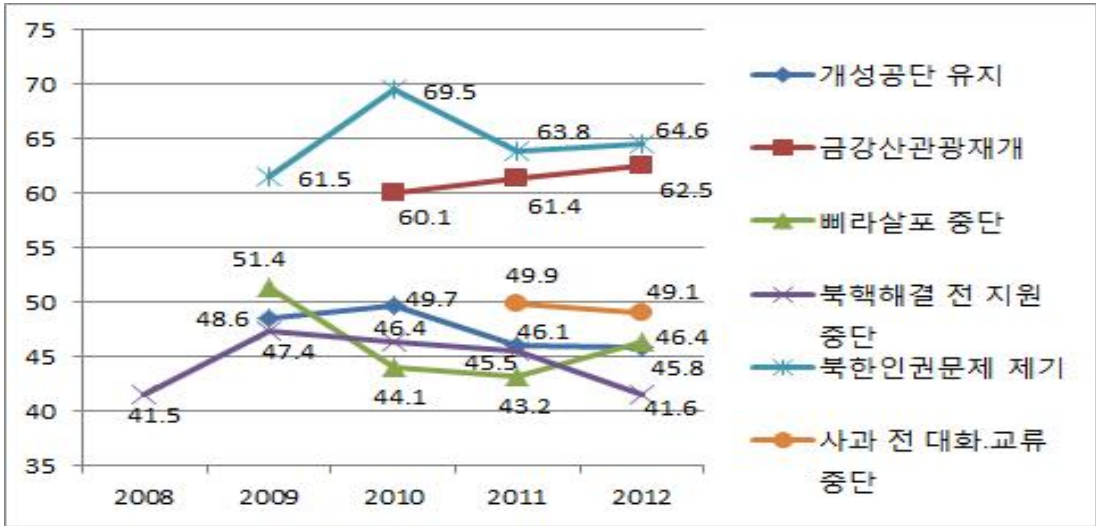
〈표 10〉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품 전달 안됨	51.5	48.3	59.9	47.9	49.6	56.2
북한정권 유지	14.7	12.9	16	21	18.9	16.9
정치적 이용	13.8	11.3	12.8	19.8	17.9	14.3
국민 세금 부담 증가	18.5	25.8	9.1	10.1	11.2	11.9
기타	1.3	1.3	2.3	1.1	2.3	0.7

#### 바.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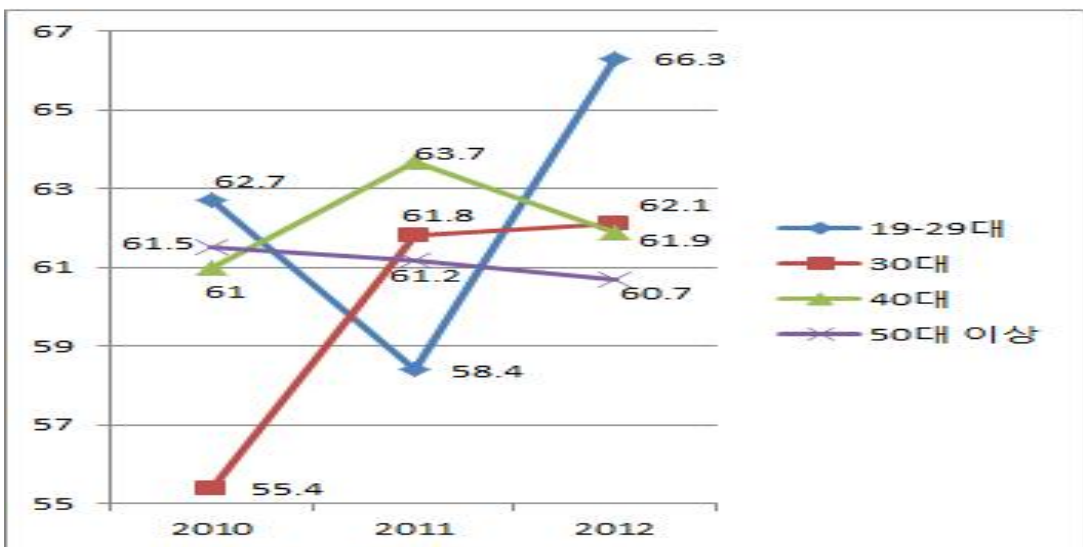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6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62.5%로 나타났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와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9.1%로 지난해 49.9%보다 0.8% 감소였으며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16.3%로 지난해 18.7%보다 2.4% 감소하였다. 대신 ‘반반-그저 그렇다’ 는 의견이 지난해 31.3%에서 34.6%로 2.3% 증가하였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대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킨 소위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절반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대북빼라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이 지난해 43.2%보다 3.2% 증가한 46.4%로 나타났고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4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지난해보다 3.9% 줄어든 41.6%로 나타났다.

〈그림 19〉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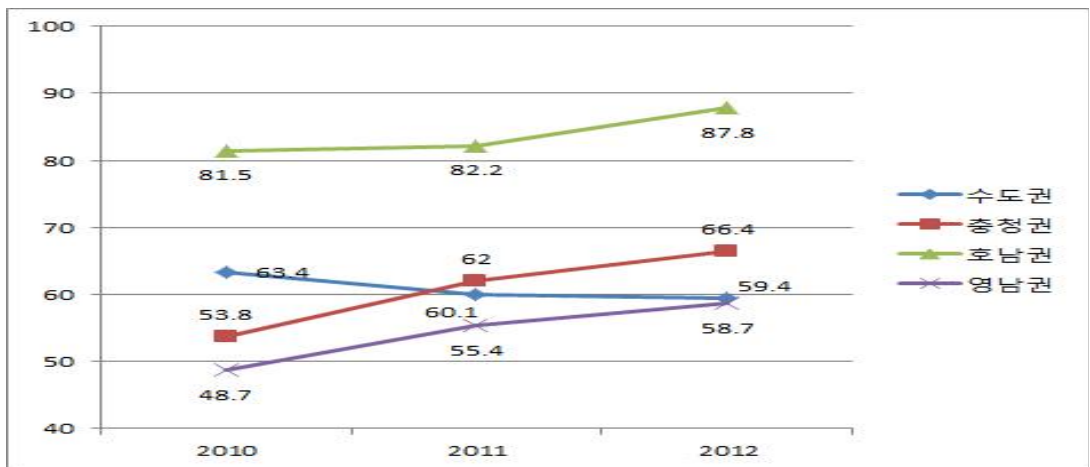
이 가운데 현재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 20대에서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30대와 40대, 50대는 60%대 초반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0〉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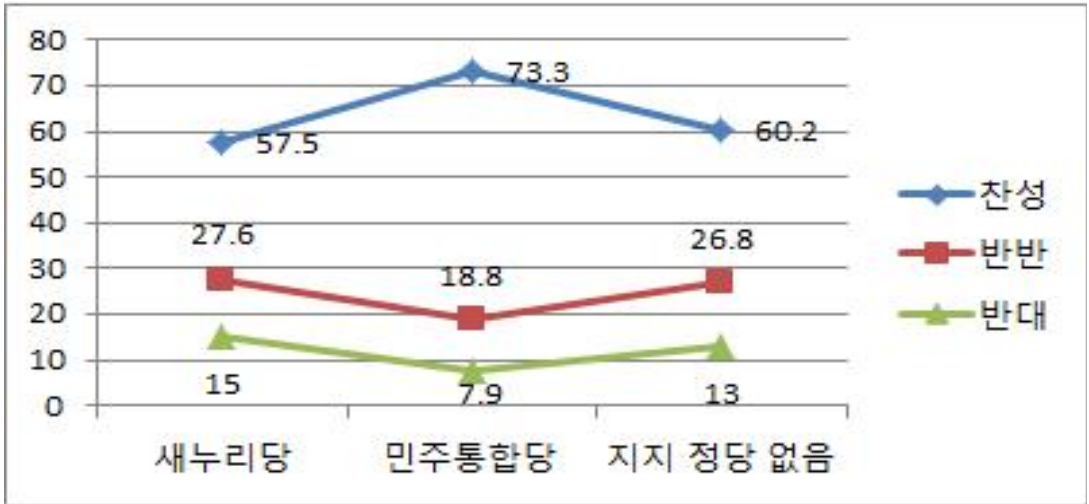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비율이 올라간 가운데, 호남권이 8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충청권이 66.4%, 수도권이 59.4%, 영남권이 58.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21〉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57.5%, 민주통합당이 73.3%를 보인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높은 60.2%가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경우도 반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22〉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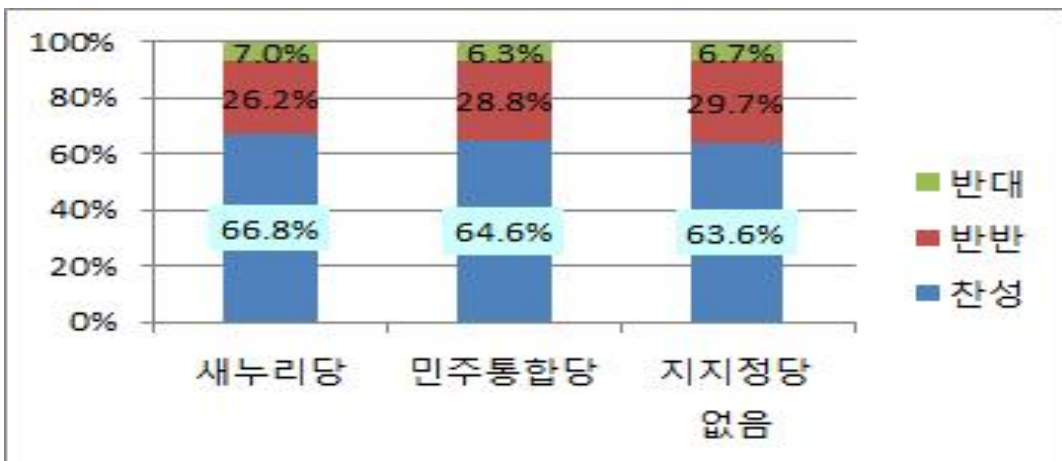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연령대나 지지정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지역적으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이 65%대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64.5%와 62.5%를 나타냈다. 연령대별 증감을 보면 20대에서 5.1%, 30대에서 2.2%, 50대 이상에서 0.9%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4.3%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이 각각 지난해보다 8.1%와 6.2%, 2.8% 증가한 76.5%와 71.6%, 62.5%를 보였고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61.3%를 보였다.

〈표 11〉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19-29대	58.8	68.3	60.8	65.9
	30대	62.6	66.7	62.3	64.5
	40대	64.4	70.5	66.8	62.5
	50대	59.9	72.7	64.5	65.4
	이상				
지역별	수도권	65.3	74.9	63.6	61.3
	충청권	78	76.7	65.4	71.6
	호남권	53.8	71.4	68.4	76.5
	영남권	52.2	55.5	59.7	62.5

지지정당별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66.8%였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64.6%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63.6%였다. 이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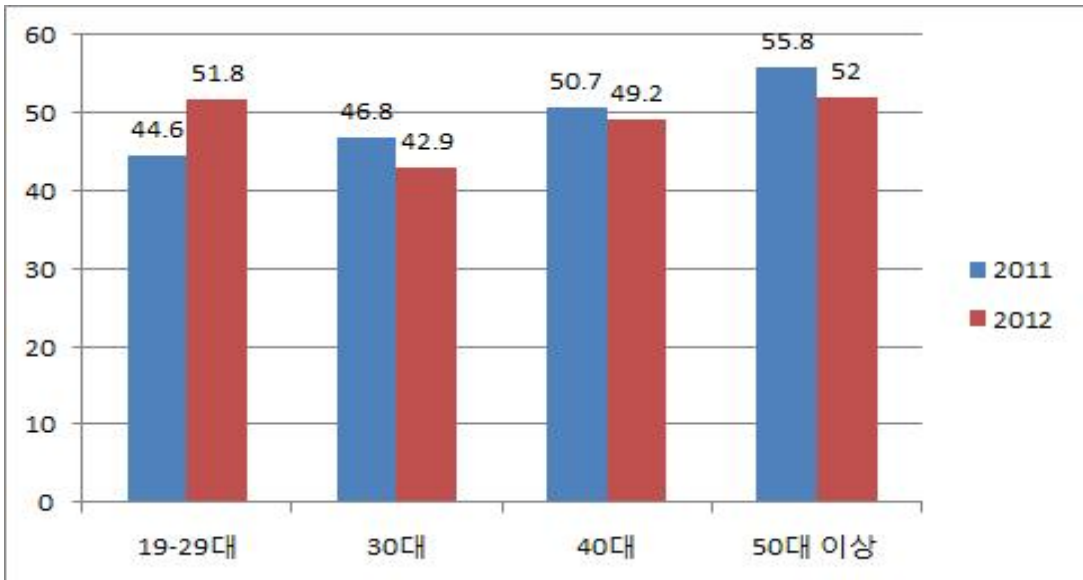
〈그림 23〉 지지정당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대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킨 소위 '5.24'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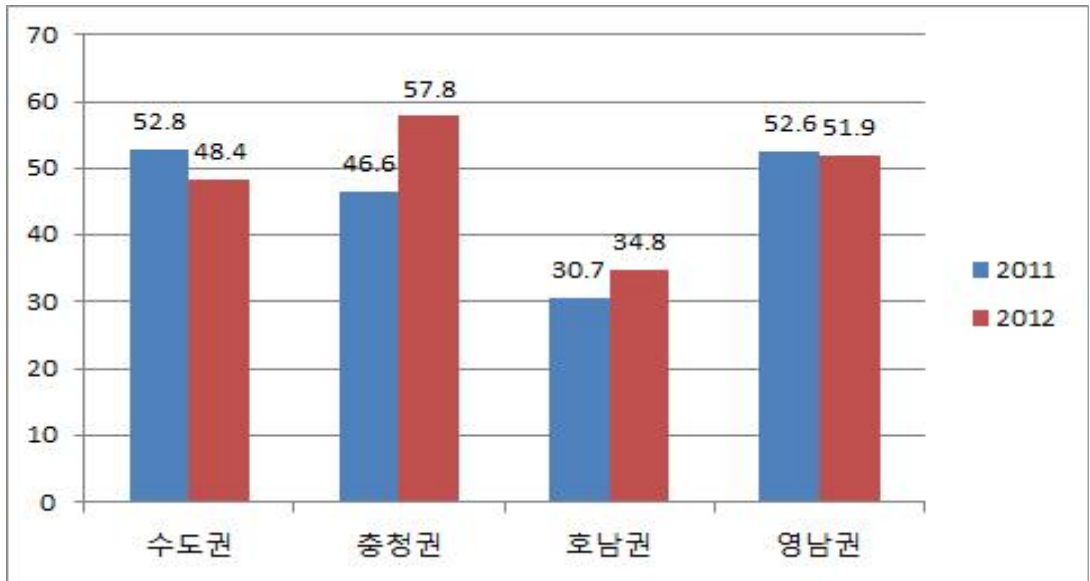
로 보면 20대는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1.8%를 보인 반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 서는 각각 지난해에 비해 3.9%와 1.5%, 3.8% 감소한 42.9%와 49.2%, 52%를 보였다. 20대와 40대, 50대 이상이 50%대 전후에서 수렴되는 반면 30대는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그림 24〉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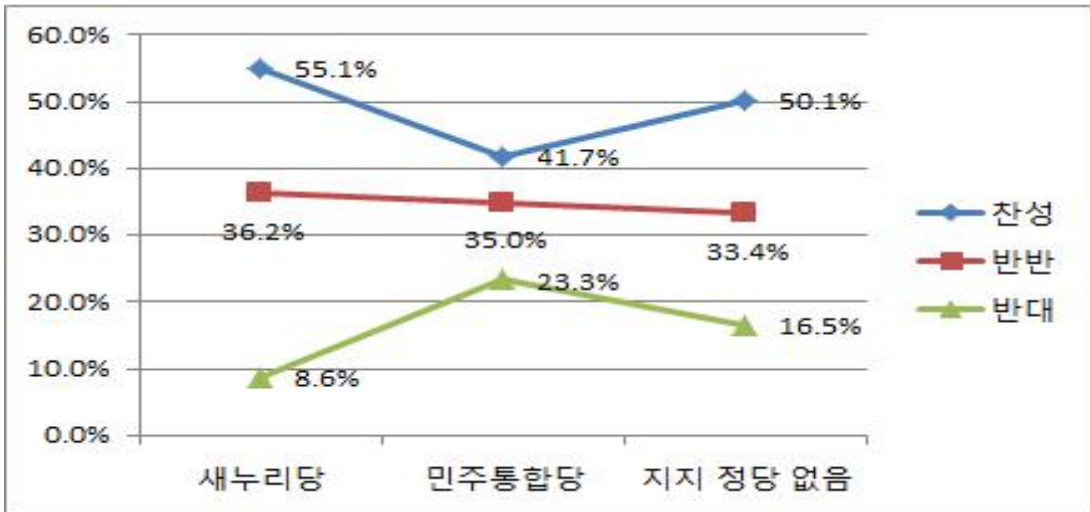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50% 이상 지역으로는 충청권이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57.8%를 보였고 영남권이 지난해보다 0.7% 떨어진 51.9%를 보였으며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4.4% 떨어진 48.4%를 보였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4.1% 증가하였으나 가장 낮은 34.8%를 나타냈다.

〈그림 25〉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도 50.1%로서 절반 정도가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41.7%로 반대 비율인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참고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6%로서 지난해 33.6%보다 4% 하락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30% 미만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반면, 나머지 70% 이상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사실상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7〉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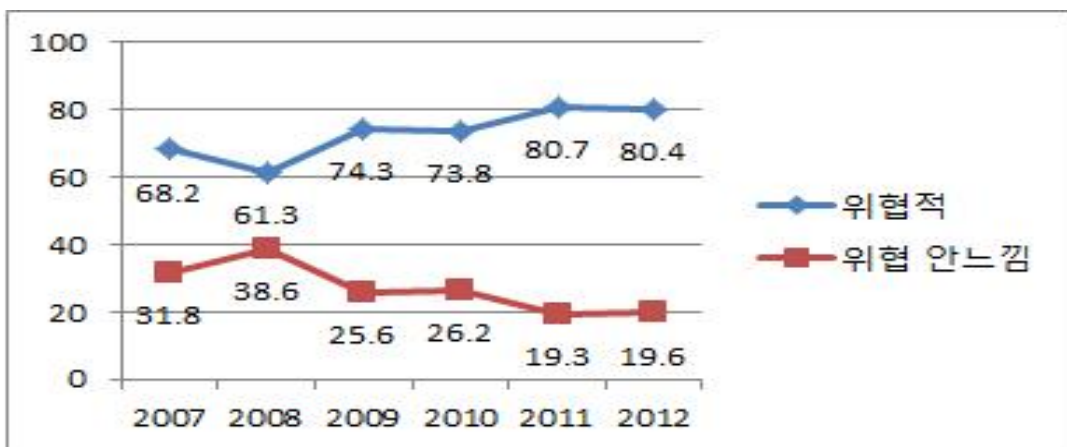


### 3. 북한 핵문제와 남북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

####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80.4%로, 조사대상자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09년 전년도의 61.3%에 비해 13% 증가한 74.3%로 높아졌고 2011년 들어 전년도보다 6.9% 증가하면서 80.7%로 올라간 뒤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급증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상승은 2010년 11월 헤커 박사의 영변핵시설 방문과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확인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연령대별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79.6%와 79.5%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대가 76.6로 가장 낮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1% 전후의 변동을 보였으나 큰 차이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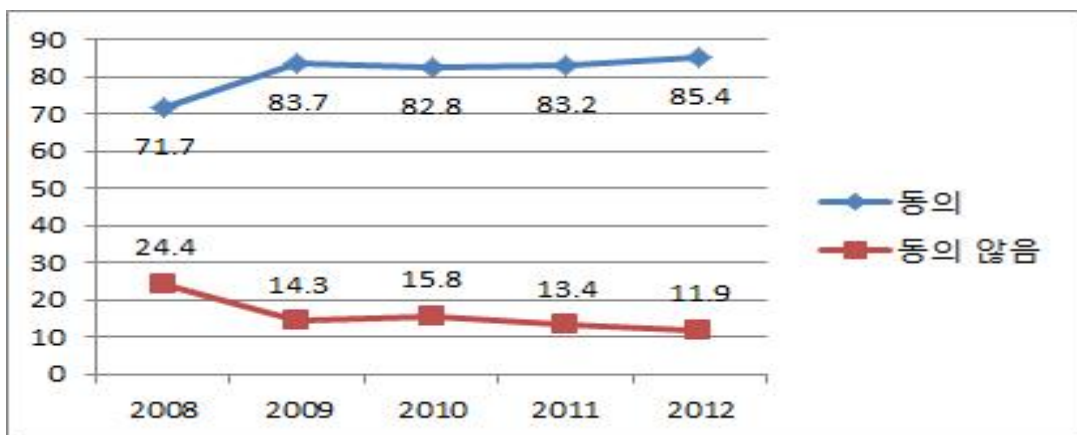
타내지는 않았다. 2007년과 비교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비율은 20대에서 9.7%, 30대에서 12%, 40대에서 11.6%, 50대 이상에서 14.2% 상승하였다.

〈표 12〉 연령대 및 지역별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비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29대	69.9	68.8	75.3	75.2	78.3	79.6
30대	64.6	55	71.9	72.1	77.3	76.6
40대	67.9	60.5	71.9	71.5	80.8	79.5
50대 이상	70.6	61.3	78.4	76.5	85.2	84.8
수도권	68.9	54.1	76.1	70.7	84	79.6
충청권	65.3	65.2	71.2	80.1	70.9	69
호남권	63.9	66.5	69.7	71.4	77.6	68.7
영남권	68.7	69.5	72.8	75.8	81	90.1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을 보면 2009년 전년에 비해 12% 상승한 83.7%를 기록한 이후 80% 초반대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85.4%로 나타났다.

〈그림 29〉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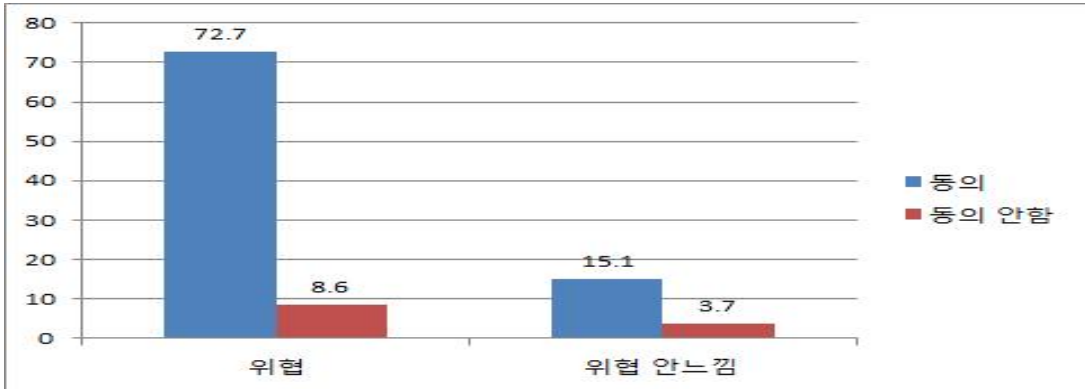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의 경우 동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88.8%, 40대에서는 87.6%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84.8%, 20대에서는 78.8%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대에서는 7.7%, 30대에서는 9%, 40대에서는 18%, 50대 이상에서는 18.9% 상승하여,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는데 비례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에서 각각 86.7%, 85.2%, 86.2%로 85% 이상의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충청권에서는 74.1%로 10% 이상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에 대한 연령대 및 지역별 동의 비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9-29대	71.1	79.6	81.8	75.2	78.8
30대	75.8	85.9	84.6	85.2	84.8
40대	69.6	83.5	83.6	86.7	87.6
50대 이상	69.9	85.8	81.1	84.5	88.8
수도권	68	86.9	82.7	80.9	86.7
충청권	80	84.7	88.1	91	74.1
호남권	70.7	81.5	66.4	83.6	85.2
영남권	75.5	77.5	86.5	83.6	86.2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72.7%로 나타난 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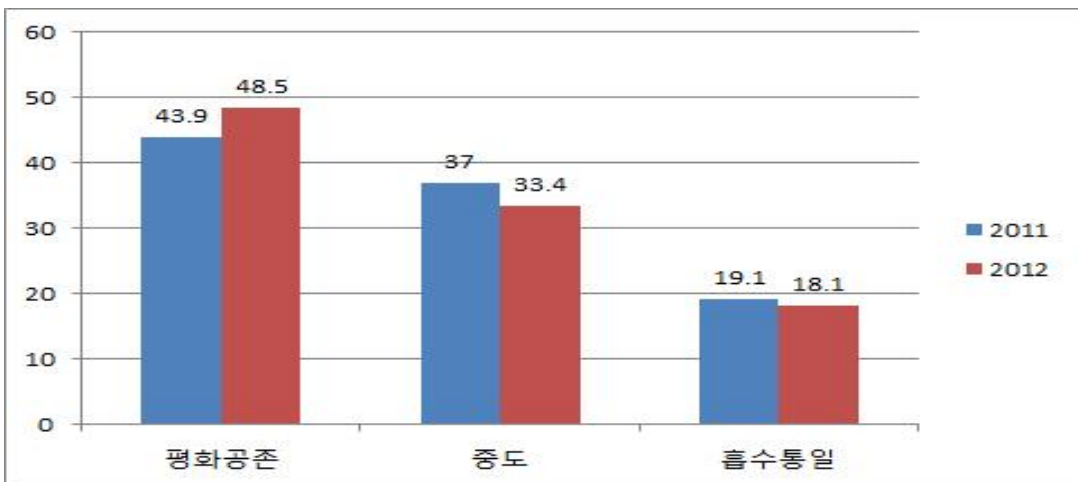
〈그림 30〉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과 핵무기 불포기에 대한 동의 여부



### 나. 북한 핵문제와 남북협력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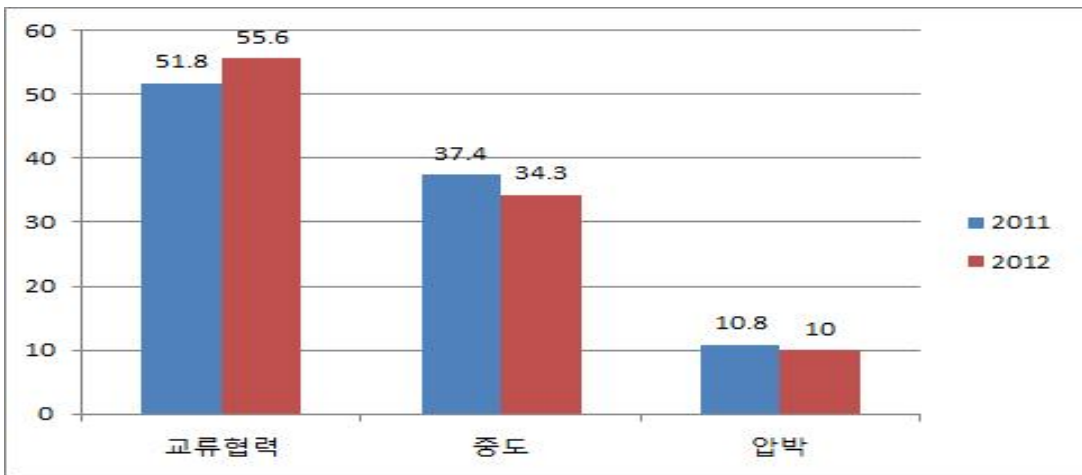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48.5%로 나타났고,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경우는 전년보다 1% 줄어든 18.1%로 나타났다.

〈그림 31〉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평화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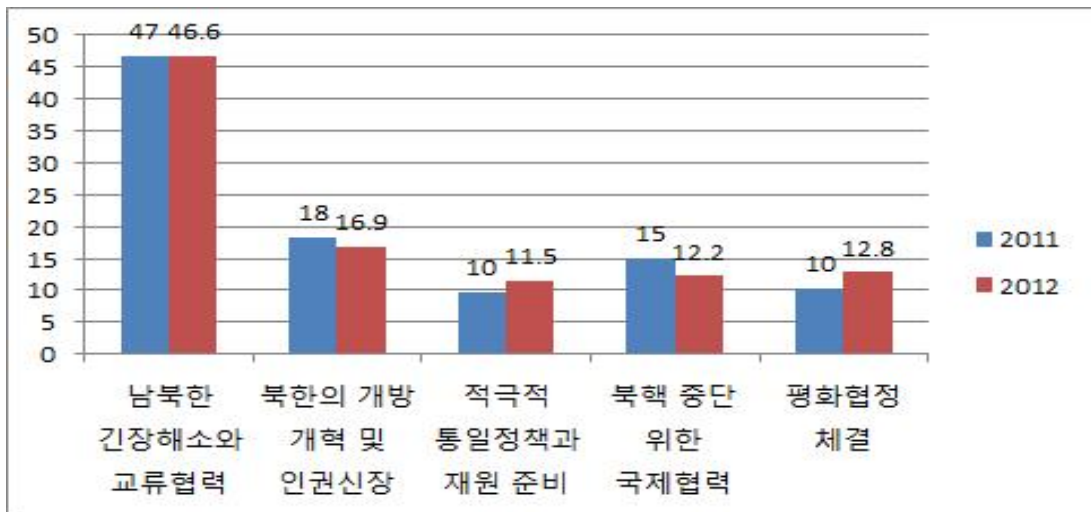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3.8% 상승한 55.6%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압박을 선호하는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그림 3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교류협력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우선적인 대북정책 과제로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택한 경우는 지난해보다 3% 하락한 12.2%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6.6%를 보였고 평화협정체결을 선택한 경우도 지난해보다 2.8% 상승한 12.8%를 보였다.

〈그림 3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참고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2.5%로 나타났다. 남북 간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은 46.1%로 최우선과제로 제기된 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자원 준비는 11.8%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4〉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구분	남북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북한 개방개혁 및 인권시장	평화협정 체결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정책과 자원준비
2011	46.6	17.1	14.6	11.5	10.2
2012	46.1	16.9	12.7	12.5	11.8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42.2%로 나타났다. 반면 ‘반반-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35.5%였고 반대하는 응답은 1.5% 감소한 22.2%로 나타났다. 북핵 해결 전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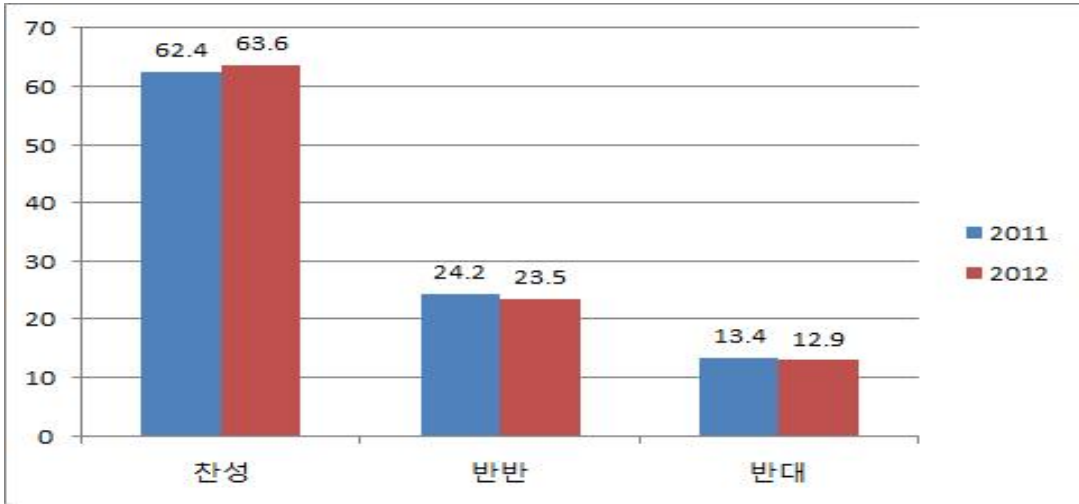
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반반-그저 그렇다는 입장이 증가하였다.

〈표 15〉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

구 분	북핵 해결 전 지원 중단			
	찬성	반반	반대	
북한	2011	45	31.2	23.7
	2012	42.2	35.5	22.2
핵무기 불포기	2012 전체	41.6	36.5	21.9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63.6%인 반면 반대하는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현금유입 통로 역할을 한다며,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핵문제까지 금강산관광재개와 연계시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 4. 맺는 말

이제까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당위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 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세 가지가 주목되었다. 첫째,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흡수통일보다 평화공존,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도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에서도 비록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80%대 후반 수준에서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도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군사적 긴장고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실상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는 (흡수)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차기정부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가장 선호한데서 확인되듯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보다는 남북 간 평화적 공존, 대북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안에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지하는 정당과도 무관하게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차기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에서 북한인권 개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연령대나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60% 이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정부가 중요한 대북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파나 세대와 무관하게 공고한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더 이상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변동을 도모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보수파의 담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시급한 대북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면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대북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현실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평화공존 및 협력 문제를 사실상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이 그 위협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도,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선호하면서, 차기정부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선호를 보인데서 확인된다. 이 또한 현실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은

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현금 유입 창구’ 로 보는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이 전제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협력의 강한 연계 및 북한의 선비핵화 논리와는 다른 인식이다. 즉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 사실상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을 분리해서 사고하면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남남갈등 : 변화와 지속?

강 원 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1. 서 론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시도된 이후 북한 이슈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집단 간의 격렬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적 집단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유지를 선호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비해 진보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선호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남한 사회 내부의 격한 이념적 대립은 '남남 갈등' 으로 종종 불렸다. 이러한 남남 갈등은 단순히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과 체제, 분단과 전쟁이라고 역사적 경험, 세계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한 타협점과 소통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북한 이슈를 두고 피부로 느낄 만큼 격한 사회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오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할 만한 실질적 접촉이나 교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2010

년 연평도 포격처럼 남한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남 갈등의 또 다른 대상이 되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이후 SOFA협정이나 기지 이전 등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대체로 해결되었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국과 미국의 상반된 태도 등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린 국내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용, 주거, 교육, 연금 등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가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잠잠해진’ 남남 갈등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라도 다시 가열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채 현재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남한 사회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는 세대 요인이 중요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던 ‘남남 갈등’ 이 이전에 비해 변화했는지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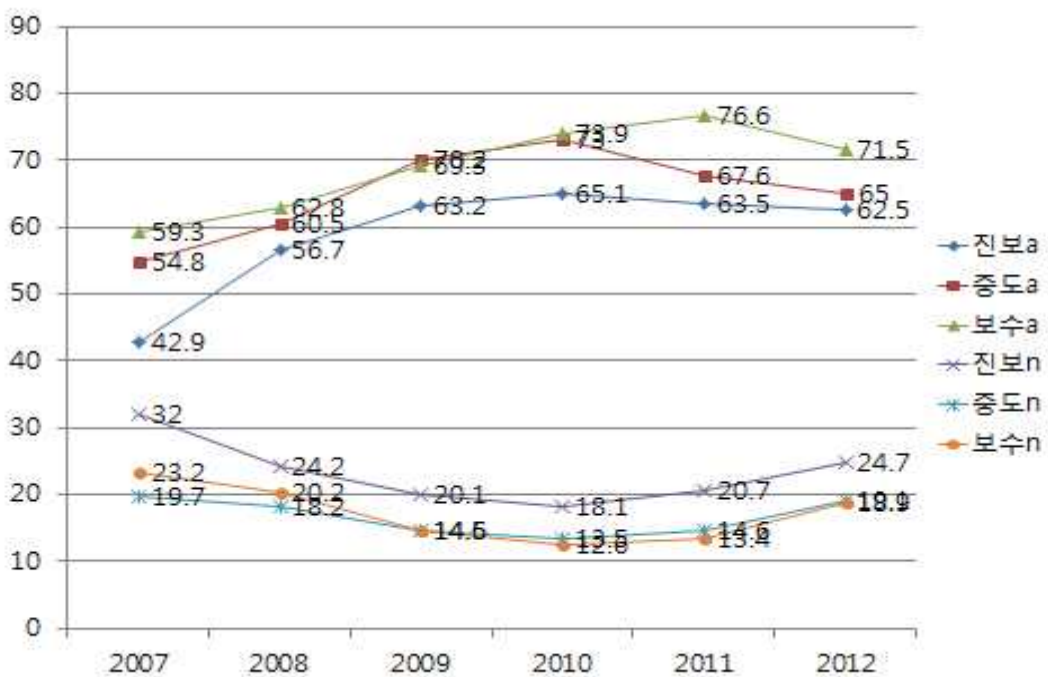
냉전 시대의 안보 정책은 적대적 대북 정책과 대미 안보의 강조였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권위주의 체제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반미는 곧 친북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미가 뭐가 나쁘냐’ 고까지 말했는데 그 이전까지의 대미 의존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표현이었다. 한편 북한에 대한 태도는 1988년 노태우 정

부 출범 이후 고위급 각료회담 개최 등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의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및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국내정치적으로 격렬한 이념적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림 1>에서 통일의식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묻은 질문 가운데 미국과 북한을 꼽은 이들의 비율은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비율은 서로 상반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미가 곧 친북’이라는 냉전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에 대한 태도와 북한에 대한 태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에 대한 시각은 지난 6년 사이에 보다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해 온 반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소원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진보적 응답자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껴진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7년의 경우에는 42.9%로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65.1%로 커졌고 2012년 조사에서도 62.5%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에는 19.7%였는데 2010년 12.6%로 가장 낮아졌고 2012년 조사에서는 18.9%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이념적 입장과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남남 갈등’이 이념적 입장에 따라 미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 북한에 대한 가까움의 변화가 이념과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념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측면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비해 이념 집단 간 미국,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남남 갈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보기 위해서 우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념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

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지난 6년 간의 응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대상으로 보는데 대한 응답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진보 응답자 층에서는 2007년 15.8%였는데 그 이후 대체로 상승해 왔고 2012년에는 21.6%로 6% 정도 증가했다. 반면 중도와 보수 응답자 층에서는 대체로 그 비율이 하락해 와서, 중도층의 경우 20.6%에서 13.2%로 줄어들었고, 보수층은 29.7%에서 14.6%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2007년과 비교하면 그 입장이 역전되었다. 즉 진보 집단에서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보수 집단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그림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 미국,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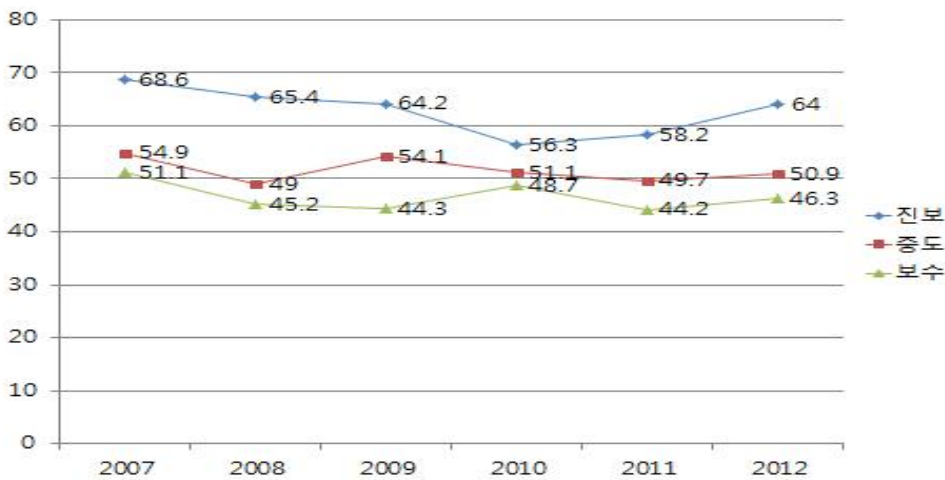
〈표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	진보	15.8	20.1	16.7	17.8	19.5	21.6
	중도	20.6	25.4	16.9	20.5	16.5	13.2
	보수	29.7	19.1	18.9	19.2	14.1	14.6
협력대상	진보	64.7	65.4	60.9	49.2	49.7	50.9
	중도	56.5	55.9	49.9	44.7	47.0	51.4
	보수	48.9	51.3	42.7	37.5	44.5	33.5
경쟁대상	진보	5.3	3.5	2.0	3.0	2.4	2.4
	중도	2.6	2.4	2.2	3.5	2.1	6.1
	보수	2.4	5.6	2.5	3.4	2.8	5.0
경계대상	진보	9.9	8.0	15.4	18.8	12.3	13.1
	중도	12.9	11.1	22.0	21.8	18.5	20.1
	보수	11.6	16.4	22.9	21.1	19.7	33.5
적대대상	진보	4.3	3.1	5.0	11.1	16.2	11.9
	중도	7.4	5.1	9.0	9.4	15.9	9.1
	보수	7.3	7.6	13.0	18.8	19.0	13.5

한편, 협력 대상이라는 관점은 보수, 중도, 진보 구분 없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는데, 진보의 경우에는 2007년 64.7%에서 2012년에는 50.9%로 낮아졌고, 중도층에서는 56.5%에서 51.4%로,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48.9%에서 33.5%로 크게 낮아졌다. 변화의 크기는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이념과 무관하게 북한이 협력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많이 낮아졌다. 경쟁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비율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다. 이 역시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 시간이 갈수록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진보층은 2007년에는 9.9%였는데, 2010년에는 18.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고 2012년에는 13.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2007년 12.9%에서 2012년에는 20.1%로 크게 높아졌다.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집단은 보수층이었는데 2007년에는 11.6%였는데 2012년에는 거의 세 배인 33.5%로 높아졌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도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유사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진보층에서는 2007년의 4.3%에서 2012년 11.9%로, 보수층에서는

7.3%에서 13.5%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표 1>에서도 앞에서 본 <그림 1>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념적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세 집단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탓에 이전보다 시각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012년 경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념 집단 간의 차이를 예외로 한다면 대체로 이전의 이념 집단별 인식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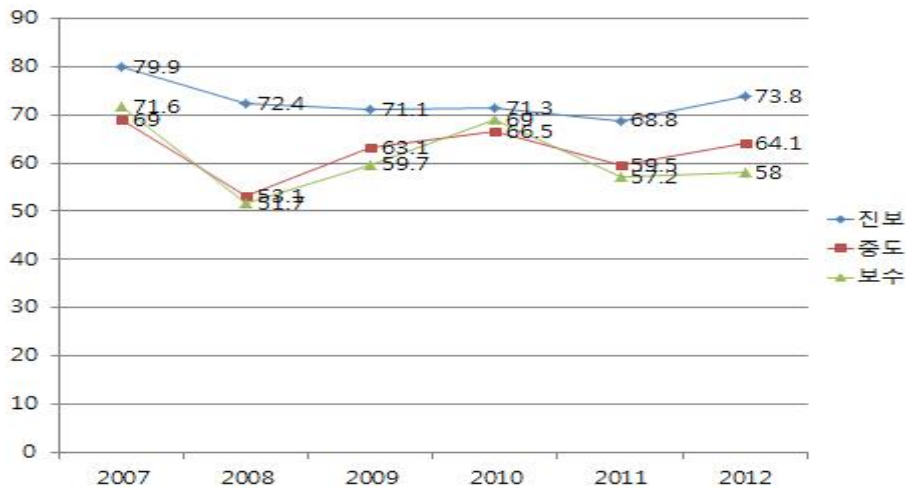
다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많은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온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2>는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응답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대북 지원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인도적 대북지원

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려 17.5%에 달했다. 그런데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는 그 차이가 7.6%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당시 진보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보수, 진보 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두 집단 간 이념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 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 입장의 차이가 다시 17.7%로 늘어났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2007년에는 보수와 진보 이념 집단 간 차이가 8.3%였는데 이 차이는 2008년에는 20.7%로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그 이후 2010년까지는 줄어들어 2010년에 그 차이는 2.3%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는 두 이념 집단 간 차이가 다시 15.8%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2>, <그림 3>에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중도 입장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이들은 대체로 보수 이념 응답자들과 유사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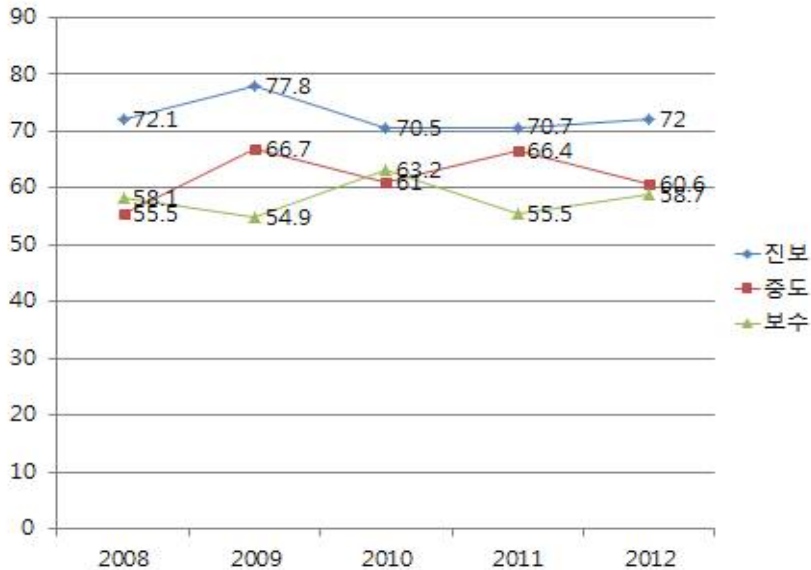


이 두 그림의 결과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념 집단 간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

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이념 집단이나 조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진보 집단에서는 항상 60% 전후의 높은 긍정적 응답이 나타나는데 비해, 보수 집단에서는 대체로 50% 미만의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고 중도층은 대체로 50% 수준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 이 사안을 둘러싸고는 이념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이념 집단별 응답의 패턴은 조사 때마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본 <그림 2>, <그림 3>과 유사한 특성이 확인된다. 2008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응답율의 차이는 14%였고 이 차이는 2009년 조사에서는 22.9%로 매우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앞의 두 경우처럼 7.3%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15.2%, 13.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6년 간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념 집단의 차이나 조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절반을 훨씬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나 기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4〉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이념집단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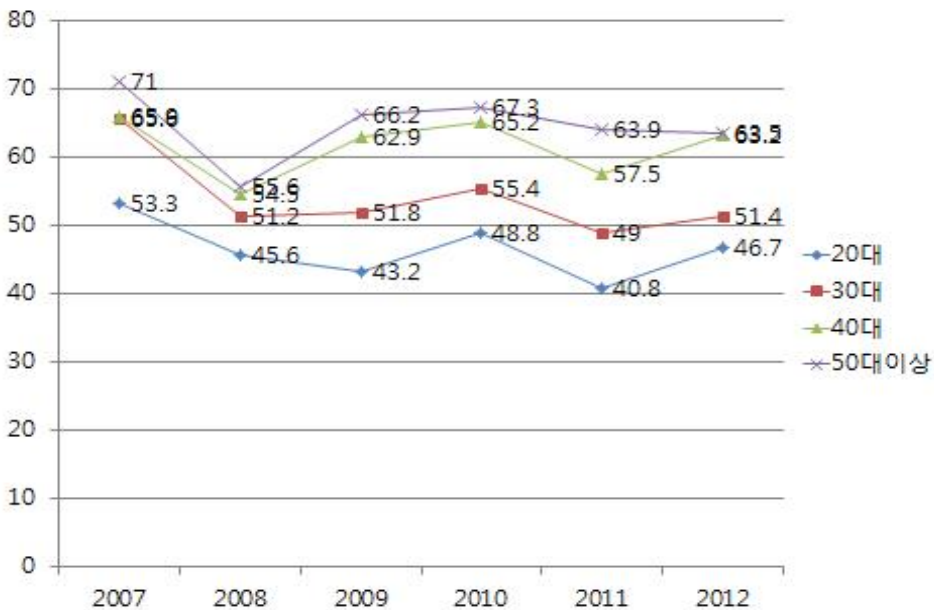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전에 비해 보수와 진보 이념 집단 간 주목할 만큼 커다란 시각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6년 간 이념 집단 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지만 2002년 직후의 격화된 ‘남남 갈등’이 2012년 대선 이후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그림 1〉에서 본대로 미국,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변동의 추이 역시 상호 유사했다. 또한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과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보수, 진보, 중도 이념 집단 간 비교적 뚜렷한 정책 방향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통일 인식

이번에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마땅히 성취해야 할 국민적 목표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들어 세대별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이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기존의 '남남 갈등' 과는 또 다른 형태로 대북 정책의 새로운 균열,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존의 남남 갈등이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 쪽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증진과 연방제 등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보다는 압박과 고립을 통한 체제의 붕괴 등을 통한 통일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실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세대별 시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6년 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필요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세대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 집단별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조사 시기에 따른 일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령 집단별 차이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20대의 경우 2007년 53.3%였던 것을 제외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1년 40.8%로 가장 낮았고 2012년에는 46.7%로 나타났다. 둘째, 30대 역시 2007년 이후 크게 그 비율이 떨어지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체로 50% 선에 걸쳐 있다. 즉 30대의 경우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혹은 부정적) 태도가 반반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응답율이 변동하고 있고 그 비율도 60%를 넘어서는 편이라는 점이다. 넷째, 4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나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입장의 차이가 큰 집단은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이 두 연령 집단 간 응답의 차이는 16.7%였으며 2008년에는 그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에는 그 차이가 23%, 2010년에는 18.5%, 2011년에는 22.7%였다가 2012년 조사에서는 16.8%로 나타났다. 두 연령 집단 간 응답율의 차이가 16-23%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들 간에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세대에게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갈등처럼 단기간에 폭발력이 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북정책이나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보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의 차이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통일에 대한 시각은 비단 세대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북 교류와 접촉에 보다 적극적인 진보 집단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보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세대별 시각 차이보다 이념적 요인의 중요성이 결국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 2>에서는 세대, 이념 두 변인을 기준으로 각 집단별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을 정리했다.

**<표 2> 세대, 이념 집단별 통일의 필요성 (2012)**

		필요하다	반반	필요 없다	카이제곱
세대	19-29 (a)	46.7	24.7	28.6	27.6 p<0.00
	30대	51.4	26.2	22.3	
	40대	63.2	18.9	17.9	
	50대 이상 (b)	63.5	18.0	18.5	
	a-b	-16.8	6.7	10.1	
이념	진보 (a)	65.2	14.9	19.8	22.5 p<0.00
	중도	54.7	25.7	19.6	
	보수(b)	52.3	20.6	27.0	
	a-b	12.9	-5.7	-7.2	

<표 2>에서는 이념 집단별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진보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65.2%로 나타나 보수 집단 응답을 52.3%에 비해 12.9%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진보 집단에서는 19.8%, 반면 보수 집단에서는 27%로 보수 집단에서 통일에 대해 보다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중도 성향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보수 집단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진보 집단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 집단 간 통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이든 진보이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두 50%를 넘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집단별 응답의 차이에 비해서 세대 집단 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대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절반이 안 되는 20대 응답자들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비해 40대 응답자들은 63.2%,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63.5%로 세 명 중 두 명이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0대 응답자들은 51.4%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명시적인 거부의 응답은 20대의 경우 28.6%로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17.9%, 50대 이상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그런데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율의 차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16.8%, 그리고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경우 10.1%였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이념 집단 간의 차이에 비해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념 집단 간의 구분보다 더욱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연령 집단별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같은 민족이니까	37.8	42.1	43.6	57.9
이산가족 고통 해결 위해	9.2	11.1	8.9	7.9
전쟁 위협 없애기 위해	30.7	25.7	25.2	21.8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3.6	5.0	5.6	3.7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7	16.1	16.7	8.8
카이제곱	36.6 p<0.00			

이런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세대와 이념 집단 구분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3〉에서는 연령 집단별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구분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은 절반이 넘는 57.9%였는데 비해, 19-29세 연령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7.8%에 불과했다. 20% 정도의 차이가

두 연령 집단 간에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는 21.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9-29세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0.7%에 달했다. 앞의 항목과는 달리 10% 가량 젊은 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29세에서는 18.7%인데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8.8%에 불과했다. 이 항목에서도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 간의 차이가 10%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표 3>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민족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민족적 일체감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도구적, 실용적, 수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분단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민족주의적 열정 때문이 아니라,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익과 관련된 판단이 깔려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에서 이러한 항목에서 50대 이상 연령층보다 각각 10% 이상씩 높은 응답이 나타난 반면, 민족적 일체감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20% 가량 낮은 응답이 나타난 것은 두 연령 집단 간 통일을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의 차이의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어떤 수단적 이유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합쳐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20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통일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5>에서 본 것처럼, 20대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낮은 중요한 이유를 <표 3>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념 집단 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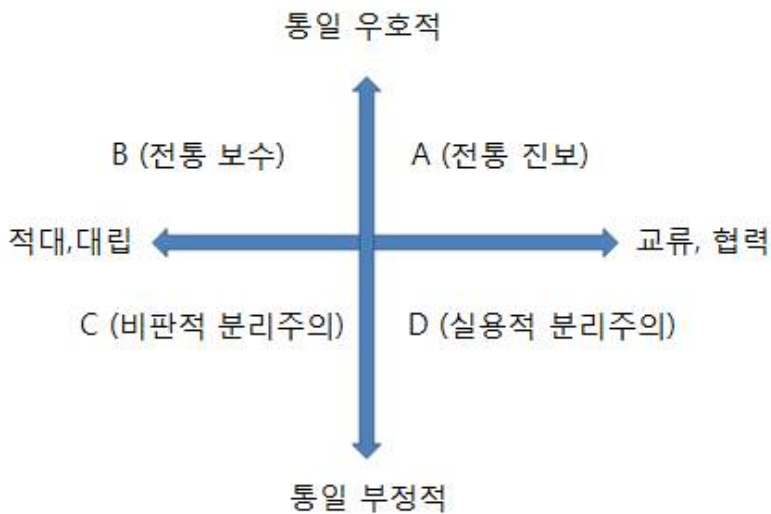
	진보	중도	보수
같은 민족이니까	46.8	44.3	50.0
이산가족 고통 해결 위해	6.2	11.1	8.6
전쟁 위협 없애기 위해	25.2	25.9	24.8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4.0	5.3	3.2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7.8	13.5	13.3
카이제곱	12.2 p<0.14		

그렇다면 이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이념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까? 〈표 4〉에는 이념 집단 간 통일이 필요한 이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표 3〉과는 달리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세대별 차이는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념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적, 민족적 요인에 대해서는 보수 집단에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진보 집단에서도 46.8%, 중도 집단에서는 44.3%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응답도 세 집단 모두 25% 전후의 비율을 보였다. 한눈에 보더라도 세 이념 집단 간 입장의 차이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토대로 대북 정책,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살펴보면 그 균열 축이 이전의 남남 갈등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남남 갈등, 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의 갈등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 우호적 관계의 추진이나 혹은 적대적 압박, 고립 및 봉쇄의 추구냐 하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요란하거나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통

일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남한만의 분리된 삶, 분리된 정체성의 지속을 추구하느냐라는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 북한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일차원이 아니라 이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기존 균열 축은 가로축에 정리된 것과 같은 대북 정책을 적대적, 대립적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두 가지 상반된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또 하나의 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세로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6〉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균열 : 이차원 모델



이와 같은 이차원적 균열에 따라 <그림 6>에서처럼 네 가지 범주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통적으로 한국 이념 지형에서 진보가 대표해 온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B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대북 정책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형태

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념 지형에서 보수가 대표해 온 입장이었다. 그간의 남남 갈등은 이와 같이 가로축을 따라 A와 B 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C와 D는 예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C는 통일에 소극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 대립적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던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를 비판적, 적대적 분리주의라고 표현했다. 한편, D는 통일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일정하게 남북한 관계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실용적 분리주의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다. 이러한 구분은 북한, 통일 이슈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의식에 대한 최근의 여러 조사 결과에서는 20대가 보수적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이상 집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보수성은 외형상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20대의 보수성을 5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차원적으로 본다면 20대이든 50대 이상이든 모두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차원적인 틀에서 본다면, 50대 이상의 경우 B 집단에 속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C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선호한다는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및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림 6>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남 갈등에 대한 시각은 단선적이고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세대적 차이, 통일의 필요성을 둘러싼 태도가 보여주는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의 차이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남남 갈등 역시 이제 중층적인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4.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이번에는 2012년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념, 세대, 정파적 차이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은 만약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크다면 대북 정책은 또 다시 격렬한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5>에는 보수, 중도, 진보의 세 이념 집단, 그리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등 보수 정당에 가깝게 느끼는 이들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에 가깝게 느끼는 이들, 그리고 네 가지 구분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물었다. 첫째는 평화공존의 방향을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두 번째는 보다 실질적인 형태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압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두 질문 모두 5를 중간점으로 하여 1과 10의 두 극단을 주고 적절한 정책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 물었다. <표 5>의 수치는 그러한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평균	표준편차	ANOVA/t-test
이념	평화공존-흡수통일	진보	4.47	2.34	F=1.29 p=0.28
		중도	4.69	2.02	
		보수	4.54	2.18	
	교류협력-적극압박	진보	3.79	1.92	F=10.4 p<0.00
		중도	4.32	1.86	
		보수	4.40	1.97	
정파	평화공존-흡수통일	진보 정당지지	4.42	2.10	t=1.81
		보수 정당지지	4.74	2.07	p=0.07
	교류협력-적극압박	진보 정당지지	4.09	1.89	t=1.43
		보수 정당지지	4.31	1.81	p=0.15
세대	평화공존-흡수통일	20대	4.59	2.25	F=0.06 p=0.98
		30대	4.56	2.06	
		40대	4.60	2.20	
		50대 이상	4.63	2.12	
	교류협력-적극압박	20대	4.28	1.95	F=0.27 p=0.85
		30대	4.19	1.86	
		40대	4.14	1.95	
		50대 이상	4.19	1.90	

평화공존 1 ---- 흡수통일 10

교류협력 1 ---- 적극압박 10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흥미롭게도 이념, 정파, 세대별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이나 정파별로는 진보 진영에서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보다 선호하고, 보수 진영에서 흡수통일이나 적극압박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장이라는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았다. 세대별로는 교류협력-적극압박에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응답을 한 것이 흥미롭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 차이는 입증되지 못했다. 6개의 분석 항목 가운데 교류협력-적극압박에 대해서만 이념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진보가 3.79로 가장 교

류협력을 선호한 것에 비해 보수는 4.40으로 가장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도는 둘의 중간 지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표 3>, <표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 집단의 평균값이 모두 5보다 크게 작다는 것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여전한 시각의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단절, 교류협력의 중단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일방적인 ‘퍼주기’라면 이념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아무런 교류나 접촉이 없는 상태를 다수 국민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재와 비교할 때 다소 전향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남남 갈등과 같은 격한 반응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갈등의 발발 여부는 대북교류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를 갈라놓은 남남 갈등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2010년을 전후로 이념 집단 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시각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남 갈등은 현재 잠잠하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대북 교류나 접촉이 활발해진다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제 협력 방식보다는 쌀, 비료, 의약품 지원과 같은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차이

를 보이는 이념 집단의 반응은 향후 언제라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200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념 집단별 차이도 적고 그 추세도 안정성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 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을 일차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단의 장기화와 함께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도 다른 세대와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이 민족적 일체감, 당위성을 중시했다면, 20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자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도구적, 수단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들에게 통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대북 정책, 통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은 더 이상 단선적,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이제 이차원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을 교류협력의 강화냐 적대적, 대립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이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태로부터의 변화 시도 자체가 큰 정치적 논란이나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가 큰 만큼 정책 추진의 규모나 속도에 따라서는 또 다시 남북문제가 국내적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1)

# 2012년 한국인의 역사인식

- 5.16, 10월유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

## 1.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 개요

- 최근 과거역사,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사건과 연관된 역사인식의 문제가 사회 정치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의식조사를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는 바, 최근 2012년도 조사자료에서 과거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의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이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7-8월 경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총 1,200명을 다단계 무작위 추출하여 총 80여 문항을 일대일로 면접하여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매년 [통일의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2년 자료는 지난 7월 5~31일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이번 9월 26일 10:00~16: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목련홀)에서 학술심포지움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 여기 제공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5.16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10월유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

1) 이 자료는 2012년 9월 15일 언론보도용으로 배포되었던 자료이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유형의 분석이다.

- 실제 응답에는 매우 긍정적 ,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매우 부정적 이 구별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긍정적’ / ‘부정적’ 이라는 두 응답범주로 크게 나누어 검토하였다.

## 2. 2012년도 조사자료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특징

- 박정희 전 대통령 호감도,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 10월유신에 대한 지난 5년간의 평균응답 (각 83%, 51%, 35%) 에 비해 2012년 이들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78.3%가 긍정적으로, 15.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16에 대해서는 43.1%가 긍정적으로 3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10월유신에 대해서는 26.5%가 긍정적으로 51.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5.16에 대한 평가, 10월유신에 대한 평가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 즉 긍정적 평가가 각각 78.3%, 43.1%, 26.5%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와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012년도 응답을 지난 5년간 (2007-2011)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이들 3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작년과 올해의 응답유형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2012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 3. 지난 5년 (2007-2011)의 자료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 지난 5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 5.16, 10월유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은 각각 83%, 51%, 35% 의 비율로 거의 변함없는 패턴을 보인다.
    - 다시 말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5.16에 대해서는 반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는 이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역사감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2012년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78.3% 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전 5년간의 반응에 비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특히 “매우 긍정적” 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0%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낮아졌고 “부정적” 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1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 특히 5.16에 대한 평가, 10월유신에 대한 평가가 올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 이 두 사건에 대해 지난 5년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각각 51%, 35% 수준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긍정적 응답이 각기 43.1%, 26.5%로 나타난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도에 5.16과 10월 유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각기 53%와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각각 10% 포인트 이상 낮아진 셈이다.
- ※ 참고로 다른 사건들, 예컨대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에 대한 응답에서는 지난 5년간의 추이와 크게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 시대와 연관된 사건들

에 대한 인식에서만 비교적 유의미한 변화가 2012년에 나타난 큰 이유의 하나가 아마도 박근혜 대표의 대선후보등장이라는 변수가 과거역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온 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 4. 세대별 특징

-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성세대의 역사인식 = 보수적’이라는 전통적인 상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50대이상의 장년층에서 5.16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011년에 23.2%였는데 올해는 36.5%로 크게 늘었다. 10월유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은 나타나는데, 10월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50대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2011년에 41.2%였고 올해는 56.7%로 나타난다. 40대의 10월유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도 2011년의 44.6%에서 올해는 53.7%로 증가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약 6%가 감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약 5%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 20대의 경우는 작년과 올해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늘어나고 잘 모른다는 응답이 다소 줄었다.
  - 20대는 5.16, 10월 유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호감도는 2011년 66.3%에서 올해 65.1%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작년 40.7%에서 올해 40.4%로, 10월 유신의 긍정적 평가는 작년 27.5%에서

올해도 27.5%로 나타나, 40대나 50대에 비해 낮지만, 지난 5년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 참고로 20대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11년 19.0%에서 올해 23.9%로, 5.16은 30.2%에서 38.0%로, 10월유신은 34.5%에서 45.1%로 증가하였다.

## 5. 지역별 특징

- 우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큰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니는 수도권인 경우,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었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2011년의 81.2%에서 올해 76.6%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8.4%에서 45.6%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3.1%에서 27.1%로 줄었다.
-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하였다.
  - 충청권에서 5.16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지난 5년간 줄곧 50%를 넘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31.9%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대신 부정적인 평가가 20%대에서 올해 39.7%로 급증했다. 10월유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중부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30%후반대를 유지하였으나 올해는 17.2%로 떨어졌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이전의 40%대에서 올해 50.1%로 높아졌다.
  - 호남권의 변화도 유사하게 나타나 5.16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011년의 30%대에서 올해는 58.3%로 높아졌다.

- 영남권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지역이지만 이들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과거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 5.16에 대한 영남권의 긍정적인 평가는 2011년 57.4%에서 올해 48.1%로 낮아졌고 대신 부정적인 평가는 29.7%에서 36.2%로 높아졌다. 10월유신에 대한 영남권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2011년 35.8%에서 올해 29.2%로 낮아졌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은 작년의 48.7%에서 올해 55.1%로 높아졌다.
- 이런 경향은 역사평가의 태도에서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최근 꼭 같이 부정적인 응답이 커지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 여전히 영남지역이 호남지역에 비해 이들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의 추이에서는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 6. 정치성향별 특징

-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진보층의 역사인식 추이를 보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011년의 77.3%에서 67.1%로 낮아졌고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6.41%에서 36.3%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5%에서 25%로 낮아졌다.
-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수적이라 답한 보수층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5.16과 10월 유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낮아지고 있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1년의 88.3%에서 올해는 90.7%로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5.16과 10월유신에 대한 역사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즉 5.16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층의 비율이 2011년의 55.2%에서 올해는 48.4%로 낮아졌고 10월유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층의 비율도 2011년의 36.9%에서 28.8%로 낮아졌다.
- o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중도라고 응답한 중도층에서도 지난 5년에 비해 올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 즉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011년의 82%에서 올해는 78.5%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3%에서 44.3%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2%에서 26.1%로 낮아졌다.
- 특히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낮아 진보층과 별 다르지 않다. 중도층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역사인식 변화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인의 의식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있다.

◎ 2012년 한국인의 역사인식 조사 결과 및 그림

※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림 :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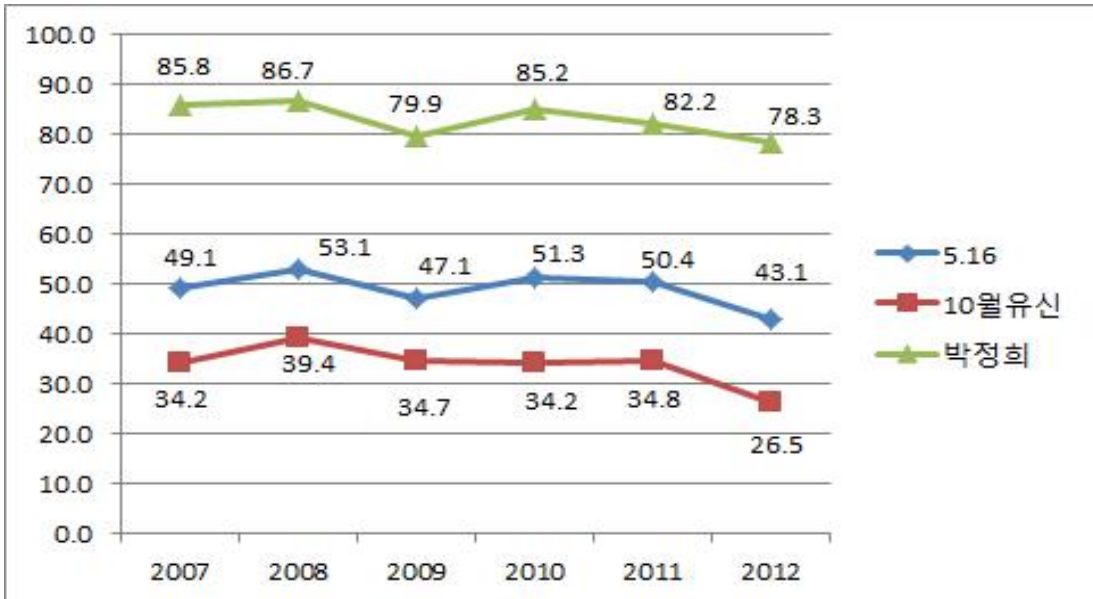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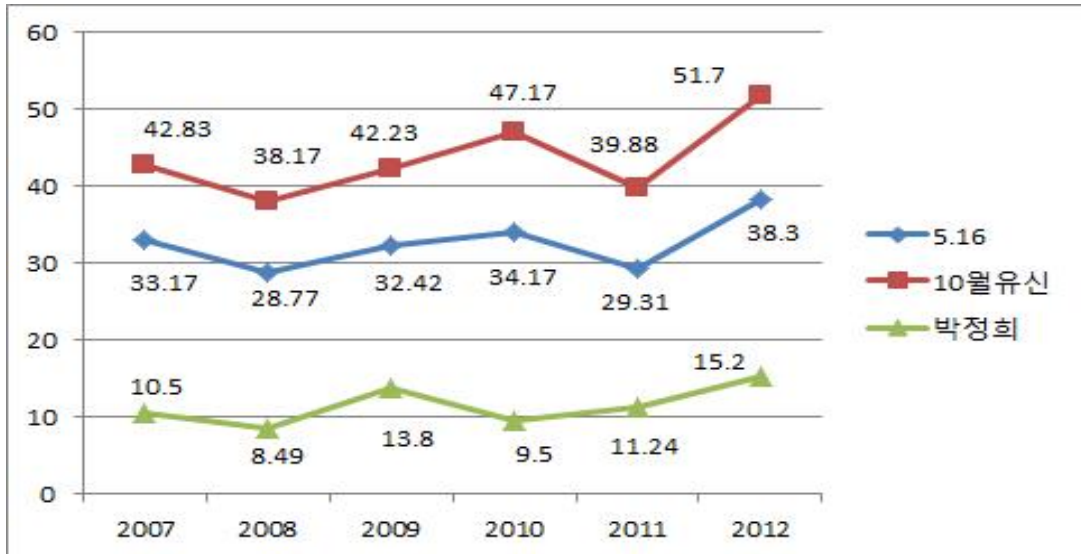


그림 :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



※ 5.16에 대한 역사인식

연령대별 인식 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40.4	42.4	36.0	39.6	40.7	40.4
	30대	47.7	52.3	47.9	46.8	42.3	37.2
	40대	55.1	57.2	53.5	54.1	53.8	45.3
	50대이상	53.4	58.9	51.4	65.7	61.5	47.8
대체로 부정적	20대	33.8	31.97	33.7	36.0	30.2	38.0
	30대	34.1	26.49	29.7	36.2	32.0	41.1
	40대	33.4	31.61	36.4	34.8	32.9	38.1
	50대이상	31.2	24.83	29.8	29.3	23.2	36.5
잘 모름	20대	25.8	25.65	30.4	24.4	29.1	21.6
	30대	18.2	21.19	22.4	17.0	25.8	21.6
	40대	11.5	11.21	10.2	11.2	13.4	16.6
	50대이상	15.4	16.33	18.8	5.0	15.4	15.7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변화

		정치적 성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48.2	51.9	46.15	53.77	46.41	36.3
	중도		45.6	55.6	46.64	48.8	50.26	44.3
	보수		56.3	49.9	48.92	52.49	55.17	48.4
대체로 부정적	진보		38.9	35.0	38.46	34.42	37.13	49.7
	중도		34.0	24.0	31.15	32.72	25.82	36.4
	보수		26.3	31.7	29.1	36.78	27.24	29.2
잘 모름	진보		12.9	13.2	15.38	11.81	16.47	14.0
	중도		20.4	20.4	22.2	18.48	23.92	19.3
	보수		17.4	18.5	21.98	10.73	17.59	22.4

### 지역에 따른 인식 변화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47.0	55.3	50.4	50.9	48.4	45.6
	중부권		50.9	50.8	52.5	58.5	53.0	31.9
	호남권		39.5	50.0	37.8	54.6	40.5	31.3
	영남권		57.9	50.9	43.8	49.7	57.4	48.1
	강원		41.7	63.9	44.4	52.8	48.6	36.1
	제주		15.4	35.7	23.1	7.7	46.2	30.8
부정적	수도권		33.3	27.0	31.2	35.8	30.3	35.4
	중부권		32.2	32.0	28.0	22.0	23.9	39.7
	호남권		41.2	30.8	35.3	32.8	30.2	58.3
	영남권		27.6	30.6	34.3	36.4	29.7	36.2
	강원		47.2	25.0	33.3	25.0	20.0	36.1
	제주		61.5	21.4	53.9	53.9	38.5	46.2
잘모름	수도권		19.6	17.7	18.4	13.4	21.3	19.1
	중부권		17.0	17.2	19.5	19.5	23.1	28.4
	호남권		19.3	19.2	26.9	12.6	29.3	10.4
	영남권		14.6	18.5	21.9	13.9	12.9	15.7
	강원		11.1	11.1	22.2	22.2	31.4	27.8
	제주		23.1	42.9	23.1	38.5	15.4	23.1

※ 10월유신에 대한 역사인식

연령대별 인식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27.2	31.6	27.7	28.4	27.5	27.5
	30대	36.0	41.1	38.7	30.5	31.3	25.5
	40대	40.0	41.7	35.4	37.1	39.4	28.7
	50대	33.3	42.2	37.2	41.4	39.1	24.4
부정적	20대	36.8	37.2	36.3	41.6	34.5	45.1
	30대	43.6	33.1	39.9	47.8	38.1	49.3
	40대	46.6	42.2	49.2	50.2	44.6	53.7
	50대	44.4	39.5	43.6	49.3	41.2	56.7
잘모름	20대	36.1	31.2	36.0	30.0	38.0	27.5
	30대	20.4	25.8	21.4	21.8	30.6	25.2
	40대	13.4	16.1	15.4	12.8	16.0	17.6
	50대	22.2	18.4	19.2	9.3	19.7	18.8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변화

정치적 성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38.9	39.1	33.4	32.9	30.5	25.0
	중도	30.5	42.7	36.3	34.2	36.2	26.1
	보수	35.8	34.0	33.1	36.0	36.9	28.8
부정적	진보	43.9	45.0	49.2	49.5	50.3	58.5
	중도	42.6	32.4	39.2	44.2	33.5	50.3
	보수	42.5	42.2	41.2	49.8	40.7	47.0
잘모름	진보	17.2	15.9	17.4	17.6	19.2	16.5
	중도	26.9	24.9	24.4	21.6	30.3	23.7
	보수	21.7	23.8	25.7	14.2	22.4	24.2

### 지역별 유신에 대한 평가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32.2	46.3	34.7	30.9	33.1	27.1
	중부권	33.1	30.5	37.3	38.1	40.2	17.2
	호남권	36.1	35.4	31.1	50.4	35.3	27.0
	영남권	40.6	34.2	35.8	33.6	35.8	29.2
	강원	16.7	30.6	36.1	36.1	37.1	25.0
	제주	7.7	21.4	15.4	7.7	30.8	7.7
부정적	수도권	43.5	32.5	44.5	51.7	38.7	49.3
	중부권	44.9	49.2	40.7	39.0	34.2	50.0
	호남권	43.7	40.8	37.8	29.4	32.8	59.1
	영남권	39.6	42.7	40.4	49.1	48.7	55.1
	강원	41.7	36.1	36.1	38.9	22.9	44.4
	제주	69.2	42.9	53.9	53.9	46.2	53.8
잘모름	수도권	24.4	21.2	20.7	17.5	28.2	23.5
	중부권	22.0	20.3	22.0	22.9	25.6	32.8
	호남권	20.2	23.9	31.1	20.2	31.9	13.9
	영남권	19.8	23.0	23.8	17.3	15.5	15.7
	강원	41.7	33.3	27.8	25.0	40.0	30.6
	제주	23.1	35.7	30.8	38.5	23.1	38.5

###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인식

#### 연령대별 인식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74.8	68.8	62.1	72.0	66.3	65.1
	30대	85.4	88.1	81.8	81.7	78.7	71.6
	40대	90.8	92.5	85.9	92.1	86.6	85.3
	50대	92.5	94.6	90.4	95.7	93.0	86.8
부정적	20대	17.2	15.6	24.8	16.2	19.0	23.9
	30대	10.8	9.6	11.5	11.2	10.7	18.1
	40대	7.2	6.0	11.2	6.6	11.4	12.1
	50대	6.5	3.7	7.5	3.6	5.8	9.3
잘모름	20대	8.0	15.6	13.2	11.9	14.7	11.0
	30대	3.8	2.3	6.7	7.1	10.7	10.3
	40대	2.0	1.4	3.0	1.3	2.0	2.6
	50대	1.1	1.7	2.1	0.7	1.2	3.9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변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81.5	80.3	73.9	80.2	77.3	67.1
	중도	87.0	86.8	78.8	86.5	82.0	78.5
	보수	87.5	91.8	87.3	90.0	88.3	90.7
부정적	진보	16.8	15.9	21.1	13.8	19.2	27.7
	중도	9.0	7.2	13.4	7.8	8.2	13.0
	보수	7.3	4.4	7.7	6.5	8.3	5.0
잘모름	진보	1.7	3.8	5.0	6.0	3.6	5.2
	중도	4.1	6.0	7.8	5.7	9.9	8.5
	보수	5.2	3.8	5.0	3.5	3.5	4.3

### 지역에 따른 인식변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84.3	84.5	78.3	84.6	81.2	76.6
	중부권	89.0	95.3	85.6	83.9	72.7	82.0
	호남권	80.7	82.3	68.9	82.4	70.7	56.5
	영남권	89.8	89.1	84.0	87.4	91.0	89.4
	강원	91.7	86.1	91.7	88.9	88.6	61.1
	제주	53.9	78.6	69.2	84.6	92.3	84.6
부정적	수도권	11.7	9.0	16.4	10.5	12.3	15.1
	중부권	8.5	1.6	9.3	11.9	17.1	10.3
	호남권	17.7	14.6	24.4	13.5	18.1	40.0
	영남권	6.5	7.6	7.1	5.9	5.8	6.7
	강원	5.6	11.1	5.6	5.6	2.9	25.0
	제주	23.1	7.1	30.8	7.7	0.0	15.4
긍정적	수도권	4.1	6.4	5.4	4.9	6.6	8.2
	중부권	2.5	3.1	5.1	4.2	10.3	6.9
	호남권	1.7	3.1	6.7	4.2	11.2	3.5
	영남권	3.7	3.3	9.0	6.8	3.2	3.8
	강원	2.8	2.8	2.8	5.6	8.6	13.9
	제주	23.1	14.3	0.0	7.7	7.7	0.0

※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평가

그림 :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평가 (%)

